

1995년 9월 15일

1	1995년 9월 15일	1
2	1995년 9월 15일	2
3	1995년 9월 15일	3
4	1995년 9월 15일	4
5	1995년 9월 15일	5
6	1995년 9월 15일	6
7	1995년 9월 15일	7
8	1995년 9월 15일	8
9	1995년 9월 15일	9
10	1995년 9월 15일	10
11	1995년 9월 15일	11
12	1995년 9월 15일	12
13	1995년 9월 15일	13
14	1995년 9월 15일	14
15	1995년 9월 15일	15
16	1995년 9월 15일	16
17	1995년 9월 15일	17
18	1995년 9월 15일	18
19	1995년 9월 15일	19
20	1995년 9월 15일	20
21	1995년 9월 15일	21
22	1995년 9월 15일	22
23	1995년 9월 15일	23
24	1995년 9월 15일	24
25	1995년 9월 15일	25
26	1995년 9월 15일	26
27	1995년 9월 15일	27
28	1995년 9월 15일	28
29	1995년 9월 15일	29
30	1995년 9월 15일	30
31	1995년 9월 15일	31
32	1995년 9월 15일	32
33	1995년 9월 15일	33
34	1995년 9월 15일	34
35	1995년 9월 15일	35
36	1995년 9월 15일	36
37	1995년 9월 15일	37
38	1995년 9월 15일	38
39	1995년 9월 15일	39
40	1995년 9월 15일	40
41	1995년 9월 15일	41
42	1995년 9월 15일	42
43	1995년 9월 15일	43
44	1995년 9월 15일	44
45	1995년 9월 15일	45
46	1995년 9월 15일	46
47	1995년 9월 15일	47
48	1995년 9월 15일	48
49	1995년 9월 15일	49
50	1995년 9월 15일	50
51	1995년 9월 15일	51
52	1995년 9월 15일	52
53	1995년 9월 15일	53
54	1995년 9월 15일	54
55	1995년 9월 15일	55
56	1995년 9월 15일	56
57	1995년 9월 15일	57
58	1995년 9월 15일	58
59	1995년 9월 15일	59
60	1995년 9월 15일	60
61	1995년 9월 15일	61
62	1995년 9월 15일	62
63	1995년 9월 15일	63
64	1995년 9월 15일	64
65	1995년 9월 15일	65
66	1995년 9월 15일	66
67	1995년 9월 15일	67
68	1995년 9월 15일	68
69	1995년 9월 15일	69
70	1995년 9월 15일	70
71	1995년 9월 15일	71
72	1995년 9월 15일	72
73	1995년 9월 15일	73
74	1995년 9월 15일	74
75	1995년 9월 15일	75
76	1995년 9월 15일	76
77	1995년 9월 15일	77
78	1995년 9월 15일	78
79	1995년 9월 15일	79
80	1995년 9월 15일	80
81	1995년 9월 15일	81
82	1995년 9월 15일	82
83	1995년 9월 15일	83
84	1995년 9월 15일	84
85	1995년 9월 15일	85
86	1995년 9월 15일	86
87	1995년 9월 15일	87
88	1995년 9월 15일	88
89	1995년 9월 15일	89
90	1995년 9월 15일	90
91	1995년 9월 15일	91
92	1995년 9월 15일	92
93	1995년 9월 15일	93
94	1995년 9월 15일	94
95	1995년 9월 15일	95
96	1995년 9월 15일	96
97	1995년 9월 15일	97
98	1995년 9월 15일	98
99	1995년 9월 15일	99
100	1995년 9월 15일	100

# 인권하루소식

## 95년 9월

(제477호 - 제495호)

<이달의 주제-불처벌>

범죄자에 의해 향유되는 '불처벌'은 동일한 범죄의 반복을 고무한다. 동시에 고통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회복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양보할 수 없는 권리이다.

<박원순 변호사의 글에서 재인용>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 “저예요 어머니”

### 김선명씨 45년만에 어머니 만나

지난 15일 출소한 김선명씨가 94세 어머니와 눈물 어린 상봉을 했다. 8월31일 오후7시경 김선명씨는 신촌의 모병원에서 50년 6월 전 쟁동에 헤어졌던 어머니를 45년만에 일찍안았다.

이날 자리에 함께 했던 민가협 총무 남규선씨에 따르면 김씨의 어머니는 김씨를 보는 순간 “이게 선명이나”라고 했다. 이어 김씨는 “저예요 어머니”라고 응답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엄마 말 안듣으니까 고생하지”라며 손을 잡았다. 김씨는 “제가 있으니 이제 아버지 제사 드려요. 어머니님 오래 사세요”라고 말했다. 이들의 만남은 40여분동안 이루어졌으며 시종 눈물이 어린 두사람 뿐 아니라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도 계속 울었다.

두 사람의 상봉이 있기까지 가족들의 마음 고생은 컸다. 가족들에 따르면 며칠전 김씨 어머니가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개가 왔지... 그냥 갔지”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가족들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과 한번쯤 만나야 한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가족들은 종종 어머니에게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죽었는데 어디 있냐. 만나러 가

야지”라고 말했다. 가족들이 마음을 결정에는 송경용 신부(성공회, 봉천동 나눔의 집)의 지속적인 설득이 있었다. 송신부는 가족들이 언론에 대한 피해의식이 커서 모자상봉을 꺼려했으나 지속적인 설득으로 마음이 움직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모자상봉을 지켜본 민가협 총무 남규선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울먹였다.

김선명씨는 지난 8월15일 8.15사면복권매 행집행정지로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현재 김씨는 출소장기수의 집인 만남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

### 5.18 불기소 항의 교사들도 나서

5.18 책임자 불기소 처분에 항의하는 교수들의 성명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초·중·고의 현직 교사들이 성명을 발표했다. 30일 전남 22개 시군 지역의 초·중·고 1백98개교 4백7명의 교사들은 ‘전남교사 선언인 일동’ 명의로 성명을 발표, △5.18 피고소인 불기소 처분 취소 △12.12. 쿠데타 채수사 △내란주동자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교과서에 광주민주화운동 수록 △전남 교육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들 교사들은 당국의 탄압

을 우려, 서명 교사들의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들 외에도 광주, 충남지역 등의 현직교사들도 5.18 관련 성명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속적인 교사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한편, 광주 5.18 공대위는 2일, 3차 시민대회를 광주 도청앞에서 갖기로 했으며, 5.18 국민위원회는 서울에서 오는 16일, 제4차 국민대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올해 하반기에 5.18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의 파고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변형근로시간제 반대” 민주노총 성명

최근 정부가 ‘중소사업자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에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 파견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노총(준)은 8월31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준)은 “정부의 방침으로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진행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변형근로시간제는 사용주가 주44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노동자의 일일 노동시간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주44시간, 일일8시간 노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자가 8시간 이외에 해당하는 잔업을 할 경우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변형근로시간제가 시행되면 주44시간의 한도에서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해도 추가근로수당이 없다. 근로자파견제는 사용주가 용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금도 암암리에 근로자파견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용역업체는 소속 노동자의 임금에서 30-50%를 관리금 명목으로 거두어들인다. 집단해고제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를 집단해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준)은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수당이 없어지고 노동자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근로자파견제가 도입되면 용역업체가 중간에 가로채는 돈이 합법화되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이 낮아진다”고 우려했다.

### 오는 7일, <인권하루소식> 창간 2주년!

<인권하루소식>을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창간 2주년을 맞아 <인권하루소식>에 해주실 증거나 격려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는 6일 오전까지 팩스 02-715-9186이나 컴퓨터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료는 지로이용  
7618848

### 김문기씨 사면복권 뒤 '민주총장' 해임 상지대, 학생·교수 강력 반발

민주총장이 들어선지 두 달, 재단이사회가 총장에 대한 해임을 결의해 상지대가 다시 소송돌이에 휘말리고 있다(관련기사 아래 표). 「상지대 임시재단이사회」(이사장 이춘근)는 30일 오후 재단이사장실에서 징계위원회(교수4, 이사3)를 열어 김찬국(68) 총장과 임희진(51, 전 사무처장) 교수에 대한 해임을 결의했다. 징계위원회는 김총장이 교육부의 감사에서 지도감독의 책임을 물어 징계계를 요청한 것과 학생들을 선동하여 이사회 개회를 방해하고, 교육부 면담을 통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 8개항의 사유를 들었다. 이번 학생들과 교수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지난 15일 정부의 사면조치로 사면복권된 김문기 전 재단이사장이 개입되었으며, 김 전 이사장이 재단에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사회가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전 이사장의 측근 교수들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김문기씨 재산 환수는 도외시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재단 재산을 내는 점에서 이사회 성격이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다.

이주엽(28) 부총학생회장은 "재단의 온갖 비리와 비정상적인 학사운영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 임시재단 이사회가 학교 전 구성원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총장을 해임한 것은 이사회가 김문기씨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김연명(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평교수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총장을 징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상지대의 과거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현 이사회에 의해 은근된 탓이다.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상지대 총학생회는 31일 즉각 재단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규탄집회를 열었으며, 교수협의회도 이에 대한 대책을 의논하고 있다. 학생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반개혁신적인 이사회 전면 개편 △김문기 전 재단이사장의 재집권 음모 분쇄 △상지대를 도립대학으로 만들 것 등을 결의했다.

#### <상지대 사태의 배경>

대표적인 족벌체제로 유명한 상지대에서 학원 자주화 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92년부터다. 92년9월1일 교수협의회 소속 박정원(경제학과)교수가 계약용에서 탈락한 사건을 계기로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가 부당 징계 철회, 재단비리철폐 등을 요구하며 기나긴 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92년 11월18일 학생 2천명, 교수 1백명이 '상지학원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본관 점거투쟁 돌입, 몇차례에 걸친 상경투쟁등을 전개하면서 상지대 재단의 비리를 폭로하고, 이를 여론화 하는데 성공하게 되었다. 이후 김영삼 정권의 등장 이후 여론을 의식해 김문기 전 이사장은 93년 3월말 재단 비리와 땅투기 등의 혐의로 전격 구속된다. 이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관선이사 7명을 파견하였으나, 이들은 학내비리철폐를 요구하는 교수협과 총학생회측과 사사건건 충돌하게 되었다. 이에 교수협과 총학생회측은 대다수 교수와 학생의 서명을 받아 93년 8월30일 김찬국 전 연세대 부총장을 총장으로 영입하게 된다. 이후 전 이사장 김문기씨는 재단재산을 되찾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 결심공판을 남겨놓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여 재단비리와 관련된 3명의 교수들에 대한 징계계를 요구했고, 김총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재단이사회 징계위원회는 교육부의 요구와는 반대로 재단비리 관련 교수에 대해서는 정적 3개월씩의 징계계를, 김총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결의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

#### ○ 행사와 동정 ○

##### <행 사>

- 5.18 광주특별법 제정을 위한 3차 시민대회
  - 일시:9월2일(토) 오후4시
  - 장소:광주 도청앞 광장
  - 주최:5.18 국민위(☎062-225-8117)
- 초청토론회-21세기 정치발전 방향
  - 일시:9월2일(토) 오후3시30분
  - 장소: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
  - 강사:김대중(새정치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장)
  - 주최:청년네트워크 21(☎ 717-4741)
- 민가협 수련회
  - 일시:9월2일(토)-3일(일)
  - 장소:충북 보은 동양일보 수련관
  - 참가대상:양심수 가족, 후원회원
  - 참가비:2만5천원
  - 출발:2일 오전10시, 오후3시30분
  - 문의:763-2606
- 외국인노동자 수련회
  - 일시:9월8일(금)-10일(일)
  - 장소:경기도 안양수련관
  - 출발:8일 오전11시
  - 문의:회년선교회(☎ 858-7829)

##### <동 정>

- 조용환(36)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국제인권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 「전해투」는 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고노동자들의 투쟁기금마련을 위한 추석선물을 판매한다. 판매물품과 가격은 다음과 같다.
  - 우리밀 과자:내용물-전립오곡과자, 두부과자, 들깨과자, 두부땅콩샌드, 우리밀비스켓. 가격:1만1천원
  - 무공해 세제:내용물-가루비누, 세탁비누, 주방세제. 가격:1만원
  - 지리산 화개골 수제녹차:내용물-1인당기 2개, 곡우. 가격:3만2천원
 자세한 문의는 784-6037/8
- 「원주민추진회」가 사무실을 이전했다. 새주소: 원주시 중앙동 235-114 3층, 전화번호: 0371-731-1364.
- 「외국인노동자피난처」의 김재오소장이 중국인노동자 조사를 위해 지난 23일 출국했다. 김씨는 9월10일 까지 중국에서 조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 <이달의 주제-불처벌>

범죄자에 의해 향유되는 '불처벌'은 동일한 범죄의 반복을 고무한다. 동시에 고통받은 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회복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양보할 수 없는 권리이다.  
<박원순 변호사의 글에서 재인용>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 “민간단체 국가이미지 손상시킨다”

### 세추위, 민간 국제연대활동에 왜곡된 시각 보여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민간단체들의 국제연대활동에 대해 국가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음이 드러나 민간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세계화추진위원회」(세추위, 공동위원장 김진형 등)는 8월3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8월중 세계화추진과제」란 보고서 중 「국가이미지 개선방안」을 포함해 제출했다.

세추위는 보고서에서 “국내 민간단체들이 국제인권회의등 「NGO활동」에 참석하여 우리의 실황을 편향되게 소개함으로써 국가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외국인들은 우리의 특수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이들의 일방적인 설명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용환 변호사(36, 민변 국제인권위원장)는 “국가 이미지 손상의 책임을 국민과 민간단체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라며 “이는 세추위의 사실인식 능력이 수준이하일뿐 아니라 부도덕하고 무책임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조변호사는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민간단체들이 한 일은 김선명씨가 42년간 감옥에 있다는 것과 그 감옥은 1평도 못되는 독방이라는 것,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석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였을 뿐”이라고 밝혔

다. 그는 진실이 편향된 것이라면 편향되지 않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정부는 국제회의에서 수준이하의 거짓말로 오히려 나라방신을 시킨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비난했다.

조변호사는 유엔 인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등이 한국의 법과 제도가 인권을 탄압하고 부당한 것임을 여러 차례 지적, 개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덧붙여 그는 “국제사회의 정당한 지적을 귀담아 듣기는 커녕 눈과 귀를 닫고 진실을 외면한다면 국가의 이미지와 정권의 체통은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훈(34, 인권협 국제연대간사)씨도 “진정한 세계화는 인권, 평화 등 보편적 가치의 확대를 의미한다. 세추위는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으면서 국가의 체면이나 이미지만을 걱정하고 있다. 결국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경쟁력에 인권을 중속시키고 있다. 이것은 거꾸로 된 세계화”라고 꼬집었다.

보고서 중 「국가이미지개선방안」은 총19쪽으로 한국의 국가이미지 실상과 문제점, 국가이미지 개선 추진과제 등을 분석해 놓고 있다.

#### 박장로 심장질환 가능성 정밀진단 절실

지난 7월, 북한방문을 이유로 구속된 박용길(76)장소가 구속 당시부터 지금까지 심장에 이상을 보여 가족들이 정밀진단을 요구하고 있다. 박장로를 진료한 삼성의료원 순환기내과 홍경표의사는 박장로의 심전도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일 가능성이 높아 정밀검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인권운동 활동가를 위한 인권운동사랑방 제2기 공개강좌

- ▶ 기간: 1995.9.16.-12.16(12주)
-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1시
-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 ▶ 대상: 인권문제에 관심있는 모든 이
- ▶ 수강료: 모든 강좌 3만원, 1강좌당 5천원
- ▶ 문의: ☎ 715-9185(담당 김수경)

날짜	강의주제	강사
1회 9.16	세계의 사형제도	고은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부위원장)
2회 9.23	장애인 고용문제와 현황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기획실장)
3회 9.30	여성문제 -아내구타, 성폭력	한국여성의 전화
4회 10.7	북경여성대회 보고 및 평가	이상덕 (한국NGO위원회 총무)
5회 10.21	판례를 중심으로 본 국가보안법	이석연(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6회 10.28	한국노동문제의 유형과 내용(총론)	허종강(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7회 11.4	*(각론)	
8회 11.11	동성애자의 인권	서동진 ('친구사이' 회장)
9회 11.18	여성관련 국제조약	신혜수(한국여성의 전화 회장)
10회 12.2	보안관찰법	미정
11회 12.9	행려자의 인권	
12회 12.16	변화하는 세계질서와 한국, 그리고 나	

<자료-발췌>

5.18 학살 주동자 구속 기소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남교사선언(1차)

이미 김영삼 대통령도 현 정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다고 언급한 바 있듯이 비록 5, 6공의 기반에 기대어 대통령이 됐다하더라도 12.12 사태와 5.18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시시비비를 가려 과거 군사정권과의 과감한 결별을 선언하고, 5.18 문제의 해결을 통해 문명정부다운 위상과 면모를 갖춰, 나라의 헌법질서를 바로잡고 역사의 진실과 정의의 힘을 명확히 보여주길 기대했다. 그러나, 5.18 피고소인들에 대한 내란죄를 인정하면서도 '공소권 없음'이란 해괴한 논리를 들어 가해자들에게는 면죄부를 부여하고, 피해자인 국민에게만 덮어 놓고 대화합과 화해를 하자는 역설은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날로 사고력이 신장되고 있는 학생들에게 사회의 기본질서 유지와 국민 공동생활의 원리 및 국가관과 가치관 나아가 인격형성과 생활을 지도해야 할 교사로서 오늘의 국헌 문란 행위에 당혹함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5.18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이 이 지역 교육자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나라와 겨레의 역사를 올바르게 잡아 이를 계승, 보존하며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의 아이들을 향한 최소한의 투자로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과거의 위정자들이나 일부 힘의 논리에 의해 진실이 땅 속 깊이 숨겨지고 역사가 왜곡되어지는 오늘의 현실을 묵과할 수만은 없다.

1995.8.30. 전남교사선언인 일동

장애인 분리정책 반대 공동 노력 다짐

한·일 장애인, 공동선언문 발표

<편집자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주선으로 한국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일본의 「장애인차별과 싸우는 공동체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한·일 장애인 국제교류대회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지난 8월31일 폐막했다. 이에 공동선언문을 전제한다.

1. 한·일 양국 장애인은 자국의 장애인 문제를 알리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서로 논의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구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노력한다.
2. 장애인의 생존과 평등한 보장을 위해 우리는 장애인문제를 인권문제로서 인식하고 공동의 문제를 풀어나간다.
3. 일반인과의 분리에 기초를 둔 장애인정책을 절대 반대하고, 양국 정부 및 의회에 통합정책 실현을 요구한다.
4. 해방과 분단 50년을 맞이하여 재차 군국주의 부활을 막고, 군사비를 삭감하여 평화와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5.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 중 3년째를 맞이하여 우리는 장애인 운동의 동지로서 풀뿌리 교류를 충실히 확대하여 간다.

1995.8.31. 제1회 한·일 장애인국제교류대회 참석자 일동

노동자 권리 인정해야 이랜드노조자문위 토론회

「이랜드노동조합 자문위원회」(김경남 목사 등 30명)는 31일 오후3시 기독교회관에서 이랜드의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토론회 「한국의 기독교기업, 얼마나 기독교적인가?」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이랜드 노사관계 해결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지켜 기독교윤리에 입각한 법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이랜드노조 사무국장 배계석씨는 "회사측은 노동조합에 대해 '하나라의 방법이 아니다'는 말로 대화를 피하는 등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랜드는 기독교 기업보다 기독교 자본이라 불려야 하고, 노동자 권리라는 상호 대립을 인정한 새로운 노사관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구독료는 무료이음 7618848

◇ 인권간행물 ◇

□ 『참여사회』 95년 7/8월호-참여연대(☎ 796-8364) · 주요내용:대학 개혁의 길 찾기/시민사회와 시민문화/미군은 치외법권인가?/지방선거, 무엇을 남겼나? 등. 112쪽. 값 3천원.

□ 『주간 전국연합통신』 66호-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747-4364) · 주요내용:통일운동의 원칙과 방도/끝내 5.18을 외면하는 언론 등. 52쪽.

□ <자료집> 한국의 기독교 기업, 얼마나 기독교적인가?-이랜드노동조합 자문위원회(☎ 323-0456 05555) · 주요내용:이랜드 신학적 성장과 노동자 권리/노사관계 전략으로서의 기업문화/노동관계법을 통해 본 이랜드의 노동환경과 노사관 등 36쪽.

□ 한국어성NGO보고서-한국어성NGO위원회(☎ 274-2883) · 주요내용:정치 및 결정과정의 참여/여성장애인의 완전참여와 동등한 권리실현/지속가능한 인간안보를 위하여 등. 113쪽.

□ <자료집> 노동청년운동, 현황·역사·전망-노동청년회 등(☎ 635-8034) · 주요내용:노동청년운동의 개괄적 현황보고/청년운동의 역사와 역사적 임무/노동청년운동의 방향성과 조직전망 등. 90쪽.

□ 『산재노동자소식』 8월호-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등. (☎ 868-2379) · 주요내용:한국의 산업재해 현실과 산재추방운동/일본에서 열린 한·일 파로사 세미나에 참석하여/산재환자의식 설문조사 등. 52쪽.

□ 『기사연소식』 14호-기사연(☎ 312-3317) · 주요내용:정치발전과 시민사회의 과제/통일시대, 통일방안:쟁점과 대안/권위주의적 노동정책과 경제개혁의 동요/쌀지원으로 물고 트는 남북관계 등. 96쪽.

□ 『노동과 진보』 21호-진보정당추진위(☎ 323-4963) · 주요내용:지역감정과 정치발전/한반도 정세변화와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정부 교육개혁안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건강은 시민의 권리 등. 64쪽.

□ 『포럼2001』 창간호-포럼2001(☎ 747-8898) · 주요내용:21세기를 향한 민족민주운동의 과제(정대화)/지역운동의 현황과 과제(박홍순) 등. 77쪽.

<이달의 주제-불처벌>

범죄자에 의해 향유되는 '불처벌'은 동일한 범죄의 반복을 고무한다... 동시에 고통받은 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회복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양보할 수 없는 권리이다. <박원순 변호사의 글에서 재인용>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장애노점상 생존권 보장 요구 노점상 구속, 경찰폭행 규탄 집회

「장애인 노점상 탄압 및 고문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박홍수, 공대위) 회원 1백50여명은 4일 오후1시 명동성당에서 지난달 8월26일에 발생한 청계천 장애인 노점상 구속과 고문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장애인 노점상 구속은 생계 의욕을 가지고 살아보려는 장애인들의 의지를 꺾는

만행"이라며 "장애인 노점상이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고 권리를 찾을 때까지 싸울 것"을 결의했다.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구속중인 박영생, 김종상, 박광현 씨에게 폭행을 가한 책임자 처벌과 구속자석방, 장애인 노점상 탄압 중지, 민중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중구청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로 구속된 박영생(26)씨등 5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4일 열렸으나, 재판부는 모두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심결정 항고 기각 신귀영씨 일가 간첩사건

부산 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공원 부장판사)는 8월24일 신귀영씨 일가 간첩사건에 대한 부산지법의 재심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결정에서 인정된 신수영(신귀영씨의 친형, 일본 거주)씨 등의 진술서등이 새로운 증거이고, 이는 피고인들이 피검당시 진술한 증거보다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 원심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재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서태수씨 간첩활동 안해 박창희 교수 재판 증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박창희(63, 한국의대 사학과) 교수에 대한 증인심문을 4일 형사지법 311호에서 가졌다.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박교수의 친형 박권희(69, 우에노병원원장 일본거주)씨는 "8월초 일본에서 서태수를 만나 그가 간첩으로 공작활동을 한 사실없다는 점과 박창희 교수가 썼다고 하는 김일성 애도문과 김정일 축하문을 받아 북한에 보낸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교수가 서태수 씨를 통해 북한과 연락하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성정치' 공개강좌 마련 연세대총학생회, 제2대학

「연세대총학생회」가 마련한 제2대학은 '성, 정치 그리고 성정치'라는 주제로 공개강좌를 갖는다. 총학생회는 "성을 둘러싼 억압과 차별의 권력관계를 비판하고 대안을 찾는 의미에서 강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컴퓨터', 회장인 서동진씨가 총 6강좌를 강의하며 '동성애의 해방운동과 성정치'란 주제도 다룬다. 기간은 9월14일-11월2일까지이다. 문의 361-3641

대전철도노동자 서진근씨 분신사망

4일 오전7시30분 대전 철도공작창 사내 복지회관 앞에서 대전철도 공작창 선로 용품지부 서진근(38)씨가 분신, 근처 중앙병원으로 옮겼으나 오후1시 사망했다.

서씨의 분신이유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항의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확한 분신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민주노동준비위등 이 지역의 노동·재야단체들은 4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씨의 분신사망사건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대전철도노동자 서진근씨 분신사망

4일 오전7시30분 대전 철도공작창 사내 복지회관 앞에서 대전철도 공작창 선로 용품지부 서진근(38)씨가 분신, 근처 중앙병원으로 옮겼으나 오후1시 사망했다.

서씨의 분신이유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항의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확한 분신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민주노동준비위등 이 지역의 노동·재야단체들은 4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씨의 분신사망사건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오는 7일, <인권하루소식> 창간 2주년!

<인권하루소식>을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창간 2주년을 맞아 <인권하루소식>에 해주실 충고나 격려의 말씀을 바랍니다. 오는 6일 오전까지 팩스 02-715-9186이나 컴퓨터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로 보내주시시오. 보내주신 귀중한 말씀은 7일자에 실겠습니다.

인권피해자들의 주석 ①

유가족 무덤 하나 가슴에 안고

<편집자주> 추석, 헤어져 살던 이들이 고향에 모여 못 다한 정을 나누는 민족의 대표적인 명절이다. 즐거워야 할 이런 날, 보다 괴롭게 맞아야 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고아원, 양로원에 있는 이들만이 아니다. 양심수와 그 가족들, 수배자들, 몇십년째 감옥에서 추석을 맞아야 하는 장기수들, 이국 땅에서 온갖 차별을 당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직장을 지키기 위해 현장농성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 진상규명을 위해 농성장을 지킨 5.18 단체 회원들 등 우리의 추석에는 한이 많이 배어 있다. 이들 인권피해자들의 추석을 <인권하루소식>이 3회에 걸쳐 찾아 나선다.

민주주의, 조국통일, 인권, 이러저러한 신념을 주장하다가 먼저 간 사람들을 열사라고 부른다. 어느 해인가, 장기수 한분이 출소하여 마침 결혼을 하게 되었다. 오랜 고통의 세월을 감내하고 난 뒤 올리는 결혼이라 의미도 깊었고, 따라서, 유가족들도 그 자리에 가서 한없는 축하를 보냈다. 그러나, 유가족들만이 남은 자리에서 그들은 한바탕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내 자식이 죽지만 않았어도 만나 볼 수도 있고, 결혼을 할 나이인데..." 유가족의 설움은 절절히 만나고 싶은 그리움이 있음에도 만날 수 없다는 데 있다. 또, 아들딸들이 목숨과 바꾼 민주주의, 인권의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점차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는 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그들의 한이 커지게 하는 요인이다. 추석, 분명 유가족들에게는 남몰래 눈물지어야 하는 날

이다. 있어야 자리에 있지 않고, 무덤으로 남은 자식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이날은 더욱 괴롭다. 정경식씨는 창원공단의 금성사 노동자였다. 노조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87년 실종되고 말았다. 그는 실종된 근처 불목산에서 떠난 채로 발견되었다. 그의 죽음을 두고 회사와 경찰은 자살로 결론지었지만, 이를 믿을 수 없는 그의 어머니는 8년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뼈를 간직하고 있다. 89년 성남의 한 공장 조위원장으로 재직중 분신한 김윤기씨의 어머니 정정원(56)씨는 "추석 같은 날이 유가족에겐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식 그렇다고 눈물이나 짜고 있으면 다른 이들에게 피해 줄 것 같아 속만 더 상하고요." 이양순(50, 91년 분신한 박승희씨의 어머니)씨도 "우리 요, 늘 가슴에 무덤 하나씩 갖고 사는 거지요. 말해 무엇하겠어요"라고 말한다. 이런 유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남은 이들이 앞서간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목숨과 바꾼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하는 것이다. 박정기(67, 고 박종철 부친) 유가족 회장은 "우리가 바라는 게 뭐 있겠어요, 무덤 하나로 남은 우리 자식들의 뜻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하나 찾아주는 거죠. 그 날이 온다면 우린 어떤 괴로움도 이겨낼 수 있지요." 이들 유가족들은 추석 아침, 차례를 지내고, 자식들의 묘소를 찾아나설 것이다. 유가족들이 바라는 세상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주/간/인/권/호/름

(1995년 8월 28일 - 9월 3일)

- <8월28일> 방글라데시 디카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
- <8월29일> 서울대 교수 2백21명, 5.18불기소 취소 서명/북한, 홍수피해등으로 유엔에 인도적 지원 요구/국제앰네스티, 중국인 16명이 처형됐다고 북경 기자회견서 밝혀/특수공무집행령의 구속된 박영생(전노련 간사)씨 경찰에게 구타당했다고 변호인 접견에서 밝혀/서울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실종자 64명 사망으로 인정/서울경찰청, 전 인천대 총학생회장 등 국보법으로 구속/스리랑카와 타밀반군 전투로 52명 스리랑카 정부군 숨져/필리핀정부, 마르코스의 예치금 인권피해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기로
- <8월30일> 전남지역 초·중·고 현직교사, 5.18 불기소 취소 요구/상지대 임시재단이사회, 김찬국 총장 해임 결의/노동부등, 변형근로시간제·근로자파견제·정리해고제등 입법화 추진/세정경제원, 거액보호자 생계지원비 6만4천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서울연합, '5.18특별법제정과 학살자 처벌을 위한 서울지역 결의대회' 가져/제4차 유엔세계여성대회 NGO포럼 개막
- <8월31일> 김진명씨, 45년만에 어머니 상봉/민주노총(준), 변형근로시간제·근로자파견제·정리해고제 입법화 반대 운동/제1회 한·일장애인 국제교류대회 개막 공동선언문 채택/공보처, 12월부터 장애인 방송 개시하겠다고 밝혀/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 10명 5.18성명 발표/인도 편잡주의 빈트 싱 총리등 13명 폭탄테러로 숨져 30명 부상/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차량폭탄으로 10명 숨지고 15명 부상/국제앰네스티, 북경에서 여성운동가들을 위한 침묵시위
- <9월1일> 영남대, 단국, 국민대 교수 등 2백61명 5.18성명 발표/경청정보안국, 홍석만씨등 '학생사회주의기간대오'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국보법 구속/UNDP 총재 제임스 구스타프 스페드씨, '환경 및 인간개발에 관한 신구상' 강연/NGO한국위원회, 화이러우에서 일본 중군위안부 민간위로금 반대 피켓시위/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라이베리아 6년간의 내전 종식/대만 언론인 30여명 언론인에 대한 테러 종식을 위한 마스크 시위
- <9월2일> 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발표/여성인권위원회, NGO 포럼행사로 '여성에 대한 범죄 세계공청회' 개최
- <9월3일> 프랑스 국영 에르맹페르 항공 소속 여객기 납치, 제네바 공항에 강제 착륙/프랑스, 압력발발 폭탄테러로 4명 부상
- <해설> 김명삼 정권이 반환점을 돌아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현 정권이 집권 후반기에 개혁을 하겠다고 다시금 강조하지만, 벌써부터 그들의 말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정치사회현상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권단체등 민간단체들의 국제연대활동이 국가이미지를 손상케 하는 요인이라고 판단하는 정권에서 인권의 개선에 대한 희망을 어디까지 가질 수 있을까 매우 회의스럽다. 정권이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세삼 강조해 본다.

<이달의 주제-불처벌>  
범죄자에 의해 향유되는 '불처벌'은 동일한 범죄의 반복을 고무한다... 동시에 고통받은 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회복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양보할 수 없는 권리이다.  
<박원순 변호사의 글에서 재인용>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춘천고 최우주군이 던진 고교교육 문제-  
헌법소원 포기, 하이텔 토론 종료

컴퓨터 통신 하이텔 토론방에서 지난 8월초부터 진행된 "최우주군의 학교문제, 따라가 봅시다" 토론이 4일로 종료되었다. 춘천고 1학년 최우주(15)군은 지난 7월22일 하이텔 큰마을(PLAZA)에 "고등학교에서 보충·자율학습을 받게까지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제10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등

에 위배되어 헌법소원하려 한다"며 편지를 올렸다. 최군은 이에 앞서 7월20일 대통령, 교육부장관, 강원도 교육감, 춘천시 교육장 등에게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에서 그는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 "평준화 체계로 시험을 치른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공부할 거란 기대는 입학 5개월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의 학교 생활은 동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전7

시 전에 집을 나가 오후11시가 넘게 돌아오면 그냥 쓰러지고 맙니다. 매우 건강한 편인데도 하루종일 해를 못보고 지내니 운동장에서 어지러워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몸무게는 입학당시보다 5Kg이 줄었습니다. 맞지도 않는 책걸상에 원종일 앉아 있으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립니다. 친구들도 다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분신 이유도 모른 채 화장  
철도노조도 서전근씨 사건 수수방관

4일 분신사망한 대전 철도공작장 서전근(38)씨의 시신이 5일 오후 가족들에 의해 화장되었다. 그러나 서씨가 사망한지 하루만에 화장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고, 분신이유도 부당 인사 조치의에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대전 철도지방본부는 서씨의 분신이유가 인사조치에 대한 항의임을 인정하면 서도 대책이나 보상에 대해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살한 것은 자해행위로 관련조항과 이전사제가 전무해 논의할 수 없다"는

장을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 서씨의 분신을 "아직 보고받지 않았다"며 언급을 회피하고 있고, 가족들도 서둘러 화장을 해 서씨의 분신이유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씨는 86년부터 철도청에서 일해 왔는데 지난 1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대전 공작장에서 재천 화차공장으로 전출되었다. 재천서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살한 것은 자해행위로 관련조항과 이전사제가 전무해 논의할 수 없다"는

시 전에 집을 나가 오후11시가 넘게 돌아오면 그냥 쓰러지고 맙니다. 매우 건강한 편인데도 하루종일 해를 못보고 지내니 운동장에서 어지러워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몸무게는 입학당시보다 5Kg이 줄었습니다. 맞지도 않는 책걸상에 원종일 앉아 있으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립니다. 친구들도 다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글이 하이텔에 오르고 8월3일 토론방(의장 김기협)이 개설되어 중고등학생과 학교 교사 등 올린 글이 총 3백건이나 올라와 최군의 문제의식에 동의를 표했다. 최군의 문제제기에 대해 <강원도민일보>, <중앙일보> 등이 보도했고, 급기야는 MBC TV 시사매거진에서 8월27일 이를 방영기에 이르렀다. 토론실을 개설한 김기협씨는 토론실의 개설의미에 대해서 "피교육자(최군)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했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장 적극적인 길을 택했으며, 교육 당사자로서 절실한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펼쳐놓은 사실성도 돋보인다"며 원론적인 문제를 해명하는 것보다 지극의 교육환경에 놓여있는

학생들의 절실한 문제들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기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후 최군은 학교로부터 자퇴를 강요받았으나, 7월 27일 <중앙일보>에 기사가 실리고 난 다음 학교측은 '농담이었다'고 변명했고, 최군도 이후 이일로 해서 불려다니는 일은 없어졌다고 밝혔다. 8월15일자로 하이텔에 올린 경과보고에 의하면 8월13일, 춘천고에서는 학생들에게 보충·자율 학습 희망자를 조사하면서 2학기에는 몇시간 하고 싶은지를 부모님의 동의와 함께 적어 오라고 하겠다고 한다. 보충수업을 받지 않겠다면 자퇴해야 하는 분위기가 최군의 문제제기로 일정정도 부드러워진 것이다. 그는 "많은 자료를 수집한 결과 현행 교육제도, 즉, 법률이나 명령, 조례에는 위헌의 소지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혹,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헌임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하겠다던 계획을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토론은 종료되었고, 최군은 헌법소원을 포기했지만, 그가 제기한 문제는 어느 하나 해결되지 않고 교육현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교육개혁은 바로 교육현장의 절실한 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내일 7일, <인권하루소식> 창간 2주년!  
<인권하루소식>을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창간 2주년을 맞아 <인권하루소식>에 해주실 충고나 격려의 말씀을 바랍니다. 오는 6일 오전까지 팩스 02-715-9186이나 컴퓨터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로 보내주시시오. 보내주신 귀중한 말씀은 7일자에 실렸습니다.

인권피해자들의 추석 ②

50일째 농성-명동성당 5.18 농성자들

추석을 이틀 앞둔 명동성당은 행 앞, 선물꾸러미를 가득 든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는 가운데 30여명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50m 가량 줄을 길게 늘여 서 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다가가보니 뜻밖의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희생당했던 광주 시민들의 사진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바로 옆 모회사 맥주 시음대회에는 단 한명의 사람도 보이지 않아 요즘 유행하는 말로 썰렁한 분위기였다.

결에서 사진을 보고 있으니 예닐곱살로 보이는 한 꼬마와 그의 어머니인듯한 여자가 나누는 얘기를 몰래 엿들었다. 사진을 올려다 보며 꼬마가 엄마에게 묻는다. "엄마 이게 무슨 사진이야" "무슨 사진같니" "6.25 때 죽은 사람들 사진이야" "아니. 네가 태어나기도 전인 80년도에 정권을 잡으려고 전두환·노태우 일당이 광주시민을 죽인 사진이란다" "정말 나쁜 사람이네" "그런데 검찰이 나쁜 사람들에게 죄없다고 결정했다" "나쁜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해" 라고.

이들의 얘기를 들으며 명절에도 아랑곳없이 역사를 지키는 파수꾼들이 생각났다. 광주에서 상경한 이들은 돌아갈 고향과 반겨줄 친척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곳곳이 서울 명동성당 농성장을 지키고 있었다. 충혈된 눈과 검게 그을린 얼굴에서 지난 여름 이들이 얼마나 힘겨운 투쟁을 해왔는가를 느낄 수 있었다.

6일로 5.18진상규명 명동성당 농성은 50일째를 맞이한다. 이들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에도 아랑곳없이 특

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병을(5.18부상자회 사무국장, 40)씨는 "국민들의 진심어린 호응으로 48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명절인데도 왜 집에 내려가지 않는다는 질문에 "나라고 왜 고향에 내려가고 싶지 않겠느냐! 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고자 서울에 남았다. 국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우리에겐 소중한데"라고 밝혔다. 그는 "맨 처음 농성을 시작할 땐 시한부 농성으로 준비했으나 50일이 지난 지금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언제 농성을 끝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걱정까지 농담으로 던졌다. 또한 그는 "국민들이 서명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가 이렇지만 모두들 추석 잘 보내시라"고 인사까지 건넸다.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이렇듯 눈에 보이는데 언제까지 역사의 심판으로 그 책임을 방기할 것인지. 나쁜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해"라고 말한 꼬마가 어른이 된 후 지금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책임을 다하기위해 역사의 파수꾼들은 광주의 진실을 전하고 있다.

광주연합 유귀숙씨 연행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는 4일밤 12시경 광주전남연합정책실장 유귀숙(29)씨를 집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 조사중이다. 한편, 유씨는 오는 10월7일 결혼 날짜를 잡아 놓고 있는 상태다.

해고자 법정구속 판사에 참여연대, 항의서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사법감시센터)는 4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이한주 판사에게 LG해고노동자 법정구속에 대한 항의서한을 보냈다.

사법감시센터는 항의서를 통해 "이번 법정구속은 단지 판사 개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감정적 판단과 해고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예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직권남용이다"며 이들의 석방을 주장했다.

이한주 판사는 지난 25일, 이한주 판사는 지난 25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동열씨등 LG해고자

2명을 재판태도가 불성실하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한다며 법정구속시켰다(인권하루소식 8월26일자 참조).

박용길 장로 기소 전국연합, 비난 성명

서울지법검찰청은 5일, 박용길(68)장로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등의 위반을 이유로 기소했다.

이날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검찰의 기소·기소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박장로의 방북이 현행법에 어긋났다 하더라도 남북 관계의 특수성과 방북의 순수한 동기, 고령인 점등을 감안할 때 구속수사는 형평성에 위배되는 감정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인권운동 활동가를 위한

인권운동사랑방 제2기 공개강좌

- ▶ 기간: 1995. 9. 16. -12. 16(12주)
-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1시
- ▶ 문의: ☎ 715-9185(담당 김수경)

날짜	강의주제	강사
1회 9.16	세계의 사형제도	고은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부위원장)
2회 9.23	장애인 고용문제와 현황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기획실장)
3회 9.30	여성문제 -아내구타, 성폭력	한국여성의 전화
4회 10.7	북경여성대회 보고 및 평가	이상덕 (한국NGO위원회 총무)
5회 10.21	판례를 중심으로 본 국가보안법	이석연(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6회 10.28	한국노동문제의 유형과 내용(총론)	하종강(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7회 11.4	· (각론)	·
8회 11.11	동성애자의 인권	서동진 ('친구사이' 회장)
9회 11.18	여성관련 국제조약	신혜수(한국여성의 전화 회장)
10회 12.2	보안관찰법	미정
11회 12.9	행려자의 인권	·
12회 12.16	변화하는 세계질서와 한국, 그리고 나	·

<이달의 주제-불처벌>

범죄자에 의해 향유되는 '불처벌'은 동일한 범죄의 반복을 고무한다. 동시에 고통받은 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회복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양보할 수 없는 권리이다. <박원순 변호사의 글에서 재인용>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이장형씨등 10명 자의적 구금

유엔 인권위 실무분과, 한국관련 세번째 결정

유엔인권위원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실무분과)는 이장형, 김선명씨에 대한 구금이 한국정부가 가입한 세계인권선언 5조(고문받지 않을 권리), 9조(체포·추방 당하지 않을 권리), 10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7조(고문·인체실험금지), 9조(신체의 자유), 14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한 자의적 구금인 것으로 지난 5월30일 결정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Decision No. 1/1995 Republic of Korea).

또한,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 류낙진씨 등 8명에 대한 구금도 세계인권선언 19조(의사·표현의 자유), 20조(결사의 자유)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9조(표현의 자유), 22조(결사의 자유)를 위반한 자의적 구금으로 결정했다.

이 사실은 「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 담당자인 클레이 맥베이씨가 6일 인권운동사랑방에 보내는 편지와 결정문에 의해 확인되었다. 맥베이씨에 따르면 이런 사실은 내년 유엔인권위원회 실무분과 보고서에 수록된다.

11명에 대한 자의적구금 결정에 따라 실무분과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정치적 권리 조약에 따라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

했다. 또한 실무분과는 이장형씨와 김선명씨의 사례를 무기징역에 관한 특별고문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실무분과의 이번 결정은 93년 장의균, 김성만, 황대권씨에 대한 자의적 구금결정과 94년 황석영, 이근희, 최진섭씨에 대한 자의적 구금결정에 이어 3번째가 된다. 이장형씨는 82년 일본에 있는 숙부를 만나 월북하고 김선명씨는 52년 국방경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천주교교작간첩대책위는 이씨가 84년 6월15일 대공분년 장의균, 김성만, 황대권씨에 대한 자의적 구금결정과 94년 황석영, 이근희, 최진섭씨에 대한 자의적 구금결정에 이어 3번째가 된다. 이장형씨는 82년 일본에 있는 숙부를 만나 월북하고 김선명씨는 52년 국방경

비법으로 기소되어 같은 해 8월 서울고등군법회의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53년 4월 서울고등군법회의에서 재수사를 받던 중 대구중앙고등군법회의에 이첩된 후 53년 7월 간첩죄가 추가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무기로 감형되었다. 김씨는 대전교도소에서 45년째 수감생활을 하던 중 최근 8.15특사로 풀려났다. 안재구씨는 94년 국가보안법의 간첩죄, 반국가단체 구성, 금품수수혐의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무기형을 선고받아 현재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인권하루소식> 창간 2주년!

인권전문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인권하루소식>을 지켜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루소식을 곳곳이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독자 여러분과 맞닿아 지켜봐주시는 모든 분들의 격려와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인권의 파수꾼을 자처하면서 창간된 <인권하루소식>은 2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미숙아임을 느낍니다.

<인권하루소식>이 필요없는 인권침해가 사라질 그날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매일처럼 들려오는 인권의 현실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는 점도 마음 아프지만 합니다.

시민·정치적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생존조건도 확보되지 못해 호소해야 하는 절박한 인권의 사각지대가 우리 사회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면에 학살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있으며, 인권의 가치보다는 복종의 가치를 강요받아야 하는 현실 또한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계화를 떠들고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는 문민정부 집권 후반기에도 여전히 끊임 줄 모르는 인권침해 사건들 때문에 우리는 <인권하루소식>을 매일 만들면서도 어깨가 무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팩스와 복사물로 나간다는 지면상의 한계를 타하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진 인권 파수꾼의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흥미있는 기사, 전문적인 해설과 자료의 제공, 국내·외 정보 네트워크의 구성으로 한층 질 높은 인권소식을 전달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꿈꾸는 인권전문지로 하루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동안의 성원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라 생각합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95년 9월7일 인권운동사랑방 일동

### 인권피해자들의 추석-마지막의 철거민, 추석 생각할 겨를도 없어

요즘 봉천6동 철거민들은 가만히 있어도 분통이 터진다. 지난 4월25일 적준개발 용역반원들이 새벽에 잠자고 있던 주민들을 끌어내 협박과 폭력을 가하고 전철 순씨의 숙우에 연탄채를 집어넣고 짓밟은 채 끌고 다닌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다. 그런데, 적 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철거반원들에게 성폭력을 당한 전철순씨가 도리어 폭력과 공무집행방해죄로 8월9일 구속되었다. 또한 철거대책 위 간부 2명에게 사전구속 영장이 나와 아직도 경찰과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오

랫만에 친척들을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싶은데, 참 서글프고 착잡하네요" 이들에겐 추석보다도 생존권 확보가 우선이고 절박하다. 6가구가 살고 있는 용인군 수지면 주민들도 경찰과의 신경전외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추석이요. 생각도 못해요. 아, 당장 언제 쳐들어 올지 모르는데 추석은 무슨..." 5일 철거반원 2백명과 전경 8개중대의 폭력으로 주민 7명이 뼈가 부러지는 등 중경상을 입었다. 추석이라고 한시라도 틈을 주었다가는 언제 철거반원과 백골단이 쳐들어 올지 모르는 것

### 필리핀, 산재 산업연수생 반한시위 한국기업 상품 불매운동도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한국대사관 앞에서 40여명 필리핀 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전개했다. 6일 오전10시경 『국제이주노동회』(Migrant International, 회장 도우그라델라)주최로 열린 피켓시위에는 산업제해를 당했거나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강제출국을 당한 노동자들이 참여해 △산업연수생제도 철폐 △노동자의 동등한 대우 보장 △기술교육 실시 등을 한국정부에게 촉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산재 노동자 10명이 참석하여 자신의 피해 사례를 발표해 주위의 시선을 끌기도 했다. 표시요(27, 천안 용암산업 근무)씨는 94년 11월 취업연수생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그는 관련 기술을 배우러 왔지만 그가 한 일은 콘크리트관을 만드는 일이었다. 당시 그는 기본급 25만원에 야간수당을 합해 32만원을 받았다. 95년1월 레미콘의 거꾸집을 조작하다가 떨어져 오른쪽 무릎에서 골반까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나 산업재해보상을 받지 못한 채 필리핀으로 돌아와야 했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도 사람이다", "Trainee system equal slavery system", "Korea stop abuse of migrant" 등 한글과 영어로 쓴 피켓을 들며 삼성, 현대, 대우 등 한국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또한 이들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쓴 서한을 한국대사관을 통해 전달했다. 한국대사관의 영사 박진용씨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다. 본부에 보고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이다. 30여명되는 적은 수의 주민들 중에서 더 다친다면 이 싸움은 끝나게 된다. 이들에게 지금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 이렇게 철거반원의 폭력 위협속에 추석을 보내야 하는 철거지역은 서울에만도 금호동, 돈암동, 도화동, 신정동 등 16개 지역이다. 오는 20일까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1차 서명작업을 마무리하고, 22일 특별법 청원식과 국회청원을 하기로 했다.

한편, 인노련등 언론계 3개 단체는 6일 프레스센터에서 광주학살 심판 촉구 시민대토론회를 열었고, 5일에는 기독교 예수교장로회 소속 목사 5백여명이 5.18 기소촉구를 요청하는 기도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하여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 5.18 사회단체연석회 구성 추석 이후 본격적 항의

5.18학살자 기소관철을 위한 제2차 제 단체 실무연석회의가 6일 전국연합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5.18 진상규명운동에 많은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5.18학살자 처벌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회·시민단체 연석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11일 국회개원에 맞추어 '국회의원

박장로 달아주기 운동'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집회를 갖고, 16일에는 5.18학살자 처벌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4차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0일까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1차 서명작업을 마무리하고, 22일 특별법 청원식과 국회청원을 하기로 했다.

한편, 인노련등 언론계 3개 단체는 6일 프레스센터에서 광주학살 심판 촉구 시민대토론회를 열었고, 5일에는 기독교 예수교장로회 소속 목사 5백여명이 5.18 기소촉구를 요청하는 기도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하여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 박장로 "매우 위중" 인의협, 응급입원 요구

북한을 방문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박용길(76) 장로의 허혈성 심장질환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이 밝혀졌다. 5일 서울 구치소에 직접 방문 박장로를 진찰한 '인도주의실천의 사업의회'(공동의장 배기영 등, 인의협)는 6일 발표한 전문의의 진단결과 "박장로가 매우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며 "즉시 응급입원시켜 생명유지에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받게 할 것"을 당국에 긴급요청했다. "통일맞이칠천만겨레모임"은 6일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의 기소를 즉각 철회하고 박장로를 무조건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민가협은 오늘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목요일집회를 열고 박장로의 석방을 요구하는 행사를 갖는다.

### 서두르십시오, 일꾼 모집 11일 원서마감

-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02-715-9185)

### <장간 2주년 격려글 모음>

## 함께 걸어온 2년, 인권의 파수꾼에서 길잡이로

□ 일본말로 번역, 동포들에게 송신 인권하루소식 장간 2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인권하루소식을 일본말로 번역해 일주일에 한번 '주간인권소식'으로 팩스 송신하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덕분에 상새한 한국인권동정을 일본인권단체, 시민단체, 한인연대단체, 노조, 양심수구원단체, 국회의원, 교포단체들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많은 성과있기를 믿습니다.

□ 인권의식 지평 넓혀 그동안 단 한 번의 발간사고없이 2년을 우리사회 인권의 실태와 현실, 인권의 중요성을 설득력있게 취재하고 제작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을 인권하루소식 제작팀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 일본말로 번역, 동포들에게 송신 인권하루소식 장간 2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인권하루소식을 일본말로 번역해 일주일에 한번 '주간인권소식'으로 팩스 송신하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덕분에 상새한 한국인권동정을 일본인권단체, 시민단체, 한인연대단체, 노조, 양심수구원단체, 국회의원, 교포단체들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많은 성과있기를 믿습니다.

□ 일본말로 번역, 동포들에게 송신 인권하루소식 장간 2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인권하루소식을 일본말로 번역해 일주일에 한번 '주간인권소식'으로 팩스 송신하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덕분에 상새한 한국인권동정을 일본인권단체, 시민단체, 한인연대단체, 노조, 양심수구원단체, 국회의원, 교포단체들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많은 성과있기를 믿습니다.

□ 일본말로 번역, 동포들에게 송신 인권하루소식 장간 2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인권하루소식을 일본말로 번역해 일주일에 한번 '주간인권소식'으로 팩스 송신하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덕분에 상새한 한국인권동정을 일본인권단체, 시민단체, 한인연대단체, 노조, 양심수구원단체, 국회의원, 교포단체들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많은 성과있기를 믿습니다.

□ 일본말로 번역, 동포들에게 송신 인권하루소식 장간 2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인권하루소식을 일본말로 번역해 일주일에 한번 '주간인권소식'으로 팩스 송신하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덕분에 상새한 한국인권동정을 일본인권단체, 시민단체, 한인연대단체, 노조, 양심수구원단체, 국회의원, 교포단체들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많은 성과있기를 믿습니다.

이런 때 한눈 한 번 팔지않고 이 민중의 울골은 자세를 꼳꼳이 지켜가고 있는 '인권'은 무엇보다 소중한입니다. - 「노동자정치연구소」, 「일꾼노동교실」, 「포천 병원적출물 소각장 건설 반대 공대위」

□ 아침마다 겪는 마음고생 새벽 잠을 설치게 하는 전화벨 소리에 이어 <인권하루소식>이 조간신문보다 먼저 배달된다. 눈을 비비며 보는 첫 소식이 날마다 대한민국 어느 속에서도 또 인권이 유린되었다는 것이라 여간 괴로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구독하지 말아야지'하고 마음 먹는다. 그러나 막상 오지 않으면 안 오는 날인지도 모르고 팩시밀리를 들여다 보고 기계 고장이 아닌가 싶어 몇번씩 확인하게 된다. 인권을 무참히 짓밟힌 분들이나 <인권하루소식>을 내느라고 고생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아침마다 겪는 내 마음 고생이야 사실 아무 것도 아니다. 그저 한 달에 구독료 만 원을 내면서 세상을 너무 쉽게 사는 것이 아닌가 싶어 그분들께 부끄럽고 미안할 때가 더 많다.

□ 일본말로 번역, 동포들에게 송신 인권하루소식 장간 2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인권하루소식을 일본말로 번역해 일주일에 한번 '주간인권소식'으로 팩스 송신하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덕분에 상새한 한국인권동정을 일본인권단체, 시민단체, 한인연대단체, 노조, 양심수구원단체, 국회의원, 교포단체들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많은 성과있기를 믿습니다.

□ 일본말로 번역, 동포들에게 송신 인권하루소식 장간 2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인권하루소식을 일본말로 번역해 일주일에 한번 '주간인권소식'으로 팩스 송신하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덕분에 상새한 한국인권동정을 일본인권단체, 시민단체, 한인연대단체, 노조, 양심수구원단체, 국회의원, 교포단체들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많은 성과있기를 믿습니다.

□ 일본말로 번역, 동포들에게 송신 인권하루소식 장간 2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인권하루소식을 일본말로 번역해 일주일에 한번 '주간인권소식'으로 팩스 송신하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덕분에 상새한 한국인권동정을 일본인권단체, 시민단체, 한인연대단체, 노조, 양심수구원단체, 국회의원, 교포단체들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많은 성과있기를 믿습니다.

□ 일본말로 번역, 동포들에게 송신 인권하루소식 장간 2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인권하루소식을 일본말로 번역해 일주일에 한번 '주간인권소식'으로 팩스 송신하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덕분에 상새한 한국인권동정을 일본인권단체, 시민단체, 한인연대단체, 노조, 양심수구원단체, 국회의원, 교포단체들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많은 성과있기를 믿습니다.

이전에 활동했던 모든 것이 '불순한 사상교육'이 되었고 생회원들 한명 한명의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 당시 처음 당하는 일이라 이리저리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을 때 내일처럼 힘써주고 돌봐준 곳이 '인권운동사랑방'이었고, 많은 언론들이 공안당국이 불러주는 대로 '생'을 떠들고 있을 때 진실을 말해 준 것이 <인권하루소식>이었습니다. 그때 도와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 우리의 권리를 찾는 일에 무척 고마움을 느낍니다.

□ 일본말로 번역, 동포들에게 송신 인권하루소식 장간 2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인권하루소식을 일본말로 번역해 일주일에 한번 '주간인권소식'으로 팩스 송신하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덕분에 상새한 한국인권동정을 일본인권단체, 시민단체, 한인연대단체, 노조, 양심수구원단체, 국회의원, 교포단체들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많은 성과있기를 믿습니다.

□ 일본말로 번역, 동포들에게 송신 인권하루소식 장간 2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인권하루소식을 일본말로 번역해 일주일에 한번 '주간인권소식'으로 팩스 송신하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덕분에 상새한 한국인권동정을 일본인권단체, 시민단체, 한인연대단체, 노조, 양심수구원단체, 국회의원, 교포단체들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많은 성과있기를 믿습니다.

□ 일본말로 번역, 동포들에게 송신 인권하루소식 장간 2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인권하루소식을 일본말로 번역해 일주일에 한번 '주간인권소식'으로 팩스 송신하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덕분에 상새한 한국인권동정을 일본인권단체, 시민단체, 한인연대단체, 노조, 양심수구원단체, 국회의원, 교포단체들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많은 성과있기를 믿습니다.

□ 일본말로 번역, 동포들에게 송신 인권하루소식 장간 2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인권하루소식을 일본말로 번역해 일주일에 한번 '주간인권소식'으로 팩스 송신하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덕분에 상새한 한국인권동정을 일본인권단체, 시민단체, 한인연대단체, 노조, 양심수구원단체, 국회의원, 교포단체들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많은 성과있기를 믿습니다.

□ 일본말로 번역, 동포들에게 송신 인권하루소식 장간 2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인권하루소식을 일본말로 번역해 일주일에 한번 '주간인권소식'으로 팩스 송신하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덕분에 상새한 한국인권동정을 일본인권단체, 시민단체, 한인연대단체, 노조, 양심수구원단체, 국회의원, 교포단체들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많은 성과있기를 믿습니다.

□ 일본말로 번역, 동포들에게 송신 인권하루소식 장간 2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인권하루소식을 일본말로 번역해 일주일에 한번 '주간인권소식'으로 팩스 송신하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덕분에 상새한 한국인권동정을 일본인권단체, 시민단체, 한인연대단체, 노조, 양심수구원단체, 국회의원, 교포단체들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많은 성과있기를 믿습니다.

(----> 4면에 계속)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추석 연휴기간동안 쉬고, 오는 13일부터 정상발행됩니다.

**(3면에서 이어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정당, 국회의원,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명망가 등을 상대로 한 인권관계 우편 설문조사를 해서 매일 한 사람, 한 정당씩 그 결과를 소개해 주는 기획! 다른 나라들의 수사·행형제도의 소개 기획을!

사랑방의 발전을 빕니다.

- 「민중미래연구소」 소장 윤한봉

**□ 보다 확실히 '피해자 편들기'를**  
문민독재 시대, 인권의 파수꾼 <인권하루소식> 창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전히 대다수의 언론이 자발적이든 억압에 못이겨서든 정권의 충실한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함없이 억눌리고 소외된 이웃들의 편에서 정론을 펼치고 있는 '인권하루소식'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독자로서 아쉬웠던 점도 있습니다. 지면의 한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때때로 상당히 중요한 기사들이 단순히 사실전달에만 그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단순한 인권 관련 정보는 일반 신문을 통해서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오히려 일반 신문들보다 더 집요하게 진실을 파헤쳐 풍부한 해설 기사를 실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떤 인권유린 사건에 있어서 제3자 입장에서 보도가 아니라 보다 철저한 '피해자의 편들기' 보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서에 "주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소경들에게는 눈을 뜨게 하려 함이니라" (루카복음 4장 18절-19절)는 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평생을 가난하고 억눌린 이들의 '철저한 편들기'로 일관하셨습니 다. 창간 2주년의 시점에서 <인권하루소식>이 다시 한번 되새김 해박 야할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인권하루소식>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재윤

**□ 종교인을 먼저 깨우길**

<인권하루소식>을 받아 보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불교인들도 <인권하루소식>을 많이 읽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종교 집단이 먼

저 깨어나야 하기에 적극적으로 종교 집단에 보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인권하루소식이 없다면 어두운 세상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 심층분석 기사로 더욱 빛나게**  
대도시 서울 한구석에 자리잡은 인권운동사랑방을 찾느라, 길은 어두운 제가 쾅쾅대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기만 한데 「인권운동사랑방」과 인연을 맺은지 벌써 몇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떠나지 않는 일, 성과도 금방 나타나지 않는 일, 그러나 먼 미래의 열매를 위해 지금 이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하고 있어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인권하루소식>의 작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 지역에서도 인권운동을 평생과업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는 사람이 나서는 듯이 되고, 올해 안에 양심수 후원회를 꾸려보겠다는 야무진 포부로 사업을 계획중입니다. <인권하루소식>이 그동안 민들레씨와 같은 역할을 해온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 구두해온 독자에게 사정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만 인권하루소식 기사중에는 사건 중심의 단편적인 기사가 '소식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인륜적 범죄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5.18 학살자 처벌투쟁에 대한 기사는 단순한 사건전달식에 머무르기 보다는 이것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기획 기사를 실었다면 훨씬 기사가 빛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 광주 지방통신원 김미라

**□ 인권하루소식 창간2주년을 맞이하며**  
'인권하루소식'이 필요없는 세상을 이룩하기 위하여 <인권하루소식>이 잘 만들어져 널리 읽히고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 김겨성(목사)

**□ 참신하고 깔끔하게**  
연합조직의 인권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인권하루소식>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지만 의연할 수 없는 소식들을 알려주고 있기에 그 중요성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하루소식>은 일정정도 한정되어 있던 시민·사회 인권운동을 대중화시켰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다.

<인권하루소식>의 팩스발송이라는 특수 조건으로 2장밖에 발간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더욱 참신하고 깔끔한 인권의 파수꾼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 「민주주의민중통일전국연합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의 창간 2주년을 축하드리며**  
이땅의 인권상황을 밝히는 등불로써 영원히 빛나길 바랍니다.

- 「통일맞이」 이사장 박용길

**□ 억압받는 자의 진정한 입과 귀**  
인권 정보화의 기수로서, 짓밟힌 인권현장의 지킴이로서 줄기차게 노력해온 <인권하루소식>의 창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사회 곳곳에서 잘못된 채 억압받는 사람들의 진정한 입과 귀가 되어줄 것을 기대하며, 그동안 수고하신 하루소식 일꾼들에게도 다함없는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양날칼을 들어라**  
창간 2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두터운 연대의식을 확인하면서 몇가지 동지적 충언과 부락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권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개발하고 이를 전파하는데 주력해 주십시오.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전파함으로써 인권 문제에 대해서 둔감한 단체나 개인에게 더 정확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인권운동은 기본적으로 정권에 대한 도전적인 비판 방식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치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공세를 의미하며 따라서 이것은 대항언론으로서의 지향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인권하루소식>은 양날칼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면으로는 시민권에 대한 신장과 옹호를 더욱 진작해야 하고, 다른 면에서는 진정으로 사회권을 보장할 수 있는 운동의 방향을 더 선명하고도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순회 인권 교육·실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근본 원칙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보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민정련」 사무처장 최현식

**<이달의 주제-붙쳐벌>**

우리가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비극적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눈까미스」에서 재인용-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 인간중심 주거 인식 전환 계기

### 제2차 세계주거권회의, 민간단체 공동대응

오는 9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주거회의(Habitat 2)를 준비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모임이 6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있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28일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민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간사단체로 '전국민민협의회' (상임대표 김진홍, 전민협)를 선정했다. 김진홍씨는 민간단체 결성 의의에 대해 "국내에서는 주거권 문제가 주로 철거로 국한되었으나, 세계주거회의를 계기로 주거권 문제가 환경, 인권, 도시계획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임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속가능한 인간 주거문화 정

착을 위해 민간단체가 주거 문제에 있어 인식의 전환을 갖고 지극적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민간위원회는 △월별 소식지 발간 △주거권 홍보물 작성 △민간단체 보고서 작성 △심포지움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전민협, 참여연대, 민정련, 경실련, 한국도시연구소, 아시아주거문화한국위원회, 서울대학교구 민민사목위원회 등이 참가하고 있으며 15일까지 다른 단체의 참가를 받고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는 전민협으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3673-3031~3 김진숙가능한 인간 주거문화 정

### 일 민간기금 위안부 조사 정대협 등 여성단체 반대

국내 일본군 위안부들과 「정대협」 「여성단체연합」 등 23개 여성단체들은 12일 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민간기금) 조사단 파견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한국방목회 취소 △국제법에 따른 배상 실시 △일본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위안부명단 공개 등을 주장했다. 한편 민간기금은 6일 한국과 필리핀에 생존해 있는 일본군 위안부 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10월에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기금」은 조사단 파견에 앞서 15-17일 피해자들의 회유와 설득을 위해 우스끼 게 이씨외 등 민간단체 대표들을 선발대로 보낼 예정이다. 일본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민간기금은 지난 7

### 경찰 시위대에 실탄 발사

경찰이 시위를 마친 학생들을 뒤따라가 실탄을 발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조치원 역전파출소 경찰 10여 명은 12일 새벽 4시 고려대 서캠퍼스 학생들이 조치원 민자당사와 조치원역 파출소에 5.18 불기소처분 취소등을 요구하며 파인트병을 던지고 학교로 달아나자 이들을 뒤따라가 실탄을 발사했다.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은 "경찰이 학생회관 앞 대치상황에서 공포탄을 발사했다. 이에 학생들이 돌맹이를 던지며 항의하자 실탄을 쏘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체육관 앞에서 있던 최승규(생물공학과, 93학번)씨를 폭력과 공공의물파손으로 연행, 조사중이다. 최씨의 친구들은 "최씨는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다. 경찰이 보이는 대로 마구잡이 연행했다"고 말했다.

### ● 주요공판안내 ●

<13일>(수)  
김종식, 오전10시30분, 국보법위반, 서울지법 형사22부 425호 전은영, 오전10시30분, 국보법위반, 서울지법 형사22부 425호 지영미등, 오후2시, 국보법위반, 서울지법 형사22부 425호  
<14일>(목)  
유방상, 오전10시, 업무방해등, 서울지법 형사3단독 317호  
<15일>(금)  
접견금지취소 가처분청구(김선명), 오전10시, 대전고법 301호 최계천, 오후2시, 국보법위반, 서울지법 형사23부 311호 권순진등, 오후2시, 국보법위반, 서울지법 형사23부 311호



### 검찰총장등 탄핵소추 요구

#### 민교협, 5.18 불기소는 직무유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공동의장 김상곤등 3명, 민교협)는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5.18쿠테타에 공소권없음 결정 주역인 김도인 검찰총장, 송중의 대검차장, 안장민 대검공안부장, 최영광 서울지검장, 장윤석 서울지검 공안1부장과 상급기관인 안우만 법무부장관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했다.

「5.18국민위」는 13-15일 명동, 서울역 등에서 5.18특별법제정 서명운동을 펼친다. 또 16일에는 장충단공원에서 「5.18 학살자 처벌을 위한 국민대회」를 연다.

#### 검찰총장 내정자 교체해야 전국연합 논평

이들은 "헌법 84조에 헌재 대통령이라도 내란혐의가 있을 때는 소추, 처단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헌법적 책무를 망각한 직무유기"라며 탄핵소추를 요구했다.

이날 계명대 강대인 교수 등 2백74명도 성명을 발표하고 5.18진상규명과 특별법제정을 요구했으며, 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11일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의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5.18 국민위)는 정기국회 개원일인 11일 오후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은 자기의 이익을 떠나 5.18 학살자를 처벌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일 청와대가 김기수 현 서울고검장을 김도인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발표하자 야당들이 일제히 비난성명을 낸 데 이어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이창복, 전국연합)도 12일 논평을 발표, 검찰총장 내정자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연합은 "5.18 불기소 처분과 4천억 비자금 축소 수사 등으로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만 상황에서 이번 인사조치는 검찰의 독립성을 철저히 무시한 채 권력유지를 위해 검찰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김기수 서울고검장은 88-89년 공안정국을 주도했던 정치지향성이 강한 정치검사"라며 "헌직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가 검찰총장에 임명됨으로써 대한민국은 지연과 학연에 의해 인사가 좌우된다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인권하루소식> 창간 2주년을 맞아 보여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질책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비판을 명심하여 보다 질 높은 <인권하루소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은 오는 10월14일 <인권하루소식> 500호 발간을 맞아 독자초청행사를 갖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주간/인/권/호/름

(1995년9월4일-10일)

<4일>

세계여성회의 비정부기구 포럼에서 한국, 북한, 필리핀, 일본의 단체들 심포지엄 개최, 일본 정부의 중군위안부 민간 보상안 철회, 일 정부에 배상 압력 공동행동 결의/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 정부간 회의 중국 베이징서 개최/71동지회 70명 '40대 선인', 5.18 사태 책임자들에게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 군사정권 잔재 청산 주장/철도노동자 서전근(37)씨 오전7시까지 대전 지방철도청 차량정비창 앞에서 분신자살/서울경찰청, 남한조선노동당 5.1동맹 13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

<5일>

유엔 수해조사단, 북한 이재민 50만명 발생, 6-70명 의사, 곡식 30만t 손실됐다고 발표/정부, 노사 합의 때는 변형근로시간, 근로자 파견제 가능하도록 할 방침

<6일>

프랑스, 남태평양 푸투로아 환초에서 핵실험 강행/환경운동연합 회원 22명, 프랑스문화원 점거시위 핵실험 규탄/왕원경찰서, 한국중공업 노조위원장 등 3명 업무방해등으로 사 진구속 영장/서울지검 공안1부, 박용길(76) 장로 국보법상 탈출, 회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예수교장로회, 목사 5백 50명 5.18 성명 발표, 특별검사제 등 촉구/인천 남부경찰서, 해고노동자 도청한 가나안심부름센터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긴급구속, 3명 수배/부산지법 울산지원, 지난 5월 현대자동차 파업 주도 이상범씨등 5명에게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 선고/세계여성대회 북한 대표 기조연설, 일본 정부의 중군위안부에 대한 민간차원 보상 방침 강력 비판/「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회장 이영순) "평등의 전환" 전국 4곳에 개설/종교계·시민협, 남북 수제민 돕기 모금 벌이기로/연세·군산대 교수 5.18 특별법 제정 등 촉구 성명, 원광대생 의산역 앞 시위

<7일>

일본의 여성평화우호기금,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단 10월에 한국과 필리핀에 파견키로/전남 해남경찰서 유치장(광주지검 해남지청 대응감방) 수감자 71명 관식, 환경개선 진정서 제출/서울구치소, 국보법 위반 구속수감중인 박용길 장로 삼성의료원에 입원 조치/한림·배재대 교수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10일>

콜레라 전국서 12명 발병/세계여성회의, 전쟁중 일어나는 강간 전쟁범죄로 규정, 책임자 처벌 명시/대법원, '원격영상제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입법의회/정부, 접견 횟수 늘리고, TV 시청 허용 등 행형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10월부터 시행키로/청주 서부경찰서·경남 밀양경찰서, 강도·차량절도범에 발포 사망시켜

<해설>

북경세계여성대회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정부간 회의 전에 열린 민간단체 포럼에서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북한, 아시아 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일본 정부에 중군위안부 배상을 요구하는 연대투쟁을 벌였다. 이런 노력으로 정부간회의에서도 일본중군위안부 문제가 전범으로 규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부는 중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못했다. 세계가 한 목소리로 규탄하는 일본 중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할 소리도 못하는지 한심스럽다.

<이달의 주제-블터블>  
우리가 정의와 진실만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비극적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눈까마스」에서 재인용-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 “MBC-TV 종합병원 장애인 생명경시”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사과 요구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소장 이성재, 장애인우연구소)는 13일 MBC에 항의서한을 발송, 지난 3일자 방영된 종합병원이 "이미 태어난 장애아동을 수술하지 않고 죽도록 방치하는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장애아동을 출산한 부모와 의사가 같은 행태를 따라할 것이 우려된다"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나우누리과 하이텔 등 컴퓨터 통신 토론마당에 드라마 모니터 내용을 게재하고 토론방의 개설을 요청했다. 장애인우연구소는 「서울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종합병원의 '생의 조건' 편을 모니터한 결과 △수술 하면 살릴 수 있는 아이를 장애가 있다고 수술하지 않고 사망케 해 생명에 대한 경시를 조장하고 있는 점 △장애아동을 출산한 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 및 운동치료,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아과 의사 개인의 경험을 여과없이 부모에게 얘기해 결국 아이를 포기하게 했다는 점 △소아과 의사의 대

마치 장애인 가정은 모두 불행한 것처럼 묘사한 점 △의료계의 비리를 부각시키고 의사들의 비리 및 비인간성을 부각시킨으로써 반대급부적으로 아이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시청자가 이를 당연시 하게 유도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 MBC 종합병원 '생의 조건' 편 즐거리(요약)

산부인과 병동에 응급으로 들어온 산모는 수술실로 가는 도중 응급실에서 출산하게 되고, 주위에 있는 의료진(이재룡, 전광열 등 분)들은 한 눈에 장애아라는 것을 알고 서로의 눈을 쳐다본다. 진단결과 상체기형이 있는 모자이크형 다운증후군이었고, 학계에는 아직 보고된 바 없는 유형의 장애였다. 이런 장애는 심장을 비롯한 장기능이 좋지 않아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다고 의사들은 결론을 내린다.

이때 의료진은 두가지 의견으로 나뉘는데, 외과 과장(심양홍 분)은 연구의 목적으로 수술을 하자는 방향으로, 한 소아과 의사(한성주 분)는 수술을 하지 말자는 방향으로 각각 주장한다. 결국, 소아과의사의 설득으로 아이의 아버지는 갈등 속에 동의하게 되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이의 어머니는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를 안고 병원 옥상으로 도피하여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저항한다. 소아과 의사는 자신의 오빠가 장애인이었다, 그 오빠 때문에 가족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결국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돌려보내지만 아이는 곧 사망하게 된다. 아이가 사망하는 것을 지켜보던 소아과 의사에게 다른 응급환자가 들어왔다는 호출이 오고 응급환자(아동)를 겨우 살린 소아과 의사는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드라마는 끝나게 된다.

타임즈>가 8월31일자 사설에서 "한국 언론의 편향 보도에 그 책임이 있다"며 운동본부 직접 거명한테 대해 이런 미국측의 태도는 "한미간의 우호관계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 "레이니 대사가 한국인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한미행정협의 전면 개정 등 미군법령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빨리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오는 26일경 공개토론회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 경찰 실탄 발사 항의 전국연합 성명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이창복, 전국연합)은 13일 성명을 발표, 12일 경찰이 대학교정에서 실탄을 발사한 사건(<인권하루소식> 12일자)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전국연합은 "대학구내에서 실탄을 발사하는 일은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고 규정하고, 91년 강경대군 치사사건, 김귀정양 질식사,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생의 권총에 의한 죽음들을 상기시켰다. 더우기 문민정부 출범이후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 5.18대회장 난입 등 공권력 남용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다.

### 미군범죄 발언 사과 요구 운동본부, 토론회도 제안

최근 레이니 주한미대사(8월24일), 나이 미국방부 차관보(9월6일)가 연이어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민들의 여론을 언론의 왜곡 보도 탓이라고 발언하고 나서자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전우섭 등, 운동본부)는 13일 주한미대사관을 방문, 레이니 대사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운동본부는 또, <워싱턴

전국연합은 이번 경찰 행위의 배계에는 5.18불기소처분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공권력 동원으로 억누르려는 의도가 있음을 지적하며, 사건 진상의 명확한 공개와 사건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 ○ 국제인권소식 ○

### 엠네스티 국내 인권침해 적극 대응 국제대의원총회 결의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엠네스티의 총회 결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엠네스티 한국지부 오만호 사무국장의 도움을 얻어 늦게나마 이를 소개한다.

「국제엠네스티」 제22차 국제대의원총회(International Council Meeting)가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슬로베니아공화국의 수도인 루브리아나에서 각국 대표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기존의 활동방식과 틀을 유지하면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이 토의되었다.

주요 결정사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발전에 관한 결정사항'에서는 인권침해가 심각한 주요국가에 대한 캠페인과 엠네스티 조직을 지속적으로 설립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이후 4년동안 최우선의 과제로 재확인하였다.

또, 가장 관심을 끌었던 '자국문제에 관한 활동원칙'에서 각 지부는 지역전략과 관련하여 국제집행위원회에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엠네스티의 분석 및 전략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엠네스티 각 지부는 국제집행위원회의 동의 하에 자국의 인권문제에 관해 언론에 알리는 등의 활동들을 전개할 수 있다. '여성인권침해에 관한 결

정사항'을 보면, 여성에 대한 할례의식을 포함하여 여성인권침해 사례 조사와 캠페인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입사항'의 주요한 변화로는 전쟁 및 내전 과정에서 의해 자행되는 무차별적인 살해행위를 반대하며, 여성 할례의식의 실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인권교육을 통해 이것이 인권침해임을 알리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 정부측에 국제인권조약 가입을 촉구하고, 인권교육에 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이번 총회의 결정으로 각 지부는 자국내의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엠네스티의 활동 변화가 예상된다(<인권하루소식> 8월8일자 참조).

엠네스티의 총회에 해당하는 국제대의원총회는 매년 2년마다 열린다.

#### 권중대 전 의장 투병중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전 의장 권중대씨가 투병중이다. 지난 70년대 농민운동에 투신하여 지금까지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등을 역임하면서 사회운동의 지도적 역할을 해왔다. 그는 간암진단으로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영타에 있는 병원에서 요양하고 있다. 주변에서는 권중대씨의 신병치료를 위한 모금을 하고 있다.

예금주: 김학록(신부)  
농 협 707120-51-002024  
☎ 0571-57-6596(강성중)

### 법정평등 실현 모임 16일, 발족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의전화는 오는 16일(토) 오후 3시 장충동 여성평화의 집 회의실에서 '법정평등 실현을 위한 모임(모임)' 발족식을 갖는다. 모임은 지난 7월 모집되어 활동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20명의 남녀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주된 활동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재판 모니터링과 피해 내담자 지원사업이

다.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여성의 진화내 상담 인권국이 모임을 지원하며, 모임은 2개조로 나뉘어 월 1회 조별모임을 통해 관련 법률, 재판과정, 필요서류와 작성법 등에 대한 학습을 계속한다. 모임에 주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활동 방향을 결정하고, 피해내담자를 위한 법정동행, 소장작성, 가정폭력으로 빚어진 사건피고인을 위한 단원운동 등을 펼친다. 모임은 이미 가정폭력과 관련된 김병희, 전정진, 최현욱 사건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 개강 이틀 전!

#### 인권운동 활동가를 위한

### 인권운동사랑방 제2기 공개강좌

- ▶ 기간: 1995. 9. 16. - 12. 16.(12주)
-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1시
-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 ▶ 대상: 인권문제에 관심있는 모든 이
- ▶ 수강료: 모든 강좌 3만원, 1강좌당 5천원
- ▶ 문의: ☎ 715-9185(담당 김수경)

날짜	강의주제	강사
1회 9.16	세계의 사형제도	고은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부위원장)
2회 9.23	장애인 고용문제와 현황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기획실장)
3회 9.30	여성문제 -아내구타, 성폭력	한국여성의 전화
4회 10.7	북경여성대회 보고 및 평가	이상덕 (한국NGO위원회 총무)
5회 10.21	판례를 중심으로 본 국가보안법	이석연(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6회 10.28	한국노동문제의 유형과 내용(총론)	하중강(한울노동문제 연구소장)
7회 11.4	(각론)	
8회 11.11	동성애자의 인권	서동진 ('친구사이' 회장)
9회 11.18	여성관련 국제조약	신혜수(한국여성의 전화 회장)
10회 12.2	보안관찰법	미정
11회 12.9	행려자의 인권	
12회 12.16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한국, 그리고 나	

<이달의 주제-불처벌>  
우리가 정의와 진실만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비극적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눈까미스'에서 재인용-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태권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 제3차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 UN인권이사회 손종규씨 사건 최종 결정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7월19일 우리나라의 제3차개입금지가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조약)이 보장이 자유를 침해했다며 정부에 개정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권조약의 해석이 가장 권위있는 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번 결정으로 제3차개입금지 조항의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민주노총 결성을 앞두고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2면)

인권이사회는 손종규(전 금호노조 위원장)씨가 92년 7월 이석태 변호사등을 통해 인권이사회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측과 손씨측의 반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결정을 내려, 이를 지난 8월 한국정부와 손씨측에 통보했다. 인권이사회는 최종 견해에서 "손종규씨의 행위를 제3차 개입금지 위반으로 보는 것은 자유권조약 제19조 2항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한국 정부는 손씨에게 배상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고, 제3차 개입금지 규정을 재검토하여 장래에 이러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며, 90일 이내 한국정부가 취한 조치를 보고할 것"등을 요구하였다.

손씨는 지난 91년2월 「대기업노조연대회의」가 대우

조선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였다는 이유로 제3차개입금지 조항 위반혐의로 구속, 1심에서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기각당했다. 손씨는 형이 확정된 후인 지난 92년 7월 자유권조약과 선택의정서에 근거하여, 대리인사 회를 통해 이 사건을 인권이사회에 통보, 이런 결정을 받게 되었다.

지난 80년 국가보위법회의에 의해 법률로 제정된 제3차개입금지규정은 94년 6월과 95년 3월 국제노동기구(ILO)가 결사의 자유원칙을 위반했다고 결정하여 한국정부에 개정을 요구하였고,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지난 5월 간접적으로 이 조항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권조약 제8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번 인권이사회 결정으로 더욱 더 한국정부는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국내에서도 노동법 개정 때마다 가장 먼저 오르 내리는 이 조항에 대해 노동자들은 올해 입무 기간중에 역으로 제3차개입을 적극 선언, 이의 철폐를 다짐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고영구)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권영길 등)는 이번 인권이사회 결정을 계기로 정부에 대해 △손종규씨등 대기업노조연대회의의 사건으로 구

속되었던 이들에게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 △정기 국회 회기 중에 제3차 개입금지 조항을 철폐할 것 △노동부, 검찰, 경찰, 제3차 개입금지조항의 적용을 중지할 것 △이 조항으로 인해 수감중인 이들을 석방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김근대씨(현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전민선 관련)와 박태훈씨(호주 한청련 관련)가 인권이사회에 사건을 통보하여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 상지대 교내 5개단체 공대위 발족

#### 총장 문제 파장 커져

상지대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직원노조, 총동문회, 조교협의회 등 5개 단체는 14일 오후2시 학생과 교수 1천2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부당해임 철회와 상지학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황도근 교수 등)를 발족시켰다.

이들은 발족식에서 △부당해임 철회 △관선이사회의 전면개편 △학내 분열세력의 청산 △상지대 도립화 실현 등을 결의하였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원주시내를 돌아 고수부지까지 약 10km에 달하는 거리를 행진하면서 시민들에게 상지대 문제를 알렸다. 또, 학생

들은 이사들과 정계위원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방문, 항의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8월 30일 상지대 이사회 정계위원회가 김찬국총장에 대한 해임 결의를 하자 각 단체별로 지속적인 항의 투쟁을 전개해 왔다(<인권하루소식> 9월1일자 참조).

지난 8월 31일부터 지금까지 16일째 총학생회(총학생회장 김태원)는 재단사무국, 이사장실과 정계위원들의 연구실들을 모두 폐쇄하고, 밤샘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또, 교수협의회(의장 황도근)도 8월31일부터 밤샘농성을 하고 있다. 이번 공대위의 발족으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총장 해임 결의 무효화 투쟁을 단일하게 묶어내게 되었다.

또한, 「상지대학교 도립대추진위원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김총장 해임 무효를 위한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기로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이춘근 상지대 재단 이사장은 학생들의 교무처 폐쇄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총장 해임 결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춘근 이사장은 먼저 총장 해임 결정을 내린 뒤 자신도 사퇴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인권활동가를 위한 2기 공개강좌 첫번째

「세계의 사형제도」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내일 오전 11시부터 열립니다.

『손종규씨 사건』 관련자료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쟁점과 진행절차

10.1 인권이사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1항에 의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양측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였다.

10.2 이사회는 당사국이 주장한 대로 제출자가 90년 11월 폭력시위에 가담하였고 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죄판결받은 사실을 주시하였다. 이사회는 아울러 제출자의 제소 내용이 이 특정사안과 관련된 것이 아닌, 91년 2월 연대회의의 성명서 발행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국한된 것임을 주목하였다. 이사회는 이 두 처벌이 두 가지의 서로 무관한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이사회의 심리 대상이 되는 사안은 대우조선 쟁의 지지성명을 발행하는 데 가담한 것과 정부의 쟁의 무력진압 위협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제출자에 대한 처벌이 B규약 제19조 2항에 위배하는가에 국한된다.

10.3 B규약 제19조 2항은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권을 보장한다. 이사회는 제출자의 쟁의 지지와 정부비판에 관한 성명발행에 참여한 것은 B규약 제19조 2항의 범주 안에서 그의 정보와 사상을 전달할 권리를 행사한 것이었다고 판단한다.

10.4 이사회는 규약 제19조 3항에 의거한 표현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복합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견지한다: 그것은 반드시 법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제19조 3항 (a) (b)에 언급된 사항을 그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는 동시에 그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할 것이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2에 의거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사회는 더 나아가 제출자에게 가해진 행위가 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이사회는 노동운동의 일반적인 성향과 제출자가 타인과 함께 발행한 성명이 국가적 총파업을 위장해서 선동하는 것이었다는 혐의로 당사국이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언급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당사국은 제출자의 표현의 자유행사가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위협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가에 대하여 규명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며, 당사국이 주장한 내용중 어떠한 것도 제19조 3항에 기술된 표현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의 충분조건이 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11. 인권이사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의거, 이 사건이 B규약 제19조 2항에 위반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판단한다.

12. 인권이사회는 B규약 제2조 3(a)항에 의거, 손씨가 그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을 이유로 처벌받은 것에 대하여 적절한 금전배상을 포함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다. 이사회는 나아가 당사국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2를 제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당사국은 이와 유사한 위반이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13. 선택의정서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당사국은 인권이사회가 B규약의 위반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B규약 제2조에 의거, 당사국은 그의 영토와 관할권 내의 모든 개인에 대해 규약이 인정한 권리를 보장하고 위반이 있을 경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할 것을 서약한 사실을 상기하여, 인권이사회는 당사국이 앞으로 90일 내에 이사회에 견해를 이행하는 조치를 취하여 이를 알려 줄 것을 기대한다.

AI, "북한 황씨 3형제 양심수"

강제귀국후 행방불명

회원들에 긴급행동 요청

「국제엠네스티」(AI)는 최근 중국에 살고 있는 황성국(20), 황성산(18), 황성천(16)씨 삼형제가 북한측에 의해 강제 귀국당한 뒤 행방이 알려지고 있지 않다는 이들이 양심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북한에서 출생했으나 92년 중국으로 이주했으며, 아버지인 황용수씨는 일본등을 방문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거쳐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또한 황씨형제는 지난 6월 중국 북경에 있는 북한공안국에서 3일간 심문을 받은 뒤 북한 신의주로 송환되었다. AI는 이들의 강제귀국 이유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부모의 북한인권 비판 발언 때문으로 추측했다. 이들중 막내인 황성천씨가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북한이 치료하지 않았으며 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국제기준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달의 주제-붙처벌>  
우리가 정의와 진실만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비극적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눈까마스』에서 재인용-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5.18 특별법 제정 움직임 가속화

오늘 4차 국민대회, 청원 잇따라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한 국민적 항의가 정기국회 개원 이후 더욱 확산되어, 특별법 제정으로 관련자들을 처벌하지는 행동으로 모아지고 있다(3면에 관련 자료).

주말인 오늘도 서울과 지방에서 동시다발로 대대적인 항의집회가 열린다.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공동대표 이창복등, 5.18 국민위)는 오늘 오후2시 여의도 광장에서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4차 국민대회」를 연다. 지방에서도 광주는 전남도청 앞, 대전은 대전역 광장, 전북은 코아백화점 앞의 집회가 오후4시에, 부산역 광장 앞 오후3시 집회가 동일한 내용으로 열린다. 5.18국민위는 오는 22일경 전국에서 서명한 것을 1차 집계(약 40만명으로 추산)하여 특별법 제정을 위한 1차 청원을 할 예정이다.

5.18국민위 유한범(30) 간사는 "1차 청원 뒤에도 1백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계속할 것"이며, "절대적 국민여론이 특별법 제정을 통한 광주 학살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저희가 이를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공동대표 함세웅 신부 등, 정의구현사제단)은 사제와 신도를 포함

한 약 12만명의 서명을 받아왔고, 오는 18일 국회에 청원한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이날 9시30분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청원 입장을 밝히며, 국회의장과 4당 대표를 만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 연합회」(회장 윤봉용)은 15일 오후2시 서교 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검찰이 민주시민에 대한 과잉발포 및 대량학살의 비인간적인 범죄행위를 인정하고도 옹색한 법이론을 내세워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북한 수재민 돕기 캠페인 여성단체연합, 한달간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북한 수재민 돕기 운동을 시작한 데 이어 여성단체들도 이에 호응하고 나서 북한 동포돕기 운동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20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의장 이미경 등, 여연)은 수혜를 당한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15일부터 한달동안 펼쳐질 캠페인을 위해 여연 소속 각 단체와 지역조직에 물품접수창구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5일 성명을 발표하여 "정부가 민자당과 보수세력의 반발을 의식해 북한의 수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적극 나

서서 남북 상호간 신뢰 구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연 수제품 접수창구>  
서울: 274-2883(여연) 부산: 807-7265(부산여성회) 마산: 44-9009(경남여성회) 대구: 421-6758(대구여성회) 대전: 257-3534(충남여민회) 인천: 863-2659(인천여노회) 제주: 52-9259(제주여민회) 전주: 86-3457(전북여연합) 청주: 63-8124(충북여민회)

인권운동사랑방 제2기 공개강좌

드디어 오늘 개강!

- ▶ 기간: 1995. 9. 16. -12. 16(12주)
-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1시
- ▶ 수강료: 모든 강좌 3만원, 1강좌당 5천원
- ▶ 문의: ☎ 715-9185(담당 김수경)

날짜	강의주제	강사
1회 9.16	세계의 사형제도	고은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부지부장)
2회 9.23	장애인 고용문제와 현황	김정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기획실장)
3회 9.30	여성문제 -아내구타, 성폭력	김혜선(한국여성의전화 상담인권국장)
4회 10.7	북경여성대회 보고 및 평가	이상덕 (한국NGO위원회 총무)
5회 10.21	판례를 중심으로 본 국가보안법	이석연(변호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6회 10.28	한국노동문제의 유형과 내용(총론)	하종강(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7회 11.4	*(각론)	*(각론)
8회 11.11	동성애자의 인권	서동진 (친구사이 회장)
9회 11.18	여성관련 국제조약	신혜수(한국여성의전화 회장)
10회 12.2	보안관찰법	이창호(경성대 법학과 교수)
11회 12.9	행려자의 인권	미정
12회 12.16	변화하는 세계질서와 한국, 그리고 나	오계식(크리스찬아카데미 사회교육원장)

**<해설> 손종규씨 사건 유엔인권이사회 최종결정의 의미  
인권조약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노동법 개정되어야**

손종규씨 사건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 7월 19일 내린 최종결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유엔 인권조약에 가입한 이후 개인이 최초로 제소절차를 거쳐 얻어낸 승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제 3차 개입금지의 부당성이 국내법에서 빈번히 지적받아 왔고, 거기에 국제인권조약의 해석에 있어 가장 권위있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까지 첨부했다는 것은 그 비증면에서 어느 결정이나 권고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일로 그간 막연하게 인식되었던 국제인권조약의 구체절차가 이용 가능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졌고, 국내의 부당한 법질서에 의해 구제받지 못한 인권침해사안에 대해서는 유엔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얻은것이 큰 수확이다.

하지만, 정부의 안팎이 다른 태도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 즉, 국내에서는 헌법 제 6조 1항에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문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조약에 반하는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인권

기구들이 지적한 사항들도 전혀 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정부가 지난 5월에 열린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의 국회 등 국가기관은 위 국제조약 등 국제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결코 제정할 수 없으며, 국내법은 국제조약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부가 90일 이내에 인권이사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보고할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할지가 주목된다.

손종규씨의 대리인으로 3년간 이 사건의 유엔 인권이사회 심리과정에 참가한 조용환(민변 국제연대위원장)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국내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후라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유엔에 제소해야 한다. 국내 법질자로 구제되지 않는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유엔기구에 알리고 이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변은 제 3차 개입금지조항으로 피해당한 노동자들의 유엔제소를 적극 도울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이 제 3차 개입금지조항으로 구속된 이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경우 적극적으로 그 부당성에 항의할 것이며, 이 조항으로 인한 수배는 즉각 해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준)은 오는 18일 집행위원회를 통해 이번 인권이사회 결정에 따른 국내적 대응을 적극화시킬 계획이다.

**<조약의 관련조항>**

정치·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약칭: 자유권조약)

- 제19조(의사표현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3차 개입금지조항에 의한 구속·수배자 현황(95년도)**

(자료제공: 민주노총준비위원회)

**1. 구속중인 노동자(5명)**

소속	이름	직책	일시
전노협	단병호	전 위원장	95.7.15.
서노협	민동원	재의부장	95.5.28.
부양노련	문영만	의장	95.2.7.
대구노련	정우달	전 의장	95.1.
	박용선	의장	95.8.24.

**2. 수배중인 노동자(9명)**

소속	이름	직책	일시
민주노총(준)	권영길	공동대표	94.5.
	양규현	공동대표	94.5.
마창노련	이승필	의장	95.5.26.
	이용진	사무총장	95.5.28.
현총련	이수원	전 사무처장	93.6.
	김진숙	부산노련 의장	93.6.
한진중공업	김승호		95.7.
	박승호		95.8.
	이용석		95.8.

**3. 95년 구속후 집행유예(3명)**

소속	이름	직책	구속일시
전국노총연합	김영곤	의장	95.5.22.
현총련	윤재건	의장	95.6.22.
민주노총(준)	이상현	집행위원	95.5.23.

**<손종규씨 사건 경과>**

- 91.2.9. 대기업노조연대회의가 대우조선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 제3차 개입금지 위반이라 하여 손종규(전 금호타이어 노조위원장)씨 구속(구속자 7명 중 박창수 전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은 91년5월 서울구치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 91.8.9. 손종규씨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 1년6월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 91.12.20. 항소심에서 기각
- 92.4.14.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형 확정
- 92.7.7.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이 사건을 유엔자유권조약과 선택의정서에 근거하여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통보)
- 93.6.9. 한국 정부 의견서 인권이사회에 제출
- 93.9.7. 손씨측 반론 제출
- 94.3.18. 유엔인권이사회, 손씨 사건이 형식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통보를 허용한다고 결정함
- 94.11.25. 한국정부 "손종규씨가 폭력시위에 가담하였으며 연대회의의 행위는 국가안보를 침해했다"고 의견서 제출
- 95.2.21. 손씨측 반론 제출, 정부 의견서 다시 제출
- 95.7.19. 인권이사회, 손씨의 사례가 자유권 조약 제19조2항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최종결정.
- 95.8.15. 인권이사회 한국정부에 이 사실을 통보, 90일 이내에 정부가 취한 조치를 보고할 것을 요구
- 95.8.22. 손종규씨측 인권이사회 결정 서면 받음

**5.18 불기소 결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

(7월14일부터 9월15일까지)

자료제공: 5.18 국민위원회

일시	주요 사건
7.14	5.18 광주 공대위 8백명 상경, 청와대·검찰청·연회동 항의방문
7.18	검찰 불기소 발표
7.19	명동성당 농성 돌입
7.20	대한변협 특별검사 촉구, 광주변호사회 성명
7.21	민변 위중죄로 고소, 5.18광주공대위 기자회견
7.22	서울, 광주, 대구, 대전, 제주 등 1차국민대회
7.24	5.18국토종단행진 출발, 5.18고소 고발인 헌법소원
7.25	5.18 고소고발인 항고, 참여연대 특별법 입법청원
7.27	천주교 광주대교구 시국미사
7.28	서울 2차 국민대회, 광주대교구 사제단 기소촉구 성명
7.31	고려대학교수 131명 성명
8. 1	5.18 공대위 전남 도청앞 농성
8. 2	광주·전남교수협의회 성명, 전국대학생 시위
8. 3	민족작가회의 6백명 규탄성명, 범국민 서명운동 시작
8. 4	경북·한신대 교수 성명
8. 5	광주 2차 시민대회, 인하·경기·원광·조선대 교수 등 성명
8. 7	5.18국토종단 행진 정리
8. 8	전북·강원·상지·연세대 교수 등 성명, 광주향교 유럽 90명 성명
8. 9	서강·동국·성공회대 교수 성명, 김수환 추기경 메시지, 한총련 시위
8.10	서울연합·명동 농성단 탐골공원 집회
8.11	성균관·중앙·동아·부산 등 29개대 교수 성명, 광주·전남지역 교수 50여명 거리시위, 송광·화엄·백양·대둔사 등 조계종 4대본사 주지 성명
8.14	민교협 교수 150명 농성돌입
8.16	장충단공원 3차국민대회, 여성205인모임 성명, 전북 익산시의회 성명 발표
8.17	20-30대 각계 1천인모임 성명
8.18	광주북구의회 성명 및 삭발, 대한변협 '특별검사, 공소시효'법률안 입법청원, 서울시의회 50명 성명
8.21	민교협 서명교수 결의대회 및 거리시위, '진상규명,공소시효'법률안 입법청원
8.24	민교협 헌재에 의견서 제출, 5.18 고소고발인 김동진 합참의장 등 현역군인 11명 대법원에 항고, 조계종 소속 승려471명 성명
8.28	서울대교수 230명 성명
8.30	전남지역 초·중·고 교사 420명 성명 발표
9. 4	예장 목회자 550여명 5.18내란주동자의 처리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9. 6	언노련, 기자회견, PD연합회 공동주최 '광주학살 심판촉구 시민대토론회', '5.18학살자처벌 특별법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구성.
9.11	민변, 전국연합,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9.12	민교협, 국회에 안우만 법무부장관 등 탄핵소추 요구
9.13	남총련 소속 25개 대학 총학생회장,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9.14	5.18광주전남공대위, '5.18 공청회개최/대경총련, 단식농성 시작
9.15	사립대교수협의회연합회, 5.18성명서 발표

**◇ 인권간행물 ◇**

- 주간 전국연합통신 68호-민주주의인족통일전국연합(☎ 747-4364)
  - 주요내용:5.18 학살자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 구성/전국연합 하반기 사업계획 해설/김기수 검찰총장 내정에 대한 논평 등. 48쪽.
- 상지대 김천국총장 부당해임 사태에 대한 자료집-상지대학교(☎ 0371-730-0195)
  - 주요내용:상지대 교무위원회/상지대학교 도립화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등의 의견. 17쪽.
- 고난받는이들과 함께 19호-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393-4662)
  - 주요내용:희년실천기획/김인서,함세환,김영태 북송추진 등. 28쪽.
- 봉천동 나눔의 집-대한성공회 봉천동 나눔의 집(☎ 871-1596)/청소년 센터(☎ 877-7942)
  - 주요내용:결연가정소식/관악구 지역소식 등. 16쪽.
- 국제인권보 327호-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776-4733)
  - 주요내용:북한인권기사/개혁관련 공보 처 여론조사 등. 4면.
- 사월혁명회보 40호-사월혁명연구소(☎ 888-3682)
  - 주요내용:해방 50년의 회고와 통일전망(강만길)/확충되고 심화시켜야 할 기본적 인권(김진균) 등. 30쪽.
- 국제엔네스티 8월호-엔네스티 한국지부(☎ 053-426-2533)
  - 주요내용:브룬디,생존을 위한 투쟁/94년 남북한 인권상황 등. 20쪽.
- 광주학살 심판촉구 시민대토론회 자료집-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등
  - 주요내용:5.18의 법적 문제와 역사적 의미/5월학살'과 언론운동의 과제 등. 39쪽.
- 21세기 나라의 길-나라정책연구원(☎ 개혁정치,중간점검 필요하다/보스니아 내전의 배경과 쟁점/성희롱 재판, 형평성 잃은 시대착오적 판결 등. 100쪽.
- 교회와 인권 1호-천주교인권위원회(☎ 777-0643)
  - 주요내용:장기수 이장형씨 편지/신귀영씨 일가 간첩사건에 대한 제심 수용 결정서 등. 12쪽.
- 95 세계 아동 현황 보고서/어린이는 어떤 권리를 가졌을까요?/국가발전책서-어린이보건과 여성지위향상의 성취정도에 따른 국가별 순위-유네스코한국위원회(☎ 735-2315)

<이달의 주제-블처벌>  
우리가 정의와 진실만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비극적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눈까미스」에서 재인용-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 경찰, 군의회 난입 수배자 연행

### 포천병원적출물소각장 사태 새 국면

포천군의회가 주민을 대상으로 병원적출물에 관한 조사를 하는 장소에 경찰들이 난입, 주민을 연행해 큰 반발을 사고있다.

지난 13일 포천군 병원적출물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군의회 조사 특위가 대화중이던 청수면 사무소에 형사들이 들어와 수배중이던 김광분(50)씨를 연행했다. 김씨는 「포천 병원적출물 소각장 건설 반대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의 공동위원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

주민들에 따르면 형사들은 병원적출물 조사가 진행중에 병원적출물 사업자 박용환과 함께 들어와 김씨의 연행을 말리는 군의원들에게 「여기가 국회냐」는 등의 폭언을 했다고 한다.

한편, 포천군의회는 13일 김씨를 조사도중 연행한데 대한 포천경찰서장의 공식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고, 포천군수와 군의회의장도 경찰서를 방문해 「김씨가 구속될 경우 소각장 문제해결에 심각한 지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뜻을 전했다.

공투위는 경찰과 사업주가 19일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알려주자 18일 주민총회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결정했다. 이 회의에서 주민들은 「만약 회의에서 주민들은 「만약 19일 공사가 진행된다면 청원이나 집회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통일맞이칠천만겨레모임」등 인권단체들은 18일 긴급호소문을 내고, 「진단서에 조래될 수 있다고 명시된 심장발작은 일반적으로 병원 밖에서 생겼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대부분 죽게되는 위험한 병」이라며 「병원과 담당의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치소로 옮기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박장로는 각계의 석방과 치료요구로 서울구치소측이 7일 삼성의료원에 입원, 검사와 치료를 받아 왔다.

한편, 이날 서울지법은 박장로에 대한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 박용길 장로 재수감 병원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8일 서울구치소는 삼성의료원에서 입원·치료중인 박용길(76) 장로를 갑자기 퇴원시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시켰다. 삼성의료원 홍경표 담당의는 15일자로 발급한 진단서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외에도 심근증, 심첨부 비후성 등 심장계통의 질환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맞이칠천만겨레모임」등 인권단체들은 18일 긴급호소문을 내고, 「진단서에 조래될 수 있다고 명시된 심장발작은 일반적으로 병원 밖에서 생겼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대부분 죽게되는 위험한 병」이라며 「병원과 담당의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치소로 옮기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박장로는 각계의 석방과 치료요구로 서울구치소측이 7일 삼성의료원에 입원, 검사와 치료를 받아 왔다.

한편, 이날 서울지법은 박장로에 대한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 병역특례 해고자 민주당사 농성 돌입 군문제 해결 복지 실현 요구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 황용범) 소속 회원 10명은 18일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군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번 국회에서 당 차원의 정책적인 대책 마련을 할것과 국방위원 면담, 의원들의 전원서명을 요구하며 이것이 관철될때까지 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대우정밀, 풍산, 코리아타코마에서 병역특례기간 중 노동조합 문제로 해고를 당했다.

이들은 「시국관련 학생들은 수행기간과 나이, 대학 졸업년도등을 기준으로 군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병

역특례 해고자의 경우 회사에서 5-6년간 근무하고 특별복무기간도 2년10개월에서 4년9개월까지 마쳤음에도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징집영장이 발부되어 3년간 군복무를 해야 한다」며 해고노동자의 올바른 군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우정밀의 경우 회사와 해고자 8명의 복지가 합의되었으나 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복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이 해고로 인해 4-6년간의 수배 생활로 인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고 가족들의 생계문제가 시급해 하루빨리 직장을 가져야 하는 형편이다.

<인권하루소식> 숨이 찹니다.  
25일까지 구독료 납부를!  
지로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 천주교 12만3천여명 서명

### 5.18 특별법 제정 국회청원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임병태 신부, 광주정평위)와 「정의구현전국사제단」(공동대표 안충석 신부등)은 18일 그간의 서명 결과를 모아 국회에 5.18특별법 제정을 청원했다. 이들은 지난 8월초부터 16일까지 「5.18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전국에서 12만3천4백여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서명에 참가한 성직자는 1천9백7명이고, 수도자는 5천3백14명, 평신도는 11만6천2백43명으로 1차 집계되었다. 또, 가톨릭 14개 전교구에서 4백36개 성당과 1백12개 수도회에서 참가했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 대표들은 국회청원과 아울러 황남주 국회의장, 새정치국민회 총재, 민주당 대표 등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김윤환 민주당 대표의 만남을 거부했고, 김종필 자민련 총재는 병을 이유로 역시 만나지 못했다.

#### <자료>

###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요약)

2. 김영삼 정부가 스스로 문민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함에 따라 그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애정어린 눈으로 김영삼 정부를 지켜보며 새로운 기대를 걸어 보았습니다. 그들 자신이 현 정부의 정신적 역사성을 「5.18 민주항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지난 7월18일 검찰은 오랜 수사 끝에 양민학살에 대한 명백한 사실을 밝혀내고도 「공소권 없음」이란 판단으로 자신들의 역사적 임무를 포기하였습니다. 우리는 국가 검찰이 반국가적 범법 당사자들을 법정에 세우지 않고 면죄를 선언한 사실에 대하여 통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5.18과 같은 민족적 비극은 되풀이되지 않아 하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정신과 법에 의한 정의와 법에 의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4.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가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옹호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5.18 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주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역사의 굴곡마다 맺고 끊음이 불분명했던 지난 역사를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화합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5.18 문제가 우리 정치, 사회의 현안일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한 5.18 희생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국회의원 각자가 국민의 대표로서의 양심을 갖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5. 국회가 이번에 5.18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입니다. 5.18은 폭압적 정치군부에 저항했던 민중들의 항쟁이었습니다. 우리와 국민들의 기대와 청원을 국회가 거부한다면 이후에는 회복하지 못할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 주/간/인/권/호/름

(9월11일부터 17일까지)

#### <11일>

5.18국민위, 국회 앞에서 정기국회에서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시위/광주기독교연합회 인권위, 출소장기수 김인서(69) 김영태(64)씨 북한송환 서명운동 시작

#### <12일>

민교협,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을 5.18 불기소와 관련하여 직무유기로 탄핵 국회에 요구/충남 조치원경찰서, 5.18 시위 고려대생 쫓아가 교내에서 권총 발사/경기도 소방본부, 도내 각종 집단수용시설 특별점검 결과 봉쇄시설 설치로 대피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 <13일>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구현사제단, 성직자등 천주교 신도 10만6천여명 참여했다고 발표/유엔 인도사업국(DHA), 북한 수재 피해 이재민 5백20만명 발생등 조사 결과 발표/북경세계여성회의, 성희롱도 성폭력으로 규정/남충원, 23개 대학 총학생회장 5.18 특별법 제정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전남 노동부장관, 변형근로시간제·정리해고제 도입 유보 발표/서울고법 특별5부, 「정부가 고엽제 후유증 무관 입증 못하면 고엽제 환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브라질 의회, 과거 군정에서 고문치사한 반체제인사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법원 통과

#### <14일>

민변·민주노총(준), 유엔인권이사회 손종규씨 제소 제3자가 임금지 부담하다고 최종결정했다고 발표/북경세계여성회의 폐막, 행동강령과 베이징 선언문 채택/대경총련, 5.18 처벌 단식농성 돌입/승실·호서대 교수들,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노동부, 상반기 중 3만7천4백54명이 산재 발생 발표/5.18광주전남공대위, 5.18특별법 제정 시민공청회 개최/일본 오키나와현청, 국교생 성폭행 도주 미군병사 인도 요청

#### <15일>

서울대총학생회장등, 5.18 동맹휴업 결의/정승우(일명 일력) 전 소적새 마을 원장, 중국에서 귀국, 경찰 연행/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10만명 돌파했다고 발표/대구지방노동청, 여성 노동자 생리휴가 거부 대구정신병원장등 입건/대구경찰서 유치장, 하루종일 부동자세 강요, 일부 경찰서 경비처 위반자 철창보호실 가둬

#### <16일>

정부, 여성고용할당제, 공무원부터 도입키로/5.18국민위 등, 서울등 전국 6개 도시에서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대한헌법, 검찰총장에게 박창희교수 가혹행위 수사 촉구/서울지법 민사3단독, 미군의 불법행위, 국가 손해배상 판결

#### <해설>

5.18 특별법 제정이 14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광주는 10명중 1명꼴로 서명에 참가했으며, 천주교 신자도 12만명이 참가했다. 5.18국민위는 오는 22일 국회에 약 40만명의 서명을 모아 청원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단식농성과 동맹휴업이 점차 세를 확대하고 보수적인 단체도 성명발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아직도 국민적인 분노와 요구를 읽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멀리 브라질 등에서 과거의 청산을 위한 법제정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14대 국회가 과연 5.18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자못 귀추가 주목된다.

<이달의 주제-붙쳐벌>

우리가 정의와 진실만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비극적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눈까마스'에서 재인용-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천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 5.18 특별법 학생 농성, 시위 가열

### 한총련, 9월말 동맹휴업에 집중

5.18 특별법 촉구를 위한 대학생들의 단식농성이 확산되고 있고, 한총련이 동맹휴업을 결의하고 있어 점차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부산대 학생 4백여명은 19일 교내에서 5.18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시내로 진출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에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부산시경은 학생들 중 이은규(산업공학 2년) 등 8명을

시위현장에서 연행 조사중이다. 부산지역에서는 부산대를 비롯, 동아대, 동의대 학생들이 지난 13일부터 매일 화염병 시위를 벌이며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남총련, 대경총련, 고려대 학생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데 이어 연세대 총학생회장 김성훈씨등 20여명은 19일부터 4일간 교내 민주광장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오늘 오후 국회

를 방문, 연대생 5천여명의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충남대 총학생회 간부 22명과 목원대 총학생회 간부들도 단식농성에 들어갔으며, 오는 29일과 30일 동맹휴업을 결의했다.

또, 서울대 학생 1천여명도 교내 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 "5.18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 임명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학생들은 결의문에서 "현재 정치권은 5.6공 세력 끌어안기 경쟁을 벌이며 한국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5.18문제의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서울대입구역까지 거리행진을 벌였고, 이 중 5백여명은 명동 등지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줬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오는 29일, 30일 이틀간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동맹휴업을 벌일 계획이다.

한총련은 이번주 중 교내 결의대회를 치루고, 다음주 중 지역,지구별 결의대회를 갖고 오는 29,30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동맹휴업을 벌

여 5.18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5.18국민위원회와 5.18광주전남공대위는 20일 경 서명 1차분을 모아서 22일 국회에 5.18 특별법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후에도 계속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한, 5.18 광주전남공대위는 오는 23일 오후 4시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제4회 영호남민중대회를 개최하고, 5.18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망월동 묘역 참배도 할 예정이다.

### 부산대 자주대오 수배자 2명 구속

부산시경찰청은 17일 부산대 자주대오사건을 수배중이던 부산대 이승정(지질학과 4년) 이윤정(미술학과 4년) 씨를 연행, 구속하였다. 이들은 지난 2월 부산대 전 총학생회 간부등 15명이 구속된 자주대오 사건과 관련하여 수배중이었다. 한편,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이들 중 김수욱(27)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며, 다른 구속자들은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 주요공판안내

- 20일(수) 강건관·강종숙, 국보법위반, 2시, 서울지법형사 22부, 425호
- 22일(금) 문순덕·서승현(계급투쟁동맹사건), 국보법위반, 10시, 서울지법형사 23부, 311호
- 임상규, 노동쟁의조정법위반, 10시, 서울형사지법 6단독, 321호
- 신광수의 1명, 국보법위반, 11시30분, 서울형사지법 1부 418호

## 경찰 옷벗겨진 여성주민 그대로 연행 암사동 철거현장 경찰·주민 충돌

경찰이 철거지역주민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여성의 옷이 벗겨졌는데도 연행·구금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강동구 암사동 철거지역 주민 50여명은 19일 오전9시에 들이닥친 철거반원 3백여명과 전경 5백여명에 맞서 오후 늦게까지 투석전을 벌였다. 이과정에서 경찰은 지원투쟁을 나온 문연희(여, 40, 상계3동 철거대책위 위원장)씨등 상계동 주민3명과 성균관대, 성신여대 학생 6명을 연행했다.

이날 암사동 철거반원이 들어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문씨등 주민3명은 경찰과 대치하며 집회를 벌이던 중 강제연행하려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

이는 과정에서 옷이 모두 벗겨졌다. 경찰은 이러한 상태에서도 이들을 차에 태우고 경찰서로 데리고가 그대로 방치했다. 경찰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이에 강하게 항의하며 풀어줄 것을 요구하자 오후3시30분에 석방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에 일어난 봉천동 전철순씨 성폭행사건과 비슷하나 폭력반원이 아닌 경찰이 여성을 나체인 채로 연행·감금했다는 것에 더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을 도와주어야 할 경찰이 여자들의 옷을 벗겨 연행한 것은 어떤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분개했다.

##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9일 태국인 산업연수생 포티아 피트씨가 근로복지공사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출입국 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갑근세가 공제된 급여를 받아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으므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불법취업 단속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법 취업자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 해소 및 국내 근로

자의 근로조건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외국인의 불법취업 자체를 금지한 것일 뿐 이미 불법취업한 외국인이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까지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포티아 피트씨는 휴업급여와 장애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포티아 피트씨는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취업자격을 없는 상태에서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내 모업체에서 노무직으로 일하다 92년 12월10일 공장작업대가 넘어져 덮치는 바람에 방광과 열 등의 부상을 입고 산재요양 급여를 신청했으나 불법취업자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 포천병원적출물 소각장 사태 위기 주민 저지로 공사 일단 연기

'포천병원적출물 건설 반대 공동투쟁위원회'(공동대표 김광분등 3명, 공투위)는 19일 경기도청에 병원적출물 건설반대를 청원하는 5만인 서명명부를 접수했다. 공투위는 지난 5일부터 포천병원적출물 문제를 알리기 위해 서울, 포천 등지에서 건설반대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또한, 주민들은 19일 오후 1시 사업주인 박용환(한국클린시스템, 포천신문사장)씨와 경찰이 병원적출물 부지인 포천군 창수면 오가리에 포크레인등을 끌고와 공사를 시작하려 하자 진입로를 막고 4시간동안 공사진행을 반대하며 대치했다.

한편, 주민들에 따르면 사업주측은 오는 21일 재산가압류를 당한 주민들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집담관이 나올 것이라고 알려졌다.

공투위는 20일 연행·구속된 김광분씨가 고혈압증세가 보여 보석신청을 할 예정이다.

### 박용길 장로 재수감 전국연합 비난성명

서울지법이 박용길 장로에 대한 보석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전국연합은 19일 항의성명을 발표하여 박장로의 조석한 석방을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당국이 박

장로를 서울구치소로 재수감한 것은 비인도적 처사이며 반인륜적 작태"라고 비난했다. 또한 "박장로를 치료 가능한 의료시설로 옮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한국의 인권상황을 익힌 김준희(24)씨가 21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 ARRC 인권교육 류은숙, 해진승려 참가

21일 시안법 손해소송 신고 서울지법 민사 합의 41부(재판장 강종래)는 21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562호에서 한백렬씨등 출소장기수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회안전법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을 연다.

김준희씨 21일 출국 재미동포로 1년간 인권단

오는 21일부터 일주일간 태국에서 열리는 ARRC 인권교육 워크샵에 '인권운동 사랑방'의 류은숙씨와 '불교인권위원회'의 해진승려가 참가한다. 아태지역의 인권운동가들이 참가하는 이번 워크샵에서는 인권의 개념과 철학, 인권교과 등에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인권정보자료실 기념 마련 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권 파수꾼 <인권하루소식> 오는 10월10일로 지령 5백호를 맞게 되었습니다. '머칠이나 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 속에서, 그러나 우리시대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인권전문 소식지가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준비호를 내던 때가 93년 8월초입니다. 그때로부터 2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끊임없이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비록 숨가쁘지만 하루소식의 오늘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5백호 발간과 더불어 독자 여러분을 초대,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인권운동사랑방이 그간 추진해 오던 국내 최초의 '인권정보자료실'을 본격 가동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쌓아두는 창고가 아닌 인권관련 자료와 정보를 가공 서비스하는 살아있는 정보자료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행사를 갖고자 하니 꼭 참석해서 서로 자리를 자리를 빛내 주십시오.

###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기념 하루소식 독자 사은행사>

- 일시: 10월14일(토) 오후 4시
- 장소: 알렌호프(숙대입구 전철역 하차, 전화 716-2244)
- 출연: 가수 원창연(가극 「금강」 주연)
-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홍보실(전화: 715-9185)

\* 주점과 서화전 수입금 전액은 인권정보자료실 건립기금으로 쓰여집니다.

<이달의 주제-붙쳐벌>

우리가 정의와 진실만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비극적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눈까미스』에서 재인용-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 5.18 불기소 항의 범국민적 투쟁 발전 청년단체 농성, 의료인 가운시위등 적극 행동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날이 갈수록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정태홍, 한총련)이 동맹휴업을 결의하고 있는 가운데 20일에는 의료인들과 청년단체들도 농성과 집회를 결의하고 나섰다.

앞에서 피켓팅 시위를 하며, 농성 마지막 날인 23일 오후3시 명동성당에서 '5.18 특별법 제정과 학살자 처벌을 위한 청년결의대회'를 갖는다.

### 의료인들 가운시위 계획

4.13 호헌철폐투쟁, 강경대군 치사사건 이후 처음으로 의료인들이 흰색 가운을 입고 거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의료단체 관계자들은 '진료실이 아닌 거리에서 민족의 양심을 치료하고자' 역사를 왜곡시키는 5.18 불기소에 항의해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치과의사회, 기독교청년의료인회, 노동과 건강연구회, 병원노련, 인의협, 참된 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등 7개 의료단체들은 오는 23일 오후4시30분 명동성당에서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 촉구대회 및 기자회견'을 갖고 거리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참된 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는 지난 주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광주 5.18공대위 회원들의 진료를 맡고 있다. 「한국대학원생대표자협의회」(회장 정계완, 동아대 대학원총학생장)도 20일 정권에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장래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21일 국회

철폐와 책임자의 즉각적인 기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광주학살 책임자의 처벌은 역사적 정의의 확립과 건강한 사회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시대적 요청"이라며 즉각 5.18 책임자를 즉각 처벌할 것과 여야정당이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총련, 30일 전·노 장례식 한총련은 오는 25, 26일 이동동안 충남대에서 전국 2백4개 대학 총학생회장파 학생 1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중앙위원회를 열고 5.18 총궐기를 위한 동맹휴업을 결의한다고 20일 밝혔다. 한총련은 이날 "5.18 동맹휴업등 최근 고조되는 5.18 관련 투쟁을 내년 4월 총선까지 연결, 현정권 반대투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총련은 동맹휴업 첫날인 29일 각 학교와 지구별

로 가두시위를 벌이며, 30일에는 광역도시별로 노태우, 전두환 전직 두대통령 장례식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23, 24일 전남대에서 5.18 학살자 처벌을 위한 영호남청년학생한마당 행사도 개최한다.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의장 김봉준, 부경총련)은 20일 오전 동아대에서 37개 대학 총학생회장이 참가한 가운데 중앙위원회를 열고 5.18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동맹휴업을 오는 29, 30일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교직원, 학생, 지역구 국회의원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이번 주부터 각 학교

별로 투쟁선포식을 갖는다. 또, 「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은 19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줄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어 20일에는 연세대 총학생회가 연세대생 4천여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같은 날 중앙대에서도 집회를 갖고 교문 앞에서 전두환·노태우 등 5.18 관련자들과 검찰을 상징하는 허수아비를 불태웠다.

**<인권하루소식> 숨이 참습니다.  
25일까지 구독료 납부!**

지로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 "강제로 옷벗겨 희롱했다"

### 암사동 철거현장 연행 여성주민 주장

19일 오전 암사동 철거지역에서 옷이 벗겨진채 경찰서에 끌려간 문연희(44, 상계3동 철거대책위 위원장)씨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경찰이 강제로 옷을 벗겨 연행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과 분노를 주고 있다<인권하루소식 487호 참고>.

경찰은 당시 암사동 철거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주민들을 지원하러 들어가려는 문씨에게 신분증 조사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문씨가 이를 거부하자 연행했다. 문씨에 따르면 경찰은 연행 이유를 묻는 문씨를 강제로 차로 끌고간 뒤 차에 타지 않으려는 실갱이 과정에서 옷을 벗겨야 할지 모른다고 위협하며 "여자들은 옷을 벗겨야 말을 더 잘 듣는다"며 강제로 옷을 벗겨 차에 태웠다. 또한 경찰서에 도착한 문씨가 "옷을 달라, 아니면 나가서 옷을 사오겠다. 옷을 입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계속 소리를 지르자 주차장으로 내몰았다. 문씨는 "주차장 옆은 철망을 사이에 둔 길거리였고 주위엔 건물들이 있어 지나

던 행인들과 건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여성으로 더 이상의 수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씨의 주장에 대해 강동경찰서측은 "농성에 충격을 주고 있다<인권하루소식 487호 참고>.

경찰은 당시 암사동 철거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주민들을 지원하러 들어가려는 문씨에게 신분증 조사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문씨가 이를 거부하자 연행했다. 문씨는 "이번 일로 인해 남편과 이혼하게 될지 모른다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경찰서장의 공식사과는 물론 담당자를 고소하겠다고 분개했다.

### 여성 정치진출 다짐 여성민우회·생활클럽

「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이경숙등 3명, 민우회)와 「일본 생활클럽」(생활클럽)은 20일 오후4시 세종호텔에서 한일 두나라 여성의

의회진출과 생활정치 확대를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여성진출 현황과 선거활동등을 발표하고 이후 여성들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생활협동조합, 환경, 주부운동에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생활클럽은 동경내 시·구 자체 단체에 29개의 생활자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올바른 지방자치체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국회의원 여성 비율은 전체의 2%로 북한 20%, 미국 1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아직도 요원한 일이 되고 있다.

### 현대자동차 노조 위원장 민주노총계 정갑득씨

국내 최대의 노조인 현대자동차 제6대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정갑득(37, 금형부) 후보가 당선되었다.

19, 20일 이틀에 걸쳐 열린 노조위원장 선거에는 전체 조합원 3만2천7백명여 명중 3만1천8백14명(투표율 97.3%)이 참가했고, 정 후보는 1만9천2백98표(투표자의 60.7%)를 획득, 1만1천8백71표(37.3%)를 얻은 이영복(49) 현 노조위원장을 압도적인 표 차로 눌러 당선되었다.

정 후보는 반집행부 조직인 「노동자의 길」, 「현자노동자신문」, 「노조사랑」 등이 추천한 단독후보로 출마하였다. 정씨는 지난 93년 제5대 선거에서 이후보에게 5백여 표차의 패배한 바 있다.

이로써 현대자동차의 2년간의 노사 밀월시대는 끝나게 되었으며, 회사측에 밀착해 민주노조운동을 포기한 현 집행부는 노조원들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현 노

조집행부는 지난 2월 노조대의원 양봉수씨가 해고되었음에도 회사 편을 들어 양씨의 노조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반노동자적 행태를 계속 보여 결국 지난 5월 양씨가 분신, 파업사태로 치닫게 했다.

이로써 제2노총을 추진중인 민주노총 세력은 큰 힘을 얻게 되었다.

### 제3자개입금지 철폐 민주노총, 하반기 집중

유엔인권이사회가 제3자개입금지가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노동부가 19일 제3자개입금지 조항을 고수할 의사를 명확히 하고 나서서 올해 하반기 이를 둘러싼 노동운동진영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민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등, 민주노총(준))은 20일 을 하반기 노동악법 투쟁의 핵심고리로 제3자개입금지조항의 철폐로 확정지었다. 민주노총(준)의 한 관계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을 최대한 부각시켜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철폐를 위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헌법 제6조(국내법 동일원칙)에 따라 유엔 인권조약은 국내법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준)은 9월말까지 노동부와 국회를 방문하여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철폐를 촉구하며, 권영길 공동대표 등 제3자개입금지 조항으로 수배중인 이들의 수배해제, 구속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고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제3자개입금지 조항으로 인한 부당구속을 추가하게 되었으며, 회사측에 밀착해 민주노조운동을 포기한 현 집행부는 노조원들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현 노

<이달의 주제-불처벌>

우리가 정의와 진실만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비극적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눈꺼막사'에서 재인용-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 5.18 국민위원회 특별법 청원

### 방송통신대 교수 64명 “특별법 제정” 촉구

「5.18 국민위원회」(공동대표 김상근등)와 「5.18 광주 전남 공대위」(공동대표 강신석등)는 오늘 국회에 28만여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제출하고 5.18 특별법 제정을 청원한다.

두 단체는 검찰이 정한 공소시효인 8월16일 이후 본격적인 서명을 받기 시작하여 광주전남지역에서 20만여명이 넘게 서명을 받았고, 이후에도 백만명을 목표로 계속 서명 운동을 전개해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1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서 12만명의 서명부를 제출한 것을 합치면 40여만명이 서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국회청원에는 광주 지역단체의 대표자와 5.18 국민위원회 관계자 1백여명이 참가하게 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청년단체 회원들도 이때에 맞춰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피켓팅을 벌인다.

한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한완상) 윤용식 교수등 64명은 21일 5.18 문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5.18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성공한 쿠데타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는 80년 쿠데타가 불과 7년만에 범국민적 저항을 받아 완전한

실패로 돌아간 엄연한 사실을 망각한 반역사적 논리”라며 “총칼의 힘을 법과 정의보다 우위에 두는 반법치적 논리이자 민주헌정의 기초를 위협하는 반역의 논리”라고 질타했다. 또, 이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구국적인 결단으로 학살주범들의 사법처리할 것 △국회는 검찰의 고위책임자와 법무부장관을 탄핵소추하고, 특별법을 제정할 것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위헌결정을 내릴 것 △언론은 80년 당시 5.18 쿠데타를 미화했던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 지탁연 등 민간단체 '5세 아동 입학' 반대

교육부가 '5세 아동 국민학교 입학허용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학부모, 유치원 교사, 민간단체등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전교조 초등위」 「한국유아교육협회」 「지탁연」 등은 교육부가 교육법 개정안의 내용중 '5세 아동 국민학교 입학허용'이 문제점이 있다며 연대회의를 구성, 반대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이 정기국회 통과, 시행될 경우 "아동들을 유치원 때부터 입

시경쟁으로 내몰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유치원교사는 "교육부의 발표 후 몇몇 학부모는 자기 아이의 조기입학을 위해 벌써 과외를 시키고 있다"며 깊은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제시한 안에는 국민학교 취학인구 감소로 남아도는 교실과 교사를 처리하고 유아교육의 정부지원을 주장해온 민간단체의 압력에서 벗어나려는 속셈이 숨어있다"며 5세 아동 입학허용안의 대안으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연대회의는 이번 주말까지 단체구성을 마치고 오는 27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교육부장관에게 5세아 입학허용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국민서명운동 전개 △공청회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관심있는 단체는 051-510-1591로 연락하면 된다.

### 박용길 장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지난 7월 방북·구속기소된 박용길(76) 장로가 치료받던 삼성종합병원에서 강제로 퇴원당해 21일 서울구치소측에 계수감되었다. 박용길 장로는 지난 7월 허혈성 심장질환 등으로 정밀진단이 요구돼 삼성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왔다. 서울구치소측은 지난 9월18일 박장로를 계수감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여 왔으나, 의료진은 19일 박장로가 최소한 1주일 이상 더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용길 장로 석방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근등)는 21일 성명을 발표,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인도적인 차원을 역행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 인권활동가를 위한 제2기 공개강좌(2회) 장애인의 고용문제와 현황

-연계고용제도를 중심으로

- 일시: 9월23일 오전 11시-오후1시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지하철 1·4호선 서울역, 4호선 숙대입구 하차)
- 수강료: 1 강좌당 5천원
- 문의: 인권교육실 김수경강사(전화:715-9185)

### 통신원 특별기고

## 5월정신의 예술적 승화-안티비엔날레

인권하루소식 광주통신원인 김미라 씨가 보내온 글을 실습니다. 지면관계로 전제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편집자 주).

“광주정신의 역사성을 예술적으로 승화하며, 광주의 세계화를 이룬다”는 광주비엔날레가 20일 화려하게 개막되었다. 국제적인 예술도시로의 발전,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요란한 구호만큼 각종 언론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광주비엔날레... 이런 중에 ‘안티-비엔날레’라는 이름을 걸고 광주통일미술제가 열리고 있어 그 현장을 찾아 보았다.

오후 2시 망월동묘지 입구, 평상시와는 다르게 뭔가 있음직한 작은 흥분이 술렁이고 있다. 입구로 들어가는 굴다리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여긴 것은 80년 시민군의 그림이 크지 않은 벽면을 차지하고 있어서였을까?

주차장 전체가 전시장으로 세 단장하고, 묘역전체는 오색 만장으로 새옷을 입었다. 앞쪽에 작지 않게 세워진 무대의 걸개 그림이 눈 속으로 속 들어온다. ‘투사도’라고 마음대로 그림의 제목을 붙여주며, ‘5.18특별법을 제정하라’는 큼지막한 구호에 눈길을 돌려본다.

80년 5월이후 두들겨 맞고 감시당하고 파헤쳐지고 도망치는 과정을 수십번 하면서도 악으로 짙으로 지켜오고 가꿔왔던 망월묘역, 오늘날쯤 정성스럽고 호사스럽게 단장받아 본격 있는가 싶은 마음이 들자 무조건 눈물나고 고마운 마음부터 생긴다. 오월의 정신을 이처럼 생생히 보여주고, 아픈 역사를 피부로 느끼게 하는 작품들! “이것이 오월정신의 예술적 승화라는 것이구나”라는 감탄사가 절로 난다.

그래도 궁금하다. 왜 굳이 안티-비엔날레인지.

그래서 통일미술제를 주관한 광주·전남미술인 공동체의 사무국장 전경근씨의 설명에 귀를 기울여보

았다. 지난 94년 12월6일 당시 강운태 광주시장이 국제적 예술행사인 비엔날레 유지를 95년 9월20일로 결정했을 때 광주지역의 많은 뜻있는 미술계 인사들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재검토를 제기했다고 한다.

첫째, 국제적 규모의 행사를 준비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점이다. 비엔날레가 담아야 할 내용, 형식, 예산확보 등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화를 구호를 쫓는 졸속 행정의 우려가 엿보인다는 점이다.

둘째, 미술계의 의견, 광주시민의 이혼수렴의 과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제적 규모의 행사를 치룬다고 했을 때 주인없는 잔치상을 벌여놓을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셋째, 95년은 광주항쟁 15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5월의 정신을 문화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준비를 탄탄히 해야 한다는 점등이었다.

여러 과정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이미 결정된 비엔날레는 행정적인 준비과정에 들어갔고, 그래서 비엔날레에서 담지 못하는 내용을 규모는 작지만 우리식대로 -민주성지답게- 펼쳐나가자 광주통일미술제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국제예술제라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외국작가의 작품을 유치하려는 발상과 그 진행과정, 여러 예산의 낭비, 행사 바로 전까지 도로를 새로 놓느라 복세통이 된 거리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찝찝함이 바로 연상되어 떠올랐다.

어쨌든 광주를 찾아올 많은 손님들이 그저 관광과 순례가 아니라 뭔가 우리의 역사와 정신을 느끼고 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데 대해서 다행스런 마음이 들기도 했다.

돌아오는 차안에서 내내 생각했다. ‘참으로 소박한 잔치다. 그러나 무게 있는 잔치다. 그리고 고마운 잔치다’라고.

### ○ 행사와 동정 ○

- 「성회통대책 시민연대」 발족식  
· 일시: 29일(금) 오전10시  
· 장소: 명동 YWCA 2층 묘우당  
· 주최: 성회통대책 시민연대 (☎ 269-5763)
-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중앙위원회  
· 일시: 25-26일(월, 화)  
· 장소: 충남대학교  
· 행사내용: 상반기 평가/하반기 계획 / 5.18 동맹휴업 결의 등.  
· 주최: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 921-4473)
- 5.18학살자 처벌을 위한 영호남 청년학생 한마당  
· 일시: 23-24일(토, 일)  
· 장소: 광주 전남대학교  
· 주최: 남충련, 전북충련, 대경충련, 부경충련 (☎ 062-520-6203)
- 「사회민주당의청년연맹」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 일시: 24일(일) 오후5시  
· 장소: 대학로 신바람 소극장  
· 행사내용: 백기완 이야기 한마당/문화공연  
· 주최: 사회민주당의청년연맹 (☎ 745-7424)
-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 제10차 정기총회  
· 일시: 23일(토) 오후3시  
· 장소: 성균관대학교 학생회관 3층  
· 문의: 763-4700
- 노인복지법, 생활보호법 개정 공청회  
· 일시: 23일(토) 오후2시  
· 장소: 국회의위원회관 1층 대회의실  
· 주제발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찬진)/생활보호법 개정안(이남진)  
· 주최: 참여연대, 노인문제연구소, 노인의 전화 등. (☎ 796-8364)
- 「용인민주청년회」 창립 5주년 기념식  
· 일시: 23일(토) 오후5시  
· 장소: 용인문화회관  
· 문의: 0335-36-0150
- 주한미군폭행 근절을 위한 서명운동  
· 일시: 22-23일 오후2시-4시  
· 장소: 서울역 광장  
· 주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744-1211)
- 직장내 성희롱 예방비디오 토론회 및 시사회  
· 일시: 25일(월) 오후2시  
· 장소: 대학로 인켈 아트홀  
· 내용: 직장내 성차별의 구조와 성희롱(심희희)/성문화와 성희롱(이영자)/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시사회 등.  
·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 576-7127)



<이달의 주제-붙쳐벌>

우리가 정의와 진실만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비극적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눈까미스'에서 재인용-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 5.18 특별법 청원 잇따라

### 5.18국민위, 28만여명 서명부도 전달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야의 입법청원과 야당의 의원입법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공동대표 이창복등, 5.18국민위원회)와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강신석등, 5.18공대위)는 22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5.18 특별법 제정을 입법청원하였다. 이번 입법청원에는 5.18국민위가 1차로 모은 28만4천7백93명의 서명부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관광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특별법 청원경과와 취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강신석 목사는 "성공한 쿠데타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는 계엄군의 논리"라며 "40만명이 넘는 이들이 짧은 시간에 서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염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5.18국민위와 5.18공대위는 검찰이 정한 공소시효인 8월16일 이후 5.18공대위의 제안으로 시작된 서명에 60만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오는 10월 10일까지 1백만명 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18일 천주교측에서 12만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특별법 청원한 것들 더하면 41만명 이상이 5.18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황인성 5.18국민위 집행위원장은 "이외에도 한총련 20만명, 대학교수 5천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한총련은 한 총련은 29,30일의 동맹휴업 기간에, 교수들은 30일 열리는 전국대학서명교수모임 결성식 때 서명결과를 모두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원에서는 이미 법률안들이 청원된 상태이므로 법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특별법 제정에서 꼭 들어가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에 5.18 진상규명, 5.18 학살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검사의 임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들었다.

이들은 이외에도 국회가 검찰간부와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로 탄핵할 것과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한편,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김대중)도 이날 '헌법과 피범죄자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 등 3종의 5.18 관련 특별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또, '민주당'(공동대표 홍기훈등)은 오늘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사건처리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 국보법 개정 요구 엔네스티, 항의행동 요청

'국제엔네스티'(AI)는 21일 성명을 발표, 남한정부에 국가보안법을 개정, 표현 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AI는 결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이들에 대해 남한 당국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고 있다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가보안법으로 1백17명이 구속되었고, 이런 추세는 8.15 사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정희 교수가 고문을 당한 것을 비롯해 국보법으로 구속된 많은 이들이 잠안재우기 고문등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문 중인 모든 구급자의 불합리한 대우로부터 보호와 빠른 변호인 및 가족의 접견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무더기 구속 사태에 대해 AI 회원은 김영삼 대

통령과 안우만 법무부장관에게 엄중히 항의할 것을 요청했다.

### 노인복지법·생활보호법 오늘, 개정 공청회 노인의 전화, 참여연대 등

'참여연대', '노인문제연구소', '노인의 전화' 등 사회복지 관련단체들은 23일 오후 2시 노인복지법과 생활보호법 개정 공청회를 갖는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찬진 변호사는 현행 노인복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행정체계와 전문인력, 재정조달 확보방법에 대한 정확한 명시, 권리구제절차 등 실효성을 강화한 개정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번호사는 "여러 사회복지관련법이 난립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률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기본법이 일반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남진 변호사는 "현행 생활보호법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생활보장과 자립조성을 목적으로 하위 법률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 법률의 사회복지법 인정을 중심으로 한 개정 방안을 내놓는다.

### 인권활동가를 위한 제2기 공개강좌(2회)

### 장애인의 고용문제와 현황

-연계고용제도를 중심으로

- 일시: 9월23일 오전 11시-오후1시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지하철 1·4호선 서울역, 4호선 숙대입구 하차)
- 수강료: 1 강좌당 5천원
- 문의: 인권교육실 김수경간사(전화:715-9185)

### <인터뷰> 엠네스티 패트릭 얼·프랭크 제니씨

## 10월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로비 집중

### -엠네스티 캠페인의 전략과 방법-

<편집자주> 「국제엠네스티」(AI)에서 캠페인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패트릭 얼(Patrick Earle)씨와 프랭크 제닝(Frank Jennings)씨가 「인권운동사랑방」을 방문, AI가 벌이고 있는 캠페인 방법과 국제적 인권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대화 중 주요내용을 정리해 실는다.

고문등 주제별 캠페인, UN을 상대로 벌이는 캠페인 등이 있다.

사실 캠페인의 주제를 결정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모두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해 캠페인 할 것인가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점이 다.

△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 한국 인권단체들이 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해 벌이고 있는 캠페인방법을 조사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하는 주된 일은 AI 전세계 지부와 그룹들이 벌일 캠페인을 정하고, 그 전략과 방식을 기획하는 것이다. 또 그룹들이 자유롭게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캠페인 방법에 대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한다.

△ AI가 하는 캠페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AI에서 벌이는 캠페인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제사무국(IS)이 전세계 회원과 함께 집중적으로 벌이는 국가별 캠페인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조직들이 자기들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다. 이 밖에는 실종자,

△ 지금까지 그룹이나 개인이 해온 캠페인 방식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 작년에 인도네시아 캠페인을 할 때의 경우다. 한 대학생 그룹은 학교축제 때 인도네시아에 관한 전통의상, 음식등 풍물을 전시·판매하고 인권상황에 대한 사진과 비디오를 설치했다. 그리고 행사장 나가는 곳에 팩스와 종이를 준비하고 그 위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팩스번호를 써놓아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의 인권상황에 대한 팩스를 보내게 했다.

또 어떤 그룹은 한 실종자에 대한 포스터를 도시 전체의 벽, 창등에 붙였는데 많은 사람들과 언론이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 밖에도 캠페인 방식으로는 독특하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수준이나 상황에 대해 잘알고 그에 맞는 적당한 캠페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최근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캠페인은?

- 얼마전엔 끝난 큰 캠페인으로는 북경여성대회를 중심으로 벌인 '여성권리캠페인'이 있다. 또 지금은 유고슬라비아, 케시미르등 내전지역의 실종자 문제에 대해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 각 지부로 정보와 양식을 보내는 중이다.

10월에는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각국 정부대표들을 상대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비를 벌일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설치되면 지금까지 처벌이나 평가가 어려웠던 국가, 권

력자들이 저지른 인권문제를 재판하게 될 것이다. 11월에는 어린이권리에 관한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 사안법 선고 10월로 연기

21일 선고예정이었던 출소장기수 사회안전법 소송이 재판장 변경문제(재판장 최태병) 연기로되었다. 다음 선고공판은 10월10일 서울민사지법 562호에서 열린다.

### 기사제보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PC ID: rights(하,전)  
인권사랑(나우누리)

## ◇ 인권간행물 ◇

- 「주간 전국연합통신」 69호(☎ 747-4364)  
· 주요내용: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에 대한 평가와 반성 그리고 전망과 과제(정기열)/지방자치와 사회보장 부문 20대 정책과제(조홍식)/현재적 국민정당운동의 관점과 건설경로(구해우)/전국연합 총선대응 방침 등. 55쪽
- 열쇠따르릉 전화친구 상담원 교육자료집 3(☎ 365-1265)  
· 주요내용: 아동발달의 이해/전화상담의 이론과 실제/문제있는 전화의 대처방법/청소년 약물남용의 원인과 발생과정/가출 청소년의 현황과 특성/상담자료 등. 185쪽
- 『참여사회』 9/10월호(☎ 796-8364)  
· 주요내용: 특집1-공익소송과 시민운동/특집2-정치개혁과 시민운동/민간통일운동이 남북대화 이끌어낸다(김창수)/인도네시아 노동자들 한국기업 가장 싫어한다(김은영) 등. 124쪽. 값 3천원.
- 자료집-여성의 의회진출과 생활정치 확대를 위한 한·일세미나  
· 주요내용: 일본 '생활자네트워크'는 시민의 정치네트워크입니다/동경생활자 네트워크 현황/여성민우회의 활동 등. 19쪽.
- 「세상열기」 9월호(☎ 516-1542)  
· 주요내용: 기획특집-80년대의 능선을 넘어 21세기를 향하여/러시아인들의 삶과 고뇌 등. 104쪽.
- 「참개혁신」 준비3호(☎ 253-2530)  
· 주요내용: 좌초하는 문민호/지방자치를 위해 일하는 단체 등. 48쪽.
- Bobby of Evidence(GreenPeace)  
· 주요내용: Effects on reproduction/Effects on the unborn/Organochlorines and cancer 등. 영문본/한글 번역본. 19쪽.

### <인권하루소식> 숨이 참니다.

### 25일까지 구독료 납부!

지로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이달의 주제-불처벌>  
우리가 정의와 진실만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비극적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논까마스'에서 재인용-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천유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 서울구치소, 박장로에 비인도적 처우 병사 없다고 심장병 환자 독방 수감

심장발작을 일으킬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박용길(76) 장로가 서울구치소(소장 김병매)의 여사에 병동이 없다는 이유로 0.75평 독방에 아무런 간병조치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등 비인도적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우기 당뇨병 때문에 식이요법으로 치료를 해야 함에도 일반수들이 먹는 맵고 짠 음식을 그대로 지급받고 있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22일 박씨를 접견한 백승현 변호사에 의하면, "병원에서 검사도 다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재수감돼 심신이 매우 허약한 상태"라며 "지난 21일에는 현기증을 일으켜 한동안 방에 쓰러져 있었음에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고, 운동시간에도 겨우 햇볕을 쬐는 정도"라고 전했다.

현재 박장로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지어준 1주일분의 약물만 복용하고 있다. 박장로를 진찰한 삼성서울병원 흉경표의사는 박장로의 상태가 매우 안좋아서 "약물치료, 식이요법, 안정기료가 요구되며,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증, 심침투 비후성, 당뇨병, 고지혈증의 병을 앓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일생동안 치료를 해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22일 서울구치소장을 면담한 민가협 상임의장 안옥

희(61)씨도 "심장병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박장로에게 맵고 짠 음식을 그대로 주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라고 지적하여, 이에 대해 구치소측이 식사 개선 등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23일 박장로를 면회한 딸 문영금(48)씨에 따르면, "여전히 관식을 그대로 먹고 있고, 면회마저도 부축을 받아 겨우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치소측은 "박장로의 상태를 외부에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 7월 북한 김일성 주석 1주기를 맞아 방북했던 박용길 장로는 8월 판문점을 거쳐 귀국하자마자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되었고, 이어 지난 7월 삼성서울병원에 3주간의 일정으로 진료를 위해 입원했다. 그러나, 구치소측은 18일 검사도 끝나지 않은 박씨를 재수감하겠다고 병원에 통보, 의사진이 이를 만류해 돌아갔다. 19일 병원 의료진이 최소 1주일간의 진료가 더 필요하며, 허혈성 심장질환은 발병 도중 숨질 수도 있는 위험한 병이라고 구치소측을 재차 설득했다.

그러나, 21일 오전 9시경 갑자기 교도관들을 앞세우고 들이닥친 구치소측은 의사와 간호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박장로의 재수감을 강제로 집행했다.

### 부산 목회자·예장 장로회 5.18 항의 성명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부산 NCC인권위원회, 소속 목사 1백4명은 25일 오전8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검사제 도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헌정부가 5.18 주동자들에 내린 공소권 없음결정은 범죄자 집단을 비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대표적 보수교파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 정복량)는 25일 80회 총회를 열고 5.18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 즉각 기소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 열사묘역 성역화 등 결의 유가협 10차 총회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 (회장 박정기,

유가협)은 23일 성균관대에서 제10차 총회를 열고,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사업 등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다음해 8월로 창립 10주년을 맞는 유가협은 민족정통성 회복을 위한 심포지엄(열사와 시대정신), 성역화를 위한 전국 열사 묘역 순례캠페인, 고난받는 어머니의 노래 문화공연, 현대 열사인물전 책 발간, 의문사 진상규명투쟁 등을 사업계획으로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 박정기(67, 고 박종철열사 부친)씨는 제10대 회장으로 유임되었다.

### 김용태·이승환씨 연행 국보법 위반 혐의

서울경찰청은 25일 오전 김용태(민예총 사무총장), 이승환(한정협 부의장)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장안동 대공분실로 연행, 조사중이다. 이들은 8월 8.15 민족공동행사를 진행하면서 북한쪽과 서신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한정협 유기홍의장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 주요공판안내

- 27일(수) 황인성, 국보법위반, 4시, 서울형사지법 3부, 319호 이진영, 국보법위반, 4시, 서울형사지법 2부, 319호 박치현, 집시법위반, 11시, 서울형사지법 6단독, 321호 전철순씨 폭행사건, 3시, 서울형사지법 6단독, 321호
- 28일(목) 이영두, 국보법위반, 10시, 서울형사지법 3단독, 425호
- 29일(금) 서갑수, 국보법위반, 4시, 서울형사지법 23부, 311호 최재천, 국보법위반, 4시, 서울형사지법 23부, 311호 조두현, 국보법위반, 3시, 서울형사지법 23부, 311호 지영미등, 국보법위반, 10시, 서울형사지법 22부, 425호

## 직장상사, 직장내 성희롱 주범 성폭력상담소, 예방 비디오 시사회

성희롱을 당하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직장여성들과 사회로 진출하는 학생들을 위한 성희롱 예방 교육 비디오가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 성폭력상담소)는 25일 오후2시 대학로 인켄아트홀에서 자체 기획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비디오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의 시사회를 가졌다. 이번 시사회에는 학생, 시민등 1백50여명이 자리를 가득 메워 국내 처음으로 제작된 성희롱 예방비디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 비디오는 보통 직장여성의 하루일과를 중심으로 사무실에서 많이 일어나는 성희롱 사례와 그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사무실 잡무나 개인적인 심부름시키기부터 노골적인 언어폭력, 신체적 접촉, 접대부로 만드는 희석자리등 누구나 당했을만한 장면들은 그냥 기분 나쁜 일로만 넘길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시사회에 앞서 가진 '성희롱의 발생과 유지구조에 관한 토론회'에서 최영애 소장은 "상담소에 찾아오는 피해여성 가운데 10-20대가 80%로 나이가 어리고, 상급자에 의한 피해가 65.6%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통계는 직장내 성폭력이 권력과 권위를 매개로 하는 폭력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 대부분은 매년 늘어나는 성희롱의 원인을 "성희롱을 '직장의 유행어'로 여기는 왜곡된 성문화와 여성에게 불리한 지위체계, 여성을 상품화하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 뉴설악호텔 집단해고 이랜드그룹

유명 의류메이커인 이랜드그룹이 강원도 속초시의 뉴설악호텔을 인수하면서 70여명의 직원들을 집단해고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랜드그룹은 지난 1일 법원 경매를 통해 이 호텔을 인수하면서 기존의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설악호텔 노동조합」(위원장 김임형)에 따르면, 이랜드측은 기존직원들을 재취업 방식으로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사원모집과정에서 강원도내에 몇명 밖에 없는 지배인 2급 자격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5-10년 이상 경력자들의 이력을 인정하지 않고 신입사원으로 뽑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기존 사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노조는 지난 1일부터 호텔 밖 버스 정류장 앞에서 전원 재취업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중이며, 속초지역의 사회·시민단체들도 대책위원회를 구성, 이랜드측을 성토했고 있다.

### 민교협, 상지대 감사 요청

「민교협은 성명에서 "정부는 상지대 교수와 학생 절대다수가 김총장의 해임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교육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명백한 이유를 설명할 것과 감사원은 공정한 감사를 통해 교육부와 상지대 이사회의 유착관계 대한 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 주/간/인/권/호/름

(9월18일부터 24일까지)

<18일>(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등, 12만명 서명받아 5.18특별법 국회청원/통계청, 한국 남녀 임금격차 세계2위라고 밝혀/압사동 철거현장에서 경찰, 문연희씨 옷벗겨 연행/아산재단 무료진료팀, 위안부 할머니 35명중 10명이 매독 양성반응 보여/<한겨레신문>, 경기도 고양시 고양중, 수업료 미납 학생 결석처리 보도

<19일>(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 공무원 5급이상 여성특채등 여성고용방안 주장/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판결/한국지체장애인지원회, 교통사고 장애인 41% 자살시도 발표/50차 유엔총회 개막

<20일>(수) 자민련, 5.18 특별법 제정 추진기로 당론 확정/현대자동차 6대 노조위원장에게 민주노총계 정갑득씨 당선/독일정부, 나치학살 미군 생존자에 배상키로/엠네스티 사무국, 국보법 개정 요구 성명

<21일>(목) 정부, 올 11월 일반사면 대상자 선별작업 착수/경기도 성남시 '서울 남부 저유소 반대 제3차 시민대회' 집회 방해/상지대 이춘근 임시이사장, 김찬국 총장 해임/남춘연, 5.18 특별법 햇볕시위/박용길 장로, 서울구치소 재수감

<22일>(금) 5.18국민위, 국회에 28만명 서명 받아 5.18특별법 입법청원/새정치국민회의, 5.18특별법등 3개법안 국회 제출/정부, 내년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 26% 증액, 의보진료일 2백40일로/부산지법, 경찰관 가스충 발사 실명 국가배상 판결/서울지방법원, 정대협에 시민인권상 수여/클린턴 미대통령, 주일미군 성폭행사건 유감 사과

<23일>(토) 민자당 전남순천을지구당위원장, 이환의 광주지사부장에 이어 5.18특별법 서명 참가/한국성폭력상담소, 직장내 성폭력 40% 직장상사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대경총련, 전두환씨 대구방문사태 노조투쟁 결의/안기부, 지난해 우편결열 99% 차지

<24일>(일) 공주치료감호소, 87년부터 6월까지 출소 5백2명중 34% 갱생보호소 생활이나 재범했다고 발표/대법원, 검사가 증인신문 때 피의자 측 참여 보장 의무화하기로/경기도 고양 금정굴 한국전 양민학살 유해발굴 시작, 1천여명 매몰 추정

### <해설>

지난주 역시 과거 권력형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5.18불기소 처분에 대한 각계의 항의가 계속됐다. 심지어는 여당의 광주지역 지구당위원장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미군의 일본인 국민학생 성폭행에 대해 일본정부가 강력히 항의하자 클린턴 미대통령이 직접 공개 사과를 했다. "주일 미군 주둔군 지위협정"에 대한 개정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사건이 나도 항상 잘못이 없다고 발뺌만하는 한국에서의 현실과 비교가 된다. 중요한 것은 미군에 의해 한 처녀가 난자당하고, 국민학생이 수없이 성폭행 당해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범인을 풀어주는 한국 정부와 법원의 모습이 더욱 굴욕스러워 보인다.

<이달의 주제-붙처별>

우리가 정의와 진실만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비극적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눈까미스』에서 재인용-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대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 재야노동연구소에 독일제 고성능 도청기 익명의 사내 전화 “협상” 제의

25일 서울 봉천동에 위치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소장 김세균, 연구소)에서 고성능 도청기가 발견된 뒤 한 연구원의 집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내가 전화를 걸어 “협상”을 제의

해와 도청기 설치자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25일 오후 2시경 연구소의 현광훈(33)씨가 전화선을 뒤 한 연구원의 집으로 이 통로로 연결된 전화선을 옥상에서 발견하였고, 이 선

을 따라가 간장약 헬민 박스 안에 들어있는 도청기를 발견했다. 이후 연구소측은 봉천전화국에 이 사실을 통보, 전화국 직원이 도청기로 확인했다. 도청기는 고성능 통화조절기능을 갖춘 독일제 도청기 그린 플러스(Green Plus)로 소형녹음기에 연결되어 있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26일 오전 6시30분경 이 연구소의 정책사업위원장인 박성인(36)씨의 집으로 성명불상의 사내가 전화를 걸어온 것. 사내는 박씨가 일마진 잃어버린 디스켓과 문건이 들어있는 가방을 갖고 있다며 “협상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박씨는 “이로 미루어 도청기를 설치한 것은 정보기관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측은 26일 성명을 발표, “민주노동운동에 진보적 연구소가 이론적·정책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며 “민주노동운동과 이를 지원하려는 모든 진보적 단체에

대한 반민주적, 반인권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도 “경찰은 반인륜적이고 반민주적인 정보, 공작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 4월에도 만기 출소한 장기수 박정숙(79)씨의 집 장롱 밑에서 도청기가 발견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경찰에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인권하루소식> 5월30일자 참조).

내곡동 안기부 구속 1호  
89년 전대협 정책위원장

89년 입수경씨 방북 당시 전대협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다 배후조정 혐의로 수배되었던 정은철(29, 연세대 졸업)씨가 사건 6년이 지난 21일 구속되었다. 정씨는 한달여 전 여권을 신청하였다가 지난 19일 오후 9시 집에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연행되어 안기부에 넘겨졌다. 정씨는 지난 8월 학교를 졸업했고, 지난해 가을에는 공개적으로 결혼도 했으며, 생활상의 제약이 전혀 없었다고 주변 사람들은 전했다.

### <인권하루소식> 숨이 참습니다! 구독료 납부!

지로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 <자료-정부 농민감시·탄압 사례>

## 농민탄압 공무원에 무더기 표창

<편집자주> 25일 농림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최옥철 의원은 93,94년 추곡수매와 쌀수입 개방정책에 항의하는 농민들의 시위를 방해하거나 진압하는데 공로를 세운 경찰등 공무원 1백59명을 표창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최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본다.

- 1. 불법 예비군 동원 -전북 정읍군 내무과 공무원 김씨의 경우 92. 11 전북 정읍군에서 농민시위에 대비하여 예비군 62명을 군청사 경비에 동원시켜 농민시위를 무력화시킨 공적으로 93년에 농림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음.

- 2. 관계기관대책회의 소집 농민시위 대처 논의 -내무부 지방행정과 공무원 장씨의 경우 93.11 쌀수입 개방반대를 위한 농민시위에 대비 내무부 지방행정과에서 전국 시·도별로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한 공적으로 94년에 국무총리표창을 받음.

- 전북 정주경찰서 정보과 경찰공무원 이씨의 경우 92.11 전북 정읍군, 정주시, 농협, 축협, 농지개량조합등)를 구성하여 농민대회 원천봉쇄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읍면 유관기관장회의(면사무소, 농협, 정주경찰서등)를 소집, 운영한 공적으로 93년도에 농림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음.

- 전남 보성군 산업과 공무원 박씨의 경우 93년 쌀 및 기초농산물의 수입저지를 위한 농민시위

와 관련한 시위예방을 위하여 군단위 유관기관대책회의 3회, 읍면단위 대책회의 12회등을 갖고 공무원등을 취약지역에 배치한 공적으로 94년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음.

- 3. 민주당 정당활동 방해 -전북 김제경찰서 정보과 경찰공무원 이씨의 경우 93.12.7 민주당 주최 쌀시장 개방 저지를 위한 국민결기대회에 참석하려는 농어민후계자등 농민들을 방해하여 대회참석자들을 축소시킨 공적으로 94년 농림수산부 장관 표창을 받음.

- 4. 농민조직 와해 공작 -전남 무안경찰서 정보과 경찰공무원 정씨의 경우 전남 무안에서 가톨릭농민회, 기독교농민회 회원들을 계속 접촉하여 탈퇴를 종용하며 농민조직을 와해시키려한 공적과 93.11.20 농민대회와 관련하여 행사당일 농민회원이 많이 거주하는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에 임시공판장을 개설하여 참석자를 최소화한 공으로 94년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음.

- 강원도 춘천경찰서 정보과 경찰공무원 유씨의 경우 92.1 강원 춘천군 남산면 농민협의회 회원과 춘천교구 가톨릭농민회 회원들을 계속 접촉하여 농민회에서 일부를 탈퇴시키고 92년도 농민회 및 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을 위축시킨 공적으로 93년도에 농림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음.

- 5. 마을별 동향 관리자들 내부적으로 선정 운영 -전북 정읍군 내무과 공무원 김씨의 경우 92. 전북 정읍군 15개 읍면 544마을의 동향관리자들

내부적으로 선정, 지역동향 파악, 관리한 공적으로 93년도에 농림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음.

### 장기수 복송 판문점 회담 제안 불교인권위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동, 불교인권위)는 26일 출소 장기수들의 복송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선 불교도 연맹에게 판문점에서 예비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제안서에서 불교인권위위는 “김영태·김인서·함세환 노인들은 전쟁포로이므로

인도적 견지에서 복송시켜야 한다”며 “비전향장기수 석방 △전쟁포로에 대한 제네바 협정 준수등을 한국정부에게 요구했다. 또한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 외국인노동자 문제 입법청원 추진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9-11시까지 기장선 교교육원에서 실행위원회를 갖는다. 주요안건으로 10월 29일 외국인노동자 문화 한마당과 외국인노동자 입법청원 추진 등을 논의한다.

###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인권정보자료실 기념 마련 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권 파수꾼 <인권하루소식> 오는 10월10일로 지령 5백호를 맞게 되었습니다. ‘며칠이나 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 속에서, 그러나 우리시대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인권전문 소식지가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준비호를 내던 때가 93년 8월초입니다. 그때로부터 2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끊임없이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비록 숨가쁘지만 하루소식의 오늘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5백호 발간과 더불어 독자 여러분을 초대,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인권운동사랑방이 그간 추진해 오던 국내 최초의 ‘인권정보자료실’을 본격 가동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쌓아두는 창고가 아닌 인권관련 자료와 정보를 가공 서비스하는 살아있는 정보자료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행사를 갖고자 하니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자리를 빛내 주십시오.

###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기념 하루소식 독자 사은행사>

- 일시: 10월14일(토) 오후 4시
- 장소: 알펜호프(숙대입구 전철역 하차, 전화 716-2244)
- 출연: 가수 원창연(가곡 「금강」 주연)
-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홍보실(전화: 715-9185)
- \* 주점과 서화전 수입금 전액은 인권정보자료실 건립기금으로 쓰여집니다.

**<이달의 주제-블처벌>**  
우리가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비극적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눈까미스』에서 재인용-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 현중, 노조위원장 징계위 회부 노사대립 재연 조짐

현대중공업 이문희 인력개발부장이 지난 21일 노조에 현 위원장인 윤계권을 징계위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회사측은 28일 윤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3자가입금지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집행유예로 석방됨에 따른 사유위반'을 문제삼아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뜻을 노조측에 전달했다. 이에 노조는 "현대자동차 노조 선거에서 정감득 민주연합 후보가 당선된 바로

다음날 현 위원장에 대해 징계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현대자동차와 중공업의 노조가 연대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술책"이라며 징계위원회를 거부할 방침이다. 회사측은 이런 노조측의 입장을 무시하고 윤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노사대립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대그룹에서 현 노조 위원장에 대한 회사측의 징계위 개최는 전례가 없던 일이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 5.18 항의 시위 주말 최대 예상 30일 5차 국민대회, 서명운동 계속

지난 7월즈 검찰의 5.18 책임자 불기소 처분에 항의해 시작된 5.18 기소촉구인 전국 시·민·학생·종교인·교수 등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이제 국민운동으로 발전되고 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정태홍, 한총련)은 25-27일 학생들에게 5.18책임자 기소촉구를 위한 동맹휴업의 찬반을 묻는 투표를 갖고 28일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투표결과에 따라 전국대학의 동맹휴업 실시여부가 결정된다. 한총련 측은 "지난 25-26일 충남대에서 가진 중앙위원회에서 모두가 동맹휴업을 결의했다"며 이번 투표결과에서 찬성이 '압도적일 것으로 예상

했다.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공동대표 김상근등, 5.18국민위)는 오는 30일 장충단공원에서 5.18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제5차 국민대회를 갖는다. 이날 집회는 전국의 15개 도시에서 진행되어 대규모 집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18국민위는 28만4천7백93명이 참여한 1차 서명운동에 이어 10월부터 2차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친다. 지난 26일 나주지역 주민·사회단체·시의원 등 2백여 명이 '5.18학살자 처벌을 위한 나주인 선언'을 하는 등 지역별 참여도 늘고 있다.

27일로 일주일째 해고자복직을 요구하며 밤샘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해고자 10명도 26일부터 농성에 합류했다. 지난 6월15일 단체협상 과정에서 회사는 해고자 10명 전원을 복직시키기로 약속했으나, 최근 8명에 대해서만 복직시키겠다고 통보해 온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집행부는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 성폭행 피해자 피고석에 봉천동 전철순씨 재판

지난 4월 철거반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전철순(40, 봉천6동철거민대책위 대표)씨가 경찰폭행죄로 재판을 받았다.

27일 오후3시 서울형사지법 6단독(재판장 권순일) 재판부는 김성식, 김재홍, 순경(관악경찰서 소속)이 낸 폭행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성식 순경등은 지난 5월17일 신고를 받고 봉천6동 철대위 사무실 앞으로 출동하자 이를 본 전씨가 경찰차를 부수고 폭행을 휘둘렀다며 전씨를 폭행죄로 고소했다. 주민들은 "그날 현장에는 철대위 주민 7명이 있었고, 경찰 12명이 순찰차 4대에

나뉘고 와 수적으로 불균형이나 경찰차 파손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당시 전씨는 성폭행 상처를 치료받고 퇴원한지 얼마되지 않았으며, 경찰에 대해 심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며 전씨의 성폭행사건이 커져 경찰이 보복하려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편, 지난 5월16일 전씨가 자신의 성폭행에 책임이 있는 적준용역을 고소한 사건은 아직까지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병역특례 해고자 국방부 항의방문

국방부 국정감사가 진행된 27일 오전9시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위원장 장영길) 소속 회원 20여 명이 병역특례해고자 군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국방부 항의방문을 가졌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군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민주당사 농성에 들어간 병역특례해고자 10명은 농성 7일째 "문제해결을 위해 당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민주당측의 약속을 받고 농성을 풀었다.

**<인권하루소식> 숨이 잡니다.**  
**구독료 납부를!**  
지료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료번호: 7618848**

### <지상중계> 성공회대 주최 '한국의 노인과 세계의 노인' 세미나 고령화사회 노인 삶의 질 향상 대책 절실

**<편집자주>** 「성공회대학교」(총장이재정)는 27일 세계 노인의 날을 맞아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의 노인과 세계의 노인'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주제발표는 이가옥(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고양곤(강남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 최성재(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재간(한국노인문제연구소장), 유승삼(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명숙(보건복지부 가정복지국장)씨 등이 참가했다. 아래에 이교수와 고교수의 발제문을 요약해 소개한다.

#### □ 2천년대를 대비한 한국 노인 복지정책 과제 -이가옥 교수

노인인구는 노령화에 따른 건강악화, 현대사회의 생산기술체계에 적합한 지식·기술의 미보유 등으로 인하여,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대표적 인구집단이다. 노인복지개발정책에 있어서 두가지 근본 축은 1) 현실피악 및 미래의 예측, 2) 이를 둘러싼 정책적 환경 및 정책개발·시행으로 볼 수 있다. 노인인구집단은 전기노인(60-69세)과 후기노인(70세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4백3만6천9백 명으로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70세 이상의 후기노인 인구는 1백40만4천6백명으로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한다. 후기노인의 비율은 70년 1.9%에서 2천년에는 3.9%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2천년에는 전체 인구중 노인인구가 10.7%를 차지하게 돼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런 노인들은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경우가 50%를 넘고, 생활보호대상자 1백31만1천명중 65세 이상 노인이 24만3천명으로 18.5%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체 노인인구에서 9.6%에 해당한다. 이중 절대빈층이라고 할 수 있는 무의무탁 거택보호대상자 중에서 노인이 35.7%를 차지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총 인구의 1/3에 해당한다.

94년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노인의 절반 정도의 노인(54.9%)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노인(85.9%)이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년기의 주요문제인 소득보장 및 보건·의료 복지수준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안이하다. 95년도 중앙정부의 노인복지예산은 6백1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0.12%에 불과한데, 이는 일본의 17.3%, 중국의 2.9%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노인복지예산의 87.8%는 생활보호대상노인을 위한 노령수당 지급과 시설보호에 사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인구집단 중에서 사회적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이 노인인구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노인인구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최우선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 □ 2천년대를 대비한 외국인 노인 복지정책 동향 -고양곤 교수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 심신이 쇠약한 독거노인들의 생활대책, 병약한 노인들을 위한 장기보호문제, 의료보호에 지출되는 재정적인 부담 등 수많은 과제 해결을 위해 선진국들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들의 시설보호가 국가재정에 막중한 부담이 되므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강조한다. 또한 경비가 많이 드는 시설보호를 민영화해서 노인복지 재정조달을 좀 더 다양화하려는 복지다원주의 정책도 개발하고 있다.

이들 복지선진국들은 노인부양문제가 가정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정부양에서 사회복지정책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과 서비스의 효과성을 위해서 가능한대로 시설보호보다는 재가보호로, 질병이나 기능장애의 단

순한 치료보다는 예방 및 조기진단, 조기치료, 재활치료 중심으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을 위한 생활지원도 최저한도의 수준보다는 최적의 수준을 제공하여 모든 노인으로 하여금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사회적으로 통합된 노후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진국들은 적어도 국내 총생산량의 10-20%를 사회보장 프로그램 비용으로 사용하고, 사회보장 비용의 60-70%는 노인복지에 사용하고 있다. 이런 선진국들의 노력은 곧 고령화사회에 접어드는 우리나라의 노인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고난모임, 보안관찰법 폐지 기도회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대표 신경하 목사)은 28일 오후6시 30분 감리교신학대 웰치기념관에서 '보안관찰법 폐지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이 기도회에서는 김선명, 안학섭, 한장호씨 등 출소장기수들이 참석해 45년간의 감옥이야기와 출소후 보안관찰법에 의한 피해사례를 발표한다.

**<인권하루소식> 5백회 기념  
인간정보자료실 김 마련전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 **주최와 서화전 수입금 전액은  
인권정보자료실 건립기금으로  
쓰여집니다.**  
\* **티켓을 주위에 판매하시고 함께  
오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  
위에 티켓을 파실 수 있는 분은  
인권운동사랑방에 연락주십시  
오 여러분의 노력이 국내 최초  
의 민간 인권정보자료실 건립을  
앞당기게 됩니다.**

<인권하루소식 5백회  
발간기념 독자 사은행사>

- 일시: 10월14일(토) 오후 4시
- 장소: 알펜호프(숙대입구 전철역 하차, 전화 716-2244)
- 출연: 가수 원장연 (가곡 「금강」 주연)
-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홍보실(전화: 715-9185)

<이달의 주제-불처벌>

우리가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비극적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눈까미스'에서 재인용-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 서울 교사 5.18 특별법 제정 촉구

### 한총련은 총궐기 30만명 서명 돌입

서울지역 2백67개교 초·중등 교사 1천7백15명은 28일 '5.18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울교사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과 민주주의 정신에 가장 투철해야 할 문명정부 스스로가 사회 정의를 포기했다"며 "우리 교사들이 일으켜 세우고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교육 개혁도 참 배움과 가르침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 5.18 학살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 취소 △ 국민에게 사과 △ 정부 국회가 정기국회 회기 중 5.18 특별법 제정, 학살자 단죄 △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 수록 △ 개혁 실종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 진정한 사회 개혁에 매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서울지역의 교사들은 지난 18일부터 선언문 초안을 각 학교에서 발송, 27일까지 이에 동의하는 교사들의 서명을 모았으며, 정부 당국의 탄압을 우려해 교사선언 대표자는 선정하지 않았다.

서울지역 교사들의 집단적 선언은 지난 91년 명지대 강경대씨 폭행치사 사건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이날 서울지역 교사들의 선언은 지난달 30일 전남지역 교사 4백7명, 지난 22일 광주지역 교사 3천1백8명, 25일 전북지역 8백24명이 선언한 것에 이어 네번째다. 한 전교조 관계자는 "이미 선언에 참가한 교사들 외에 충남북 등에서도 교사들의 선언이 준비되고 있다. 이럴 경우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선언에 최소 1만여명 이상의 교사들이 참가할 것이다"고 말해 앞으로 특별법 제정 촉구선언이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5.18 관련 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저촉되는지를 조사하고 있어 선언교사들에 대한 징계파문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 <한총련의 동맹휴업>

한편,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정태홍 고려대 총학생회장, 한총련)의 5월 학살자 처벌을 위한 동맹휴업은 전국의 80여개 대학에서 전면적으로 들어갈 것이며, 20개교 이상은 부분적인 동맹휴업에 들어갈 것이 예상된다. 한총련은 28일 오전 10시 고려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1백

여개 학교에서 동맹휴업을 위한 학생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투표에 참가하는 학생 9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총련은 성명서에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학살자를 비호하는 김영삼 정권은 제2의 학살자"라며 "정기국회에서 김영삼 정권과 민자당이 특별법 제정을 거부한다면 전면적인 정권퇴진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총련은 △ 30일 전국 12개 시에서 진행되는 제5차 국민대회에 적극 참가 △ 10월 전·노 체포 결사대 투쟁과 특별법 제

정 촉구 국회의원 항의방문을 전개 △ 총선시기 국회의원 낙선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단체 감시·사찰 중단 요구 노운협 성명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 회(의장 김영곤, 노운협)는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에서 도청기가 발견된 것과 관련 18일 성명을 발표하며 사찰한 것은 단순한 정보수집이 아니라 김영삼 정권의 노동통제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진보적 연구단체 및 노동단체에 대한 감시,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관악경찰서는 27일 전담반을 구성, 도청기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

###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 인권정보자료실 기념 마련

##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 주점과 서화전 수입금 전액은 인권정보자료실 건립기금으로 쓰여집니다.

\* 티켓을 주위에 판매하시고 함께 오셨으면 고평갓습니다. 주위에 티켓을 파실 수 있는 분은 인권운동사랑방에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이 국내 최초의 민간 인권정보자료실 건립을 앞당기게 됩니다.

####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기념 독자 사은행사>

- 일시: 10월14일(토) 오후 4시
- 장소: 알펜호프 (숙대입구 전철역 하차, 전화 716-2244)
- 출연: 가수 원창연 (가곡 「금강」 주연)
-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홍보실(전화: 715-9185)

## OECD가입, 노동악법 개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편집자주>인권하루소식은 Human Rights Watch의 리처드 디커씨가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WEEKLY에 기고한 글을 실는다.

지난주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한국의 가입신청을 고려하기로 동의했다.

그러나 수락의 일부과정으로 OECD의 「노동조합자문위원회(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는 매우 민감한 주제인 한국의 광범위한 노동권 침해를 토론했던 세미나를 열었다. 크게 선전된 신한국의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한국의 억압적인 노동법에 의해 노동조합원의 체포와 수감을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은 빈번하게 비판해왔다.

한국은 열성적으로 OECD 회원이 되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노동조합과 OECD국들의 대표들뿐 아니라 독립적인 노동연맹(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의 대표자들과도 만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노동부장관은 세미나 참석을 보류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역동적인 동아시아국중 OECD의 회원국이 되려고 하는 최초의 국가이며, 이는 OECD가 처음으로 지역의 노동법과 절차를 회원국 가입인정과정의 일부로써 고려하는 기회이다.

OECD가 한국의 가입을 다루는 방식은 미래의 가입국들에 대해 OECD가 얼마나 주의깊게 인권정책을 고수할 것인가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1988년 이래로, 한국은 경제성장이 필수불가결하게 민주주의의 개혁과 인권존중을 이끈다는 인식의 보기로서 장려되어왔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게 중요한 모델로서 자주 언급되어왔다.

하지만 한국에서 여름동안 독립적인 노동조합의 지도자들과 학자, 변호사들과 가진 토론은 실재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게했다.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참여할 권리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에 대해

존중하는 추이는 여전히 심각하게 불충분한 상태로 남아있다. 30년간의 군부통치기간동안 생긴 법-특히 국가보안법과 남용적인 노동법-이 똑같은 상태로 남아있고 실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30년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지방자치제 선거기간 동안인 5,6월에 당국은 독립적인 노동조합지도자와 활동가들을 박해하는데 억압적으로 사용했다.

OECD의 세미나를 보이코트하기로 한 한국정부의 결정은 한국의 전과에 대한 OECD의 면밀한 조사를 방해하려는 데 목적을 둔 일련의 작전이었다. 한국은 독립적인 노동조합연맹의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으려고 압력을 가했다. 마침내, 비합법적인 노동조직을 언급하지 않고 한국의 참여를 허용하는 합의에 도달했지만, 결국 정부는 비공식적인 '참관자'들을 보내기를 선택하는 대신에 참석자체를 거절했다.

세미나 참여자들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와 유엔이 비판해온 한국의 노동법에 초점을 둔 토론은 생산적이어야 하는데 합의가 있었다. 아시아 휴먼라이츠워치는 OECD에 한국의 가입을 허용하는데 있어서 한국의 노동법과 권리실행을 주의깊게 다룰것을 촉구했다. OECD는 분명히 경제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규약의 서문에서 표현된 일련의 원칙들-개인적 자유의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에 뿌리를 두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자신의 세계화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세계경제무대에서의 광범위한 한국의 참여를 절실하게 추구하고 있다. OECD는 국제적인 노동기준의 존중을 강조할 기회를 갖고 있고 한국정부가 가입허용과정의 일부로 한국의 침해적인 노동법을 개정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서울에서 가진 The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meeting은 OECD국들이 한국정부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과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을 변화시키는 압력을 가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준다.

## 예술인, 박장로 석방촉구

고은, 강혜숙, 강수연 등 작가·음악·영화인 70여명은 28일 심장병을 앓고 있는 박용길 장로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76세의 고령로 병환중인 박장로를 강제 수감시킨 것은 유신시절에도 볼 수 없는 비인도적 사건"이라며 "정부가 통일정책 태도로 전환하는 첫 조치로 박장로를 석방할 것"을 주장했다.

### ○ 행사와 동정 ○

- 성회동대책시민연대(가칭)발족식
  - 일시:29일(금) 오전10시
  - 장소:명동 YWCA 2층
  - 행사내용:2심판결로 본 성회동 문화에 대해서(박원순)/2심판결에 대한 학내여론조사(서울대) 등
  - 문의:269-2962

- 5세아동 국민학교 입학문제 공청회
  - 일시:30일(토) 오후5시
  - 장소:인천 가톨릭회관 3층
  - 주요내용:국민학교교사·유치원교사·학부모가 보는 5세아동 국민학교 입학
  - 주최:유아교육을 위한 인천교사모임 (☎032-519-7770)

- 5.18문제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 및 전국대학 서명교수모임 발족식
  - 일시:30일(토) 오전10시
  - 장소:서초동 변호사회관
  - 발제:5.18문제의 정치적 측면과 해결방안(하일민)/5.18문제의 법적 쟁점과 그 해법(곽노현)
  - 주최:5.18내란 주동자 구속 기소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대학서명교수 모임

- 주한미군범죄피해를 위한 운동본부 집들이
  - 일시:10월2일(월) 오후5시30분
  - 문의:744-1211

- 「정치개혁시민연합」 창립대회
  - 일시:10월5일(목) 오후5시
  - 장소: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문의:786-0521

- 북경세계여성대회 보고회
  - 일시:10월6일(금) 오후2시
  - 장소:프레스센터 19층
  - 주최:한국여성NGO위원회 (☎ 269-2962)

- 박형규 목사 교회문집 출판기념회
  - 일시:10월6일(금) 오후5시
  - 장소:종로5가 기독교회관
  - 회비:2만원(기념문집 증정)
  - 문의:763-7990

<이달의 주제-붙처벌>

우리가 정의와 진실만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비극적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눈까미스'에서 재인용-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 5세아 취학반대, 유치원 공교육화를

### 오늘 인천교사모임, 공청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유치원교사들이 정부의 5세 아동 국민학교 입학 허용에 반대해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갖는다.

#### 전국 5.18 시위 격화 오늘 5차 국민대회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한총련의 동맹휴업 첫날인 전국의 1백10여개 대학에서 동맹휴업을 벌이고, 대학생들은 거리로 밀려나와 밤늦게까지 시위를 벌였다. 서울에서는 오후5시부터 명동, 종로, 대학로 일대에서 오후10시까지 "전두환, 노태우 처벌", "5.18특별법 제정"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오늘은 5.18국민위원회가 전국 주요도시에서 아래와 같이 제5차 국민대회를 열어 현 정부 들어 최대의 시위가 예상된다.

'유아교육을 위한 인천교사모임'(회장 김혜은, 이하 유인교)은 30일 오후5시 인천 가톨릭회관에서 5세아동 국민학교 입학에 대한 국민학교·유치원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연다. 교육부는 지난 8월31일 '국민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방안' 공청회를 갖고 만 5세아동 국민학교 입학 허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재 5세아동의 입학 허용방식으로 학교별 편성, 생년월일 순 등 두가지 시안을 내놓았는데 편성의 경우 탈락한 학부모의 불만이 높을 것을 우려해 생년월일 순을 더 선호하고 있다. 또 입학후 한달동안 집중적인 관찰과 개별지도 등을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토록 하고, 만약 적응하지 못할 경우 퇴학한 뒤 다음 해에 다시 입학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교사와 학부모들은 "만 5세 아동이 글

을 읽고 쓸 줄은 알지만 주의 집중시간이 짧아 딱딱한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국민학교 교실에 적응하지 못한다. 정부가 제시한 부적응학생 퇴학 뒤 재입학 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것"이라며 교육부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유치원에 국민학교의 40분의 1, 중·고등학교의 25분의 1정도 밖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만 5세 아동을 입학시켜 영제로 국민학교 입학 전에 다니는 유치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유아교육을 위한 전국교사모임'은 9월부터 교육부의 계획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알림>  
다음호는 공휴일 관계로 10월4일자로 발행합니다.

#### 출판인 석방 요구 국제엠네스티, 유덕렬씨등

'국제엠네스티'(AD)는 28일 북한 소설 『참된 봄을 부르며』 등을 출판, 지난 7월 국가보안법상 제7조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된 한 출판사 유덕렬(30) 사장, 김천희(29)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AI는 94년에서 95년까지 수백명의 학생, 재야운동가, 출판인, 학자 등 수백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다며 한국 정부에 항의하는 편지를 보낼 것을 회원들에게 지시했다.

#### 의사표현의 자유 국제회의 조용환변호사 출국

민변의 조용환(36) 변호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국가안보와 의사표현의 관계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키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차 27일 출국했다. 이번 회의는 '아티클 19'(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단체)이 주최하며, 저명한 인권운동가들이 참가하여 요하네스 원칙을 제정하게 된다.

#### 인권활동가를 위한 제2기 공개강좌(3회)

### 아내구타, 성폭력을 중심으로 살펴본 여성문제 -그 실태와 제안

- 일시: 9월30일(오늘) 오전 11시-오후1시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지하철 1·4호선 서울역, 4호선 숙대입구 하차)
- 수강료: 1 강좌당 5천원
- 문의: 인권교육실 김수경 간사(전화:715-9185)

## <인권하루소식> 95년 9월분 총목차(477-495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477	9/1	1	김선명씨 45년만에 어머니 만나/전남교사 4백여명 5.18불기소 항의성명/민주노총, 변형근로시 강제 반대성명
		2	상지대 김찬국 총장 해임, 학생 교수 강력 반발/상지대 사태배경
478	9/2	1	세추위 "민간단체 국제무대에서 국가이미지 손상시킨다"/박용길장로 심장질환 정밀진단 절실
		2	<자료>5.18 학살주동자 구속 기소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남교사선언문/한·일 장애인 공동선언문/이랜드노조 토론회, 노동자 권리 인정해야
479	9/5	1	장애노점상 구속·경찰폭행 규탄 집회, 생존권 보장요구/대전철도노동자 서건근씨 분신사망/신귀영씨 재심결정 항고 기각/박창희 교수 재판, "서태수씨 간첩활동 안해" 증인/연세대총학 '성정치' 공개강좌 마련
		2	<인권피해자들의 추석1> 유가족-무덤하나 가슴에 안고
480	9/6	1	추천고 최우주군 보충·자율학습 헌법소원 포기/분신한 서건근씨 분신이유도 모른 채 화장
		2	<인권피해자들의 추석2> 농성 50일째 명동성당 5.18 농성자들/광주연합 유귀숙씨 연행/참여연대 해고자 법정구속 판사에 항의서한 전달/검찰 박용길 장로기소, 전국연합 비난성명
481	9/7	1	유엔인권위 실무분과 이장형씨등 11명 자의적 구금결정
		2	<인권피해자들의 추석3> 철거민, 추석 생활 거름도 없어/필리핀 산재산업연수생 반한시위 한국상품 불매운동벌어/5.18 사회단체연석회의 구성/인의협 박용길 장로 응급입원 요구
		3·4	<창간 2주년 격려글 모음>-함께 걸은 2년, 인권의 파수꾼에서 길잡이로
482	9/13	1	제2차 세계주거권회의 민간단체 공동대응, 주거문제 인식 전환 기회/세계주거권회의 개최배경/정대협등 여성단체 일본 민간기금 위안부조사 반대/경찰, 시위대에 실탄 발사
		2	민교협 5.18 불기소는 직무유기, 검찰총장등 탄핵소추 요구/전국연합 검찰총장 내정자 교체 논평
483	9/14	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MBC 종합병원 장애인 생명경시" 사과요구/MBC 종합병원 '생의 조건'편 줄거리 요약/미군범죄운동본부 주한미대사 미군범죄 발인 사과 요구/전국연합 경찰 실탄 발사 항의성명
		2	엠네스티 국제대의원총회서 국내 인권침해 적극대응 결의/권종대 전 전국연합의장 투병중/여성들의 전화 '법정평등실현모임' 발족
484	9/15	1	제3차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 UN인권이사회 손종규씨 사건 구제요구/상지대 공대위 발족, 총장문제 파장 커져
		2	<손종규씨 사건자료>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쟁점과 진행절차/엠네스티 북한 황씨3형제 양심수 선정, 회원들에 긴급행동 요청
485	9/16	1	5.18 책임자 처벌 4차국민대회, 청원 잇따라 5.18 특별법 제정 움직임 가속화/여성단체연합 한 달간 북한 수재민돕기 캠페인
		2	<해설>손종규씨 사건 UN인권이사회 최종결정의 의미/손종규씨 사건경과/ 제3차 개입금지조항에 의한 구속·수배자 현황
		3	5.18 불기소에 대한 각계 반응

####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5차 국민대회 (9월30일 오늘, 각 지역 일정)

지 역	장 소	시 간
서울	강릉단 공원	오후2시
부산	부산역 광장	오후2시
대구	대구백화점 앞	오후2시
성남	성남네거리	오후4시
경기남부	수원역 앞	오후2시
충북	중앙공원	오후3시
광주	조선대	오후2시
전북	중앙성당	오후1시30분
경남	창동네거리	오후4시
울산	주리원백화점 앞	오후4시
대전충남지역	한남대	오후3시

<인권하루소식> 95년 9월분 총목차(477-495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486	9/19	1	포천 병원적출물소각장 사태 경찰 군의회 조사 중 난입 수배자 연행/병역특례 해고자 민주당 농성 군문제해결 복직실현 요구/박용길장로 재수감
		2	5.18 특별법 제정 천주교 12만3천여명 서명 국회청원/<자료>천주교인 5.18 특별법 제정 청원서
487	9/20	1	5.18 특별법 학생농성 시위가열 한총련 9월말 동맹휴업/암사동 철거현장 경찰 옷벗겨진 여성주민 그대로 연행/부산대 자주대오 수배자 2명 구속
		2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유효"/포천병원적출물 소각장 사태위기 주민저지로 공사일단 연기/전국연합 박용길 장로 재수감 비난성명
488	9/21	1	5.18 불기소 항의 범국민적 투쟁발전 청년단체 농성, 의료인 가운시위등 적극행동
		2	암사동 철거현장 연행 여성주민 "강제로 옷벗겨 희롱했다" 주장/여성민우회·일본생활클럽 여성정치진출 다짐/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민주노총계 정갑득씨 당선/민주노총 하반기 제3자개입금지 철폐 집중
489	9/22	1	5.18국민위 특별법 청원 방송통신대 교수64명 특별법제정 촉구/지탁연등 민간단체 '5세 아동입학' 반대/박용길 장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2	<통신원 특별기고> 5월정신의 예술적 승화-안티비엔날레
490	9/23	1	5.18 특별법 청원 잇따라 5.18국민위 28만여명 서명부도 전달/엠네스티, 국보법 개정요구 항의행동 요청/노인의 전화, 참여연대 노인복지법·생활보호법 개정 공청회
		2	<인터뷰>엠네스티 페트리 알·프랭크 제니씨 - 엠네스티 캠페인의 전략과 방법
491	9/26	1	서울구치소 박장로에 비인도적 처우, 병사없고 심장병 환자 독방 수감/부산목회자·예장장로회 5.18 항의성명/유가협 10차총회 열사묘역 성역화등 결의/김용태·이승환씨 연행 국보법위반 혐의
		2	성폭력상담소 성희롱예방비디오 시사회, 직장상사 직장내 성희롱 주범/이랜드그룹, 뉴설악호텔 집단해고/민교협, 상지대 감사요청
492	9/27	1	재야노동연구소에 독일제 고성능 도청기 발견/장애인전용복지공장은 분리고용정책-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장애인 고용 문제점/내곡동 안기부 구속1호 89년 전대협 정책위원장
		2	<자료>정부 농민감시·탄압 사례 - 농민탄압 공무원에 무더기 표창/불교인권위 장기수복송 판문점 회담 제안/외국인노동자문제 입법청원 추진
493	9/28	1	현중 노조위원장 징계위 회부, 노사대립 재연 조짐/5.18 항의시위 주말 최대예상 국민대회 서명운동 계속/성폭행피해자 피고석에, 봉천동 전철순씨 재판/병역특례해고자 국방부 항의방문
		2	<지상중계> 성공회대 주최 '한국의 노인과 세계의 노인' 세미나 - 고령화사회 노인 삶의 질 향상 대책 절실/고난모임, 보안관철법 폐지 기도회
494	9/29	1	서울교사 1천7백여명 5.18특별법 제정 촉구, 한총련 총궐기 30만명 서명돌입/노우협 노동단체 감시·사찰중단 요구
		2	Human Rights Watch 리처드 디커-OECD가입 노동악법 개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예술인 80여 명 박용길 장로 석방촉구
495	9/30	1	5세아 취학반대, 유치원 공교육화를-오늘, 인천교사모임 공청회/전국 5.18 시위 격화, 오늘 제5차 국민대회/엠네스티, 출판인 석방요구/의사표현의 자유 국제회의, 조용환변호사 출국
		2,3	<인권하루소식> 95년 9월분 총목차(477-495호)

# 인권하루소식

95년 10월

(제496호 - 제500호)

<이달의 주제-불처벌>

모든 국가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에게, 책임자를 재판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배상을 받도록 할 빛을 지고 있다.  
-반 보편, 유엔인권소위 특별보고관-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 핵발전소, 생존권 위협

### 전남 영광 주민들, 핵발전소 추방 결의

최근 핵연료봉의 파손으로 인해 영광핵발전소 4호기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 2달여만에 알려지자 영광지역 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광핵발전소추방협의회」(회장 박재완 신부등 2명)는 1일 이번 사고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국전력(이

하 한전)이 핵 발전소에 대한 정보를 통제해 주민들을 위협에 빠뜨린다”며 “△주민들과 공동 정밀조사 △실제 대피훈련 실시 △방호약품 지급 △영광3,4호기 가동중지 및 5,6호기 추가건설 반대 △대체 에너지의 적극개발” 등을 촉구했다.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도 2일 “더이상 방사능 공

포에 시달릴 수 없다”며 원전 안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영광군의회(의장 서영진)는 17일 영광원전특위를 구성해 사고원인 규명과 안전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신자 3백여명은 지난 1일 오전 11시 전남 영광군 영광핵발전소 정문 앞에서 이번 사고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한국전력은 지난 7월 30일 다량의 방사능이 방출되었는데도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해 온 경위를 밝힐 것과 본부장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며 2시간동안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농성을 마친 후 영광 시내에서 시민들에게 핵발전소의 폐해와 방사능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를 펼쳤다.  
또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로 바다가 오염돼 조업을 할 수 없게 된 영광지역 어민들은 오는 2-4일 영광 원전 정문 앞에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문제가 된 영광 4호기는 지난 6월 3일 상업운전을 목표로 시험운전에 들어갔으나 지난 7월 30일부터 우라늄이 새어나와 방사능 농도가 5백배 가량 높아져 가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이다. 현재 사고원인 규명과 보수작업을 벌이고 있는 과학기술처는 피해정도에 대해 “방사능이 밖으로 누출되지

나 근무자들이 방사능에 쬐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 가정폭력방지 바자회 7일, 한국여성의 전화등

「한국여성의 전화」, 「제일기획」, 「순필름」이 공동주최로 가정폭력피해자들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기금마련 바자회'를 연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고백한 영화 '개 같은 날의 오후' 관객 35만 돌파 기념의 뜻이 있는 이 바자회에는 영화에 출연했던 손숙, 하유미, 정선경, 김보연, 송옥숙 씨 등이 나와 자신의 소장품과 상품을 판매한다.  
바자회는 7일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 을지로 명보극장 광장에서 펼쳐지며, 수익금 전액은 한국여성의 전화에 기탁된다.

### “잘못된 성문화 바로잡자” 성희롱 시민연대 결성

경실련, 서울 YWCA, 여성노동자회 등 27개 시민·여성단체들이 「성희롱대책 시민연대」(공동대표 오재식 등 6명, 시민연대)를 구성, 지난 29일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연대는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서울대 성희롱 사건의 올바른 판결을 받아내고, 우리사회에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성희롱 문제의 전 국민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활동한다.  
시민연대는 내년 1월 세계 각국의 여성운동가와 법률가들이 참석하는 국제적 성희롱심포지움을 개최할 예정이다.

## 10월 5.18 파고 더 거세진다

### -내년 총선까지 지속적으로 정치쟁점화-

9월말의 한총련의 동맹휴업과 5.18국민위 주최의 제5차 국민대회는 5.18특별법 제정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확실히 자리잡게 만들었다. 재야단체들은 이에 더해 10월 한달내내 지속적인 5.18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5.18 국민위를 확대한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5.18 연석회의)는 10월 동안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5.18연석회의는 지금까지 광주의 「5.18민중운동연합」 회원들로 유지된 명동성당 농성을 각 단체 책임자에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고, 농성 중에는 재야의 지도급 인사들도 대거 참여시킬 방침이다. 또, 국무총리 면담, 각 지자체 단체장·국회의원 서명을 조직하여 정치권을 압박하고, 민자당사를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2차 서명운동도 애초의 계획을 연장, 이달 중순까지 진행하고, 23일 2차 국회청원을 할 예정이며, 이런 성과들을 모아서 11월 4일경 제6차 국민대회를 전국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총련은 '전·노 체포결사대'를 운영하면서 김영삼 정권 퇴진운동으로 투쟁단계를 높이겠다고 버리고 있다. 한총련은 청와대 항의방문 계획과 함께 다시 오는 11월 초 동맹휴업을 진행한다.

9월 30일 서명에 참가한 6천 4백여명의 교수들은 오는 총선까지 상시적인 모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 교사들의 서명도 2만명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련의 계획들을 갖고 있는 재야단체들은 오는 14일 김영삼정권 실정 규탄대회를 가지며, 내년의 총선에서 현정권에게 패배를 안긴다는 목표를 점차 확실히 하고 있어 5.18로 달구어진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

# 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헌

##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 판결문(요약)

우리 헌법은 제32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만 제한할 수 있다. 개인의 정보의 수집과 기록은 합리적인 목적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 정보가 수집되어야 하고 수집된 자료가 정치 목적과 같은 다른 목적에 악용되거나 유용될 가능성이 배제되어야 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의 수집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하여야 하며, 그 수집되는 자료에 있어서도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강제적 수단에 의하거나 은밀한 방법에 의한 정보수집, 기망의 수단을 통한 정보수집 등은 금지된다. 개인정보의 수집은 본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야 하며, 또 개인정보시스템이 원칙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본인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보안사의 직무범위에 관한 각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보안사 소속 군인과 군무원 등은 사령관 등 소

속 상관의 명을 받아 군사보안이나 군방첩,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 처리 그리고 군 수사기관으로서 위 법규소정의 군사법원 관할범죄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이 사건 사찰행위는 사찰대상이 군사보안이나 군방첩 등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정치인, 법조인, 교수, 종교인, 언론인, 재야인사 등인데다가 사찰내용 또한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시적인 개인정보수집 및 동향파악이라는 점에서 보안사의 위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보안사의 이 사건 자료 수집 및 관리가 극히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또, 시간적 지속성을 가진 체사상·신조 등을 포함하여 개인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가 수집되었으며 그 수집방법에 있어서도 미행, 망원, 탐문채집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보안사의 이 사건 민간인 사찰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또는 위법한 것이다.

보안사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의 위법한 사찰행위는 원고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하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자유로운 의사발현과 행동구현에 대하여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앞으로 사찰 등의 피해의식에서 헤어나기 쉽지 않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함이 상당하다.

95.9.29.  
재판장 판사 채영수 등

# 주/간/인/권/호/름

(9월25일부터 10월1일까지)

<9월25일(월)>

강창성 의원, 자살·폭행 등으로 현역군인 매년 5백여명 사망 폭로/「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고성능 도청기 발견/대법원, 부실공사 감독공무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 판결/유엔 특정제재식 무기 제검토회의,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려-지구상에 1억2천만개의 지뢰 매설, 20분에 1명씩 사망

<9월26일(화)>

감사원, 30대 재벌기업 장애인 고용률 0.23%로 장애인 고용 기피 밝혀/유럽인권재판소, 영국의 IRA군 사살 부당-독일의 공산당원 공직금지지는 표현의 자유 위배라고 판결

<9월27일(수)>

야당 의원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진 합참의장 퇴진 촉구/박영식 교육부장관, 삼시대 관선이사회 대폭 교체 방침 밝혀/농촌진흥청, 농민의 70% '농부중'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인하대 교수, 서울대 교수,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등 5.18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구 유고지역 분쟁당사자들, 평화원칙에 첫번째 합의

<9월28일(목)>

공로명 의무부장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인권개선 촉구, 북한측 대표 반박권 행사-국보법 철폐 주장/서울교사 1천7백여명, 5.18특별법 제정 촉구/재미한국청년연합동맹의동포 2만여명 5.18특별법 서명/민주노동(준), 근로자 파견법등 저지 농성에 공동투쟁 제의/문화예술계 인사 81명, 박용길 장로 석방 촉구 성명 발표

<9월29일(금)>

한총련, 70여만명 5.18 동맹휴업 참가, 3만명 거리시위/과학기술처, 영광원전 4호기 원자로 연료봉 파손 밝혀/서울지법, 보안사 민간사찰은 위법 판결/경복교사 2백60여명, 5.18 진상 규명 권의서 청와대에 제출/일본 검찰, 오키나와 성폭행 미군 3명 형무소 수감, 오키나와 지사 미군기지계약경신 거부

<9월30일(토)>

제5차 5.18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 전국 13개 도시에서 수만명 참가/5.18 서명교수 6천4백여명 '전국대학 서명교수 모임' 발족/제주지법 민사합의12부, 경찰의 변호인 비밀전거 거부 손해배상 판결/금정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유골 3백70여점 발굴

<10월1일(일)>

5.18 영화 『꽃잎』 제작팀, 광주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 시민과 학생 5천여명 참석, 80년 당시 재현

<해설>

지난주는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와 동맹휴업이 연이어졌다. 국감현장에서도 5.18 불처벌을 질타하는 야당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5.18 문제에 대한 항의는 이제 거의 국민 전체층이 모두 참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부 들어서 재야 사회운동권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마 처음일 것이다. 그만큼 광주문제는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정치쟁점으로 부활했다. 그럼에도 정치 지도자들과 지도급 인사들의 적극적인 참가가 두드러지지 못하다. 과거에 정치적인 이유로 용서와 화합을 외쳤던 많은 이들은 이런 사태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5월 문제는 항쟁의 주역뿐만 아니라 80년대를 거쳐 역사적인 과제로 남겨져 있다. 용서와 화합의 전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고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적 행동에 동참해야 한다.

<이달의 주제-불처벌>

모든 국가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에게, 책임자를 재판하고 고등당한 사람들이 배상을 받도록 할 빛을 지고 있다.  
-반 보편, 유엔인권소위 특별보고관-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 종암서 경찰, 대학생에 총기 난사 번3동 철거현장에서, 주민들 책임자 처벌 요구

경찰이 철거지역에서 봉 사활동을 하던 대학생의 옷을 모두 벗기고 수갑을 채운 채 끌고 다니며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종암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4일 새벽 4시경 드림랜드 후문쪽 번3동 철거지역 강제철거에 대비해 규찰을 돌고 있던 설영덕(한성대 산업공학과)씨를 강제연행하려다 이같은 난동을 저질렀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이승현(한성대)씨는 "규찰을 돌기 시작한 새벽3시경부터 자가용 한 대가 주위를 맴돌더니 갑자기 차를 세우고 규찰대를 쫓아왔다. 놀란 학생들이 도망가자 그중 설씨를 붙잡아 마구 때리고 옷을 벗겨 나체로 만든 뒤 수갑을 채워 50m정도 끌고 갔다"고 설명했다. 경찰들은 학생들이 설씨를 놓아 줄

것을 요구하자 15m 전방에서 학생들을 겨냥해 공포탄 4발을 발사한 뒤 설씨를 놓아둔 채 황급히 돌아갔다. 설씨는 등에 심한 상처를 입었으나 이 과정에서 받은 충격으로 현재 병원도 가지 못하고 경찰의 수갑을 그대로 찬 채 연고를 바르는 등의 가벼운 치료만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수갑을 채우고 총기난사까지 벌인 것은 명백한 살인미수"라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 여성 평생평등고용 확보 목표 여성단체, '고용평등의 달' 다양한 행사

10월 '고용평등의 달'을 맞아 「한국여성단체연합회」(이하 여연)등 여성단체들이 여성의 평생평등노동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13일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고,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평등의 진화 상담원 교육으로 고용평등 관련 법체계와 내용, 상담사례와 상담기법 등에 관한 준비를 한다. 「여성민우회」에서는 21일 고용평등감시단을 발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지방에서도 행사준비가 한창이다. 광주여성노동자회에서 지난달 20일부터 '남녀가 평등한 사회, 직장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좌를 진행중이고, 부산에서는 오는 31일 노동부, 사용자, 노조, 여성계가 참가하는 '부산지역 임시직 여성고용의 현실과 문제점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 임시고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고용평등의 달은 노동부와 정부제2부장관실에서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안에 따라 남녀차별적인 고용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자파견법'이 통과 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될 경우 파견근로자로 일할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인 상황에서 여성의 고용불안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연은 4일 고용평등의 달을 맞아 근로자파견법 도입의 즉각 중지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간접차별금지, 성희롱 예방 및 규제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여연은 이번주부터 근로자파견법의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계속되는 경찰폭력과 무도한 공권력 남용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경찰폭력과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종암경찰서측은 "이 지역에서 강도신고가 들어와 출동했으며, 학생들이 화염병을 던져 총을 쏘았다"고 주장했다.

번동 경찰 총기난사와 같은 경찰폭력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도 경찰은 '고려대 서강캠퍼스 총기난사사건' '암사동 철거주민 나체연행' '5.18 대회 장 난입' 등 지나친 공권력 남용을 행사했으며 책임자 처벌에 있어서도 미온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박용길 장로, 첫 재판 거부 "국보법으로는 재판 받을 수 없어"

서울지법 형사4단독(판사 조승곤)은 4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21호 법정에서 박용길(76)장로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열려 했으나, 박장로는 '국보법으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했다. 박장로의 법정대리인 한승헌 변호사는 "박씨는 국가보안법을 법률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 법으로 재판하는 것은 모독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박장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문을 하고자 북한을 방문한 것이 죄가 될 수 없으며, 설사 보법으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재판 25일 오후4시.

## 주요 공판 안내

- 6일(금)
  - 최승기, 국보법위반, 10시, 서울형사지법 5부, 422호
  - 유덕상(한통노조위원장)의 2인, 업무방해·폭력, 10시, 서울형사지법 6단독, 321호
  - 문순덕, 국보법위반, 2시, 서울형사지법 23부, 311호
  - 서승현, 국보법위반, 2시30분, 서울형사지법 23부, 311호
  - 김진희, 국보법위반, 3시, 서울형사지법 23부, 311호

# 참여자 중심의 인권교육 공동훈련

## -ARRC, 태국에서 인권교육가 워크샵 진행-

인권교육가를 위한 공동훈련의 장(Training for Human Rights Trainers Workshop)이 지난 9월21일에서 26일까지, 6일동안 태일랜드의 촌부리에 열렸다.

필리핀, 한국,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9개국에서 30여 명이 참여한 이 워크샵은 '인권교육을 위한 아시아지역정보센터'(ARRC)에서 개발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인 아디다스(ADIDAS)를 실험·평가하고 아시아지역 활동가들에게 널리 보급하고자 열린 것이다. 이 워크샵은 '인권의 개념과 철학', '여성권과 인권', '선주민권과 인권',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주제를 아디다스방법론에 입각한 모듈(module: 특정주제를 교육할 목적으로 아디다스의 각 단계별로 제기할 질문과 필요한 자료 등을 계획한 틀)의 실행과 이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워크샵의 특징은 단 한 차례의 강의도 없이 전과정이 참여자들의 활동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있다. 참

가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각종 활동을 통해 중심역할을 하면서 자기 나라와 지역의 인권상황을 고발하고, 그 원인과 대책을 표현했다. 참여자들의 활동은 게임, 역할극, 무언극, 신문제작, 포스터제작,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워크샵의 주진행자인 펠리스(Felice I. Yeban, 필리핀), 아난(Arnan De Leon, 필리핀), 쿠쉬드(Khursheed Erfan Ahmed, 방글라데시)씨가 시중 강조한 것은 참여자 중심의 교육이었고, 참여자들의 반응을 읽어내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이 공개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완성품이 아니며 지속적인 이용과 평

가 속에서 계속 다듬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워크샵의 기본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은 마지막날 있었던 평가와 대안모색의 자리에서 아디다스방법론의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정보 교류, 정부의 인권교육정책 촉구, 아디다스방법론의 보급과 교육가의 양성, 각 지역에서 같은 내용의 워크샵을 열 것 등을 활동과제로 공유했다.

한국에서는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대표로 「인권운동사랑방」의 류은숙씨와 「불교인권위원회」의 혜진 승려가 참여하였다.

### 참여자들의 활동은

게임, 역할극, 무언극, 신문제작, 포스터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져

## <해설> 아디다스(ADIDAS) 인권교육 방법이란?

아디다스(ADIDAS)란 활동(Activity), 토론(Discussion), 정보의 투입(Input), 심화(Deepening), 분석(Analysis), 종합(Synthesis)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 방법론을 말한다.

이 기술은 파울로 프레이리의 저서 「민중교육론」의 사상에서 이끌어낸 것이다. 이 기술의 주요 핵심은 전 교육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중심적이고 역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교육자는 학생들 중의 하나일 뿐이며, 학생들의 접근과 참여를 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ADIDAS방법론은 민중교육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지역에 근거한 사회분석의 도구이다. 이 방법론은 지역사회 조직화와 지역사회의 생동감과 분리될 수 없다.

ADIDAS의 각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의 전과정은 항상 '활동'으로 시작된다.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그 활동이 보여주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과정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적합한 분위기를 창조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의 예로는 합창, 우화분석, 역할극, 무언극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토론'은 전단계에서의 '활동'에 대한 참여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명료화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느꼈는가? 무엇을 보았는가?" 등을 묻고 대답하거나 활동에서 제기된 의문점들을 토론한다.

셋째, '투입'은 주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가되는 사상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관련된 인권선언조항이나 국제인권조약, 구체적인 통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넷째, '심화'와 '분석'은 '투입'에 대한 참여자들의 반응을 더 심도있게 토론하는 것이다. 전단계의 토론에서 문제의식을 이끌어냈다면 '심화' 단계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게 된다. 이 단계를 통해 참여자들은 주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주제를 실제 사회현실과 연결시킨다.

마지막으로, '종합'단계는 전체과정을 통해 습득한 것을 어떻게 참여자들의 실제상황에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다.

이러한 ADIDAS의 각 부분을 반드시 엄격하게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학습의 과정이 참여자들의 능동적인 역할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르치는 기술은 학습과정에서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보다 조직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일 뿐이다. ADIDAS방법론은 필리핀에서 대중교육과 관련된 몇몇 집단들이 이용해 왔으며, 「인권교육을 위한 아시아지역정보센터」(ARRC)에서 발행한 인권교육패키지로 종합되어, 이번에 태일랜드에서 열린 '인권교육가'를 위한 공동훈련의 장'을 통해 아시아 국가에 널리 소개된 것이다.

##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인권정보자료실 기념 마련

###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 주점과 서화전 수입금 전액은 인권정보자료실 건립기금으로 쓰여집니다.

\* 티켓을 주위에 판매하시고 함께 오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위에 티켓을 파실 수 있는 분은 인권운동사랑방에 연락주시시오 여러분의 노력이 국내 최초의 민간 인권정보자료실 건립을 앞당기게 됩니다.

###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기념 독자 사은행사>

- 일시: 10월14일(토) 오후 4시
- 장소: 알펜호프(전화 716-2244)
- 출연: 가수 원창연 (가극 「금강」 주연)
-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홍보실(전화: 715-9185)

### <이달의 주제-붙쳐벌>

모든 국가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에게, 책임자를 재판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배상을 받도록 할 빛을 지고 있다. -반 보벤, 유엔인권소위 특별보고관-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 외국인노동자 88명 산재 보상 청구

### '귀향모임', 1년여 동안 피해 사례수집 결실

산재를 당한 후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추방당한 동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 88명이 5일 노동부에 산재보상 청구서를 제출했다. '귀향한 외국인 노동자 체불임금, 산재보험금찾아주기 시민모임'(귀향모임)은 지난해 5월부터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등 4개국을 방문하여 피해 사례 2백여 건을 수집, 이중 지난해 9월 22명의 산재 보상을 요구한데 이어 이날 다시 산재보상 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이날 산재보상 명단에는 네팔 30명, 방글라데시 14명, 스리랑카 2명, 필리핀 42명 등 총 88명이 포함되었고, 이중 14명은 지난해 1차 산재보상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다.

이번에 산재보상 청구를 한 이들 중 스리랑카 자야 세나(S.A. Jayasena)씨등 14명은 사망자이고, 필리핀 피터 로잘레스(Peter P. Rosales)씨등 59명은 산재로 부상당한 경우이고, 1명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

귀향모임에 의하면,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취업중 산재를 당했거나 또는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추방당한 노동자들이 모임을 결성하고, 한국정부를 상대로 장기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9월6일

필리핀 노동자들이 산재보상과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의 철폐를 요구하며 첫 반한시위를 벌인 것은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 활동의 일면을 보여준 것이었다.

귀향모임은 "정부가 피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방치한다면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 "국제적인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귀향모임은 △정부가 산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상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 △임금체불 및 체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치료하고, 보상없이 추방한 기업주들을 처벌할 것 △1차 심사 때 불충분하게 심사 결정한 사례에 대해 재심사하고, 기업주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귀향모임이 1차로 외국인 산재 노동자의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자 94년 9월18일 동남아 14개국 공관을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 국내 노동자에 준하는 산재보상을 해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14개국 공관을 통해 산재피해를 접수한 것은 겨우 10여건에 불과해 정부가 형식적으로 외국인 산재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외국 정부와 민간단체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 박장으로 석방대책위 농성

'박용길 장로 석방대책위원회'(위원장 김삼근 등 3명, 이하 대책위) 소속 회원들은 5일부터 기독교회관 7층에서 박장로 석방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앞으로 박장로의 석방을 위해 UN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 여론조성과 범국민적 서명운동 대중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들은 오후4시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박장로 석방 촉구대회'를 가졌다.

### 전교조 충남지부, 자민련에 항의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충남지부(지부장 최교진), 대전지부(지부장 문성호)는 5일 '자민련

주연합'(이하 자민련) 김종필 총재 앞으로 '전교조 비방발언'과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자민련 대전지부 사무실 앞에서 항의시위를 가졌다.

김총재는 지난달 29일 충남 아산지구당 개편대회에서 보수세력의 단합을 강조하며 "전교조를 지지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이념의 색깔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사망감보다는 사적 감정을 갖고 학생들에게 사상교육을 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공개질의서에서 "김총재의 이런 상식과 역사를 거스르는 망언에 당혹스러움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며 전교조가 불순한 사상교육을 한다는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김총재에게 12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공개적인 자민련 반대활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 인권활동가를 위한 제2기 공개강좌(4회)

## 북경여성대회 평가와 전망

- 강사: 이상덕(한국 NGO위원회 총무)
- 일시: 10월7일(토요일) 오전 12시-오후2시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지하철 1·4호선 서울역, 4호선 숙대입구 하차)
- 수강료: 1 강좌당 5천원
- 문의: 인권교육실 김수경 간사(전화:715-9185)

☞ 강의시간이 11시에서 12시로 늦춰졌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특별법 제정촉구 서명운동 동참을 바라며

<편집자주> 4일 대한변협(협회장 김선)은 사상 최초로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의 이번 행동은 5.18 학살자 처벌과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많은 이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대한변협의 서명운동 취지문을 실는다.

본 협회는 12.12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이를 규탄하면서 그 결정의 최소를 촉구한 바 있고(94.11.18자 성명서), 5.18 광주시민대학살사건을 포함한 80년 당시의 헌정파괴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책임추궁을 촉구한 바 있다(95.5.18자 성명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7월18일 공소권이 없다는 기상천외의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불기소처분을 감행하였다.

검찰의 이 결정에 대하여 최근 어떤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4.1%가 이에 반대하고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이래도 우리 검찰이 국법을 엄정히 수호하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라고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본협회는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이 대학살사건을 불기소처분한다는 것은 불법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등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저한 제수사를 통하여 책임자를 엄벌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95.7.20), 금년 8월10일에는 국회에 같은 취지의 입법청원을 한 바 있다.

그후 다수의 시민단체가 우리의 견해에 동조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입법청원을 했으며, 이제는 87년 6월10일 민주항쟁 이후 처음으로 6천4백명이 넘는 대학교수와 1만명이 넘는 초·중·고 교사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였고, 수많은 학생과 종교인들도 같은 취지의 서명운동, 단식농성, 그리고 9월30일에는 3만여명의 학생, 재야, 시민단체 회원들이 거리행진과 시위를 하였다. 혹자는 이 중대범죄를 시일이 갈

수록 증거가 인멸되기 마련인 후세의 역사에 그 평가를 맡기자고 한다. 이 말은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말고, 역사 속에 묻어버리자는 말과 통한다. 미개지역을 제외한 세계 어느 국가, 어느 민족이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주장하는 수백명의 동족을 학살한 사건을 후세의 역사의 판단에 맡긴다는 이유로 불문에 부친 사례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영원히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정부의 정통성도 확립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재야법조인들은 이와 같은 민족적인 중대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우리는 학살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날까지 정의와 민족을 위하여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법치주의 구현의 선봉장일 수 밖에 없는 우리 재야법조인들은 그 투쟁의 일환으로 5.18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영구보존의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위 학살책임자들의 책임추궁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미래에도 계속 오늘의 문제로 남아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결국 혁명적 조치에 의하여 해결될 수밖에 없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에 우리는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권력의 남용에 중지부 찌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므로 우리 협회 소속 변호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서명에 동참해 주리라 확신하며, 법과 정의의 수호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는 우리는 이에 대한 무관심은 불의와의 타협에 다름 아님을 깊이 확인해야 할 것이다.

상명여대 교수 5.18 특별법 성명

상명여대 강영주(국어교육학과)교수등 30명은 5일 성명을 발표,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취소할 것△국회는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것 등을 요구했다.

○ 행사와 동정 ○

□ 북경세계여성대회 보고회  
· 일시:6일(금) 오후2시  
· 장소:한국프레스센터 19층  
· 보고내용:NGO포럼보고/정부회의 보고/UN행동강령 주요부분 보고/북경세계여성회의 이후 한국여성운동 전략 등.  
· 주최:한국여성NGO위원회 (☎423-5355)

□ 노동조합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일간 말' 독자한마당  
· 일시:7일(토) 오전10시-오후10시  
· 장소:세종문화회관 뒤편 로얄빌딩 지하 마로니에호프(☎ 737-0850)  
· 문의:322-0011

□ 내일을 여는 큰 잔치-「참여연대」 일일주점  
· 일시:7일(토) 오후1시-10시  
· 장소:울지로2가 베를린호프  
· 문의:769-8364

□ 「산업해노동자협의회」 창립 5주년 기념식  
· 일시:7일(토) 오후6시  
· 장소:종로성당 3층  
· 문의:868-2379

□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준) 창립대회  
· 일시:9일(월) 오후2시-5시  
· 장소:홍사단 강당  
· 행사내용:1부-창립기념토론회:세계주거회의의 취지와 내용, 인간주거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한국에서의 주거권 실현(하성규)/2부-창립대회  
· 문의:3673-3031

□ 주간 전국연합통신 구독안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주간전국연합통신 구독을 받는다. 1년 구독료 5만원(구독료 2회분할 가능) 통신이나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문의 747-4364.

□ 포럼2001 영상교육자료 안내  
「포럼2001」이 11월11일 민주노총의 건설을 앞두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현황과 민주노총, 산별노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민주노총의 상과 건설과제에 대한 고민과 토론의 기회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영상교육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상영시간은 총 77분, 가격은 2만원.문의전화 747-8898.

□ 「민중정치연합」과 「진보정당추진위원회」가 통합, 「진보정치연합」으로 새롭게 변신했다.  
전화번호: 323-4964-5  
팩스번호: 323-3275.  
주소: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26-2 푸른산빌딩 2층

<이달의 주제-불처벌>

모든 국가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에게, 책임자를 재판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배상을 받도록 할 빛을 지고 있다.  
-반 보번, 유엔인권소위 특별보고관-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대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여성의 평등 실현 전략 마련”  
한국NGO위원회, 북경 세계여성회의 보고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 세계 인권문제로 보고 행동강령으로 채택하는 성과를 낳은 북경 세계여성회의 보고회가 「한국NGO위원회」 주최로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4만여 명이 참여한 북경회의는 20년에 걸쳐 여성의 평등, 국가발전,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할 행동계획과 북경선언문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회의참가 보고, 유엔행동강령 주요 부분 보고, 페널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8월30일-9월8일까지 열린 NGO포럼 참가보고에서 이연숙(한국NGO위원회 공동대표)씨는 전세계 2백여국에서 2만6천여 명이 참가해 하루평균 5백차례씩, 회의기간에 총 5천여 차례의 다채롭고 폭넓은 행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여성문화기획의 사물놀이팀의 활약을 비롯해 한국 NGO 활동은 최고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간 국제무대를 중심으로 한 정대협의 활동은 정부간 회의에서 행동강령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또한 행동강령 중 ‘여성어린이’의 차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동성연애자의 문제, AIDS 환자의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한다.

NGO포럼에 뒤이어 9월 4-15일까지 열린 정부회의에는 1백89개국 정부대표 5천7백여명을 포함해 1만3천 명이 참가했다. 회의를 통해 향후 5년간 각국이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주요 관심분야로 12가지 분야가 선정되었다. ①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빈곤의 부담 ②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 불평등과 부적절함 ③여성과 보건 ④여성에 대한 폭력 ⑤무력갈등 상황 ⑥경제구조와 정책에 있어서 불평등 ⑦정치 및 정책 결정에 있어서 불평등 ⑧여성담당기구의 미약 ⑨여성의 인권 존중 결여 ⑩미디어에서 나타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및 불평등 ⑪자연자원 관리와 환경보존에 있어서 불평등 ⑫여성어린이에 대한

차별 및 권리 침해 등이다(3면에 관련기사).  
정부는 북경회의의 후속 조치로 행동강령 번역·배포 및 국내이행 계획 수립과 주요 국제회의의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2천년까지 여성고용 30% 실현 요구  
정부와 정당에 건의문

「한국여성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연숙등)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의장 이미경등) 소속 65개 단체로 이루어진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할당제 여성연대)는 6일 각 정당과 정부에게 보낸 건의문에서 고용과 정치에 여성의 비율을 의식적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할당제 여성연대는 정부에게 △공무원 채용시 국가공무원과 지

방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2천년까지 30%가 되도록 할당제를 도입할 것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 신규사원 채용시 96년까지 20%, 2천년까지 30%가 되도록 단계적인 계획을 세울 것 △직업기술훈련과 재취업 훈련에서 남성직종 분야에 우선 30%를 여성에게 할당해 직종에 따른 성별 분리현상을 완화해 나갈 것 △정부와 공공부문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을 30% 이상 할당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각 정당에 대해서는 △15대 총선에서 여성 30% 공천할당제 실시 △전국구 의석 전부를 여성에게 할당 △정당의 각종 직급에 30% 여성비율을 보장할 것 △15대 총선에서 여성후보의 당선율 지원하는 강력한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9월의 세계여성회의에서 행동강령으로 ‘정책결정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비율을 2천년까지 50%, 95년 안에 30%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채택했음을 상기시켰다.

인권활동가를 위한 제2기 공개강좌(4회)  
북경여성대회 평가와 전망

· 강사: 이상덕(한국 NGO위원회 총무)  
· 일시: 10월7일(토요일) 오전 12시-오후2시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지하철 1·4호선 서울역, 4호선 숙대입구 하차)  
· 수강료: 1 강좌당 5천원  
· 문의: 인권교육실 김수경 간사(전화:715-9185)

☞ 강의시간이 11시에서 12시로 늦춰졌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 인권상황판’ <인권하루소식> 이 다음호로 지령 5백호를 맞습니다. 그간 함께 하고 저희 인권하루소식을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령 5백호는 특집으로 4면을 발행합니다.

### <현장 스케치> 80일 맞은 5월단체 명동성당 농성장 특별법 제정 때까지 무기한 농성!

가을 바람 부는 명동성당의 오후는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등의 구호를 쓴 플래카드가 입구에서부터 죽 늘어선 방문자들을 맞아준다. 광주의 5.18 관련단체들이 농성을 시작한지 80일이 되는 6일, 명동성당 입구 언덕배기에는 두동의 대형텐트가 자리잡고 있다.

김순곤(49, 5.18민중항쟁생상자동지회 총무부장)씨는 그는 이번 농성을 시작하기 전 평소 5월단체에서 일한다고 농성을 주는 직장이다 사표까지 던지고 올라왔다.

'이번에 특별법 제정을 못하면 5.18은 영원히 묻힐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다. 그는 80년 전남도청이 제업군에게 함락되던 5월27일 새벽, 지원동에서 체포되었다. 그후 상무대 영창에서 3개월여를 고문당했다. 왼쪽 어깨가 부러지고, 오른쪽 새끼 손가락이 깎이겨졌다. 왼쪽 다리마저 반은 부러다. 그가 3개월만에 폭도의 이름을 달고 상무대를 나섰을 때 5.18 당시 출생 2달도 안되었던 막내는 젖도 제대로 먹지 못해 마치 소말리아 난민촌의 어린아이 같았다. 그러더니 결국 막내는 발육부진,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장애인이 되어 고등학교를 특수학교에 보내고 있다.

"5.18이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상흔을 남겼지요. 하지만, 5.18이 광주시민에게만 상처를 남겼나요. 전국민이 피해 잡니다."

그래서 전국민을 피해자로 만든 5.18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로 농성장을 지킨다고 한다. 그 무더운 여름의 땀과 태풍을 고스란히 이겨낸 농성장의 5월단체 회원들.

처음 그들은 9월초 정기국회 개원할 때까지만 하려고 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5.18 열기는 끓어오르고, 당시 광주의 사진을 서울시민들이 보고 울분을 토하는 모습을 보고, 멀리 경상도에서, 충청도에서, 강원도에서 찾아오는 이름모를 국민들이 '이번엔 꼭 관철시키자'며 다잡아 주는 격려에 아직은 농성을 정리할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농성을 벌이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한다. 더욱이 이제는 서울의 사회시민단체들이 농성을 함께 하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

"5.18 특별법이야? 꼭 됩니다. 조금 늦어질 뿐이지 국민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반드시 되고 말 겁니다. 안 그럼 김영삼씨가 스스로 무덤 파는 일이지요."

요즘 어려운 것은 날씨가 추워지니 밤을 지내기가 힘든 것이란다. 열댓명이 매일밤 난로도 없이 지내야 하니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요즘 명동성당 5월단체의 회원들은 강연요청에 바쁘다. 하루에도 서너건씩은 꼭 초청을 받는다. 대학교에서, 집회장에서, 교회에서 그들을 부르는데로 그들은 5월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다. 강연이라고 할 것도 없다. 자신의 체험담을 그저 담담히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광주를 가까이 이해한다. 그것도 보람이다.

그와 대화를 마치고 거리 가판대에서 산 한 석간신문에는 검찰이 5.18위중수사도 국회가 고발하지 않는 한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명동성당 농성장 전화번호> 319-5147

### ◆ 인권간행물 ◆

□ 『인권의 역사』  
· 주요내용:문서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장제도 등장/근대시민헌법의 인권보장의 특색과 빛/근대시민헌법에서의 인권보장의 그림자/현대시민헌법과 인권/21세기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등. 212쪽.  
· 지은이:스기하라 야스오 · 옮긴이:석인선 · 출판사:한울(☎ 326-0095).

□ 51차 유엔인권위원회 참가보고서-외무부  
· 주요내용:51차 인권위원회 회의개요/우리대표단 활동/북한대표단 활동/북한인권문제 거론/의제별 세부회의 내용/채택된 결의안 등. 269쪽.

□ 자료집:한국의 노인과 세계의 노인-성공회대학교  
· 주요내용:노인인구의 변화추이/노인의 생활실태/현행 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의 주요 정책과제/인구의 고령화와 노인문제/선진국의 노인복지 대책/선진국 노인복지의 정책방향 등. 98쪽.

□ 『산재노동자소식』 9·10월호-소식지공동발행위원회(☎ 868-2379)  
· 주요내용:산재보상제도의 두가지 문제점과 행정부가 떠맡아야 할 책임/산재상식-삼풍붕괴사고관련 산재처리 등. 32쪽.

□ 『함께걸음』 10월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521-5364)  
· 주요내용:특집-한일 장애우 연대 마침내 시작됐다/내가 본 미국의 장애우 복지-사회통합을 추구하는 지원 고용 제도/장애우에 대한 무지와 편견 여전하다/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장애우 편의시설/기행문-북경여성대회 비정부 여성회의 참가기/사회복지 종사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등. 85쪽. 값 3천원.

□ 자료집:북경세계여성대회-한국여성NGO위원회  
· 주요내용:유엔 행동강령 주요부문 보고/여성의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의 참여 전략/경제세계화/여성성에 대한 폭력/여성과 환경분과 북경대회 참가 보고 및 향후 운동방향/평화를 위한 한국여성운동 전략/여성교 교육/종교와 여성/북경대회. 110쪽.

□ 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 주요내용:개발중의 이론적 전제/페미니즘의 과학비판/페미니즘의 여러 조류들/개발에서의 여성의 역사적 전개과정/경제학에서의 환경적 개혁/지속가능한 개발 논쟁/근본생태주의/사회생태주의/여성과 UNCED: 성공과 실패 등. 328쪽.  
· 지은이:로지 브라이도터 등 4명. · 옮긴이:한국여성NOG위원회 여성과 환경분과 · 출판사:나라사랑.

□ Resource Material Collec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 ARRC  
· 주요내용:Teaching Manuals/Country Reports/Conference Proceedings/Journals and Newsletters/Other Useful References/Audio-Visual Materials 등. 44쪽.

□ Human Rights Education(HRE)- A Survey of Ongoing Initiatives in the Asia-Pacific Region-ARRC  
· 주요내용:HRE for Youth/HRE in an Armed Conflict Situation/Redefining the Scope for HRE in India 등. 112쪽.

### <자료 요약> 북경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주요내용

□ 여성의 교육 및 훈련  
제4차 북경대회에서 채택된 교육분야의 행동강령안은 '기회균등의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여성교육문제의 핵심은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교육기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전략적 목표로 교육기회 균등, 여성문맹 퇴치, 성차별 없는 교육과 훈련의 개발, 여성을 위한 평생교육의 촉진 등이 전략목표로 세워졌다.

□ 여성과 보건의  
여성도 최적의 건강상태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이는 남성과 평등해야 한다. 여성의 건강은 생물학적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문화적 관습에 의한 남녀간 성차에 의한 불평등이 장애가 되고 있다.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노년기 등 여성 전생애를 통해 건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사회·경제 등 다각도로 남성과 대등한 평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의 낮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여성폭력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여성폭력의 예방과 철폐를 위한 통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책임이 특히 강조되는데 우선 여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경찰, 사법부, 의료인 등)의 의식을 바꾸는 교육 실시, 피해자 지원예산 책정을 들 수 있다. 또한 남성의 연대를 가져오는 방안이 중요하게 제기되었으며 가해자를 교육시

· 자원, 고용, 시장, 무역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접근 촉진  
· 저소득 여성에게 사업 편의, 훈련 및 시장, 정보, 기술의 접근 제공  
· 직업분리 및 모든 형태의 고용차별 철폐

□ 여성과 미디어  
· 미디어 및 신통신 기술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와 접근 증진  
· 미디어의 여성에 대한 균형된 이미지 증진

□ 여성과 환경  
·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  
·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및 사업에 남녀평등적 관점 통합  
· 개발과 환경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구의 강화 또는 설치

□ 여자 어린이  
·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 여아에 대한 부정적인 문화와 관습 타파  
· 교육·훈련에 있어서 여아 차별 철폐  
· 보건·영양상 여아 차별철폐  
· 아동근로의 경제적 착취 근절 및 근로소년 보호  
· 여아에 대한 폭력 근절  
· 사회·경제·정치적 활동 참여에 대한 여아의 인식증대  
· 여아의 지위향상을 위한 가정의 역할 강화

□ 여성과 무력갈등  
분쟁해결과 의사결정, 평화 리더쉽,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여성참여를 증진시키고 보장할 것이 전략목표로 세워졌다. 무력갈등이나 다른 분쟁을 해결할 때 성차별적 견해를 폐지하며 전쟁범죄재판소, 유엔국제법정,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재판관등을 배정할 때 남녀 수를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분쟁이 끝난 후 국가의 재건과 화해하는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군비삭감과 군사력을 억제해야 한다. 비폭력적 분쟁해결 방법을 증진시키고 전쟁중 인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정부와 국제기구와 지역기구에 대한 행동강령 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으로 다음의 강령이 채택되었다. "무력갈등속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모든 행위를 방지하는 국제인권기구와 인도주의적 국제법이 정한 규정을 존중하고 강화해야 한다. 전쟁중에 범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모든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것은 강법 제정, 정책실행 책임자(경찰, 사법부, 의료인 등)의 의식을 바꾸는 교육 실시, 피해자 지원예산 책정을 들 수 있다.

□ 여성과 경제  
· 자원, 고용, 시장, 무역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접근 촉진  
· 저소득 여성에게 사업 편의, 훈련 및 시장, 정보, 기술의 접근 제공  
· 직업분리 및 모든 형태의 고용차별 철폐

□ 여성과 미디어  
· 미디어 및 신통신 기술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와 접근 증진  
· 미디어의 여성에 대한 균형된 이미지 증진

□ 여성과 환경  
·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  
·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및 사업에 남녀평등적 관점 통합  
· 개발과 환경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구의 강화 또는 설치

□ 여자 어린이  
·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 여아에 대한 부정적인 문화와 관습 타파  
· 교육·훈련에 있어서 여아 차별 철폐  
· 보건·영양상 여아 차별철폐  
· 아동근로의 경제적 착취 근절 및 근로소년 보호  
· 여아에 대한 폭력 근절  
· 사회·경제·정치적 활동 참여에 대한 여아의 인식증대  
· 여아의 지위향상을 위한 가정의 역할 강화

□ 여성과 무력갈등  
분쟁해결과 의사결정, 평화 리더쉽,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여성참여를 증진시키고 보장할 것이 전략목표로 세워졌다. 무력갈등이나 다른 분쟁을 해결할 때 성차별적 견해를 폐지하며 전쟁범죄재판소, 유엔국제법정,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재판관등을 배정할 때 남녀 수를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분쟁이 끝난 후 국가의 재건과 화해하는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군비삭감과 군사력을 억제해야 한다. 비폭력적 분쟁해결 방법을 증진시키고 전쟁중 인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정부와 국제기구와 지역기구에 대한 행동강령 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으로 다음의 강령이 채택되었다. "무력갈등속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모든 행위를 방지하는 국제인권기구와 인도주의적 국제법이 정한 규정을 존중하고 강화해야 한다. 전쟁중에 범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모든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것은 강법 제정, 정책실행 책임자(경찰, 사법부, 의료인 등)의 의식을 바꾸는 교육 실시, 피해자 지원예산 책정을 들 수 있다.

□ 여성과 경제  
· 자원, 고용, 시장, 무역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접근 촉진  
· 저소득 여성에게 사업 편의, 훈련 및 시장, 정보, 기술의 접근 제공  
· 직업분리 및 모든 형태의 고용차별 철폐

□ 여성과 미디어  
· 미디어 및 신통신 기술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와 접근 증진  
· 미디어의 여성에 대한 균형된 이미지 증진

### 5.18 국회 위중 수사 촉구 전국연합 성명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은 6일 민주당의 5.18 위중수사반대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성명에서 "민주당은 5.18 국회위중자들이 국회법을 어기고 위증을 한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도 수사를 막는 것은 스스로가 범죄집단을 비호하는 세력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이하 민변)의 5.18 국회위중관련자 검찰 고발에 대해 "국회중언감정법에 따라 위증에 대한 고발유무의 판단은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이 할 수 있다"며 "제3자의 고발이나 검찰의 자체결정으로는 위중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전해투, 국방부 앞 시위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위원장 장영길) 회원 대우정밀노동자 등 50여명은 6일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병무청 앞에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병역특례해고노동자들은 과거 군사정권하의 강압적인 노동통제정책에 의해 희생당한 피해자"라며 정부는 이들의 수배를 해제, 직장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500호 발간!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 인간중심의 도시화와 주거권 확립 노력 13개 단체, 세계주거권회의 민간위원회 결성

96년 6월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주거권회의(HABITAT II)'를 준비하기 위한 민간 단체가 창립되었다. 「제2차 세계주거권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세계주거권회의 민간위원회)는 9일 홍사단 강당에서 토론회 및 창립대회를 가졌다.

세계주거권회의의 민간위원회는 대회까지의 사업계획으로 △세계주거권회의 설명회 및 간담회 △한국의 도시문제와 주거권 심포지움 △제3차 준비위원회(96년 2월 미국 뉴욕) 참가 △대규모 국민대회 및 주거권 캠페인(96년 4.5월)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세계주거권회의의 민간위원회에는 「전국도시민민협의회」(전민협)「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등 13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공동대표로는 권태준, 김진홍, 김혜경씨가 선임되었고, 상임집행위원장은 박종렬 전민협 지도위원이 맡았다.

참석자들은 창립선언문에서 "50여년 동안 파행적으로 진행되어온 도시화의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 '인간중심의 도시화'라는 새로운

개발전략'의 수립과 '주거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 정부에 대해 세계주거권회의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공개할 것과 세계주거권회의의 민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정책의 변화를 꾀할 것을 요구했다.

제2차 세계주거권회의는 '인간중심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질을 향상시키고, 특히 빈민의 생활조건과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과 '모든 사람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도시화되는 세계 속에서 지속가능한 인간정주(定住)를 위한 지구적 차원의 논의와 행동강령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열린다'(**<인권하루소식> 9월13일자 1면 참조**).

한편, 결성대회 직전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하성규 교수(한국도시연구소장)는 "우리나라 헌법은 주거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소극적인 권리가 아닌 적극적인 권리로서의 주거권의 헌법에 명시할 것,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철거의 중단, 주거의 최저기준의 관공정실정 등을 위한 노

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군견 주민 물어 미군처벌 성명 잇따라

폭행미군의 처벌을 요구하는 주민에게 미군이 군견을 풀어 주민들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두천 보산동 상가번영회」 회원 전금배씨등 3명은 지난 5일 밤 11시 미2사단 주변에서 9일 있을 집회와 관련된 현수막을 설치하던 중 스타크스 마벨(일명, 22세)등 미군병사 4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전씨등에 따르면 폭행미군이 부대안으로 도주해 정문에서 있던 10여명의 미헌병들에게 범인 체포를 요구하자 헌병들은 데리고 있던 군견을 풀어 전씨등을 물리고 명령했다고 한다. 갑자기 달려든 군견들에 의해 전씨등은 손과 허벅지를 물리고 그 중 한명은 성기를 물리는 큰 상처를 입었다.

「동두천민주시민회」는 9일 성명을 발표, "이젠 강간·폭행도 모자라 전쟁을 대비해 훈련받은 군견까지 풀어 물게 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며 △미2사단급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군견을 풀어 물게 한 미헌병의 처벌 △피해자보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

복)도 "한국을 속국으로 생각하는 미국인들의 대한국관 때문"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자주적인 대미통상외교와 자주국방태세의 확립, 평등한 관계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박교육부장관 발언 항의 5.18서명교수 모임

「5.18내란 주동자 구속기소 및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전국대학 서명교수 모임」(공동회장 김상곤 등 11인, 5.18서명교수모임)은 9일 박영식 교육부 장관의 발언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박장관이 전국총학장회의에서 한 연설내용 중 5.18관련 대학교수서명에 대한 발언은 "군사독재 시대나 행해졌던 반역사적, 반시대적"이라며 진위를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박장관은 지난 7일에 있던 이 회의에서 5.18서명에 대해 "최근 일부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진 광주 5.18서명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쳐 급기야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결의하게 되었다"고 말한바 있다. 또 동맹휴업에 대해 "일부 교수들이 자진휴강을 통해 학생들을 유도·동조했다"며 "동맹휴업 등 학사질서를 문란케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5.18서명교수모임 소속 교수들은 오는 10일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면담을 갖고 5.18진상규명과 특별법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인권하루소식> 500호 특집 기획좌담 '한국 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를 오늘부터 실을 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음호부터 실게 되어 사과드립니다. 이번 좌담에는 김형태 변호사, 조홍식 교수, 권노현 교수등이 참가, 진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 주/간/인/권/호/름

(95년10월2일부터 8일까지)

**<2일>(월)**  
서울지검 공안1부, 국회 5공청문회 위증 전두환씨등 7명 수사방침/프랑스, 세계 비난어른 불구 2차핵실험 강행/원대중공업, 해고자 10명 복직/영광주민들, 원전사고 항의, 가동중지등 시위 확산/노동부, 근로자파견제 정기국회 통과 방침/정부 행정쇄신위원회, 청소년 야간통행금지 검토

**<3일>(화)**  
미 대통령 특별자문위원회, 냉전기간중 방사능 실험 피해자 30명에게 보상 권고/안기부, 방북 귀환 한총련 정민주씨등 2명 국보법으로 구속/경찰, 고려대에 난입, 건물 유리창 파손, 학생 폭행/법률소비자연맹, 법대생 법정 모니터 결과 재판시간 1건당 평균 10분 정도라고 밝혀

**<4일>(수)**  
중앙경찰서, 번3동 철거지역에서 여대생에 수갑채우고 폭행, 공포탄 4발 난사/정부, 여성 출산·생리휴가 무급 추진키로/김수환 추기경, 5.18 진상규명 촉구 강령/미국 로스앤젤리스 형사법원, 오 제이 심슨 무죄 석방/박용길 장로, '국보법으로는 재판 받을 수 없다'며 재판거부/경북 봉화군청 회의실에서 도청기 발전/대한변협, 5.18 특별법 서명작업 돌입

**<5일>(목)**  
세계화추진위, 여성공무원 할당제 도입 방침 마련/귀향 외국노동자 체불임금·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 정부에 산재 당한 외국인 노동자 88명 보상요구/경기지역 교사 1천3백67명,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법무부, 94년 시국사범 93년에 3배 증가한 9백3명이라고 밝혀

**<6일>(금)**  
청와대, 국립법과대학원 백지화 검토/검찰, 5.18 위증 친고죄 규정, 수사암기/독일정부, 나치희생 생존 유대인에 1천4백60억원 보상/노동부, 국감자료에서 7개 대형조선소 안전시설 불량 6백12건 적발/유덕상 한국통신 노조 위원장, 집행유예 석방/미군폭행 항의 등등천 상인 3명, 미군건에 물려 부상/일본정부, 미군 범행 범인 즉각 인도토록 하는 미군지위협정 부속문서 미국과 교환키로

**<7일>(토)**  
과학기술처, 굴업도 활성단층 징후 발견 핵폐기장 재검토 키로/프랑스, 파리로에서 다시 폭탄테러 발생/인도네시아 2천명, 일본 위안부 피해 신고/인천시의회, 5.18 기소 촉구 결의안 임시회의에 상정/

**<8일>(일)**  
경기 고양군 금정굴 유해 발굴 작업 마무리, 발굴유골 1백50명 넘을 듯

**<해설>**  
지난주에는 경찰의 원시적 폭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집회중인 대학 구내에 난입,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했다. 또, 한 철거지역에서는 대학생의 옷을 벗기고 수갑을 채워 폭행을 가하더니 총기마저 난사했다. 경찰의 폭력성이 갈수록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절로 나오고 있다. 경찰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느 국민이 자신이 위협에 처했을 때 경찰을 찾을 것인가. 아마도 경찰청장이 대통령의 후배요, 그 청장이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번 달에도 5.18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경찰의 폭력적 진압이 이어진다면 경찰은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신자 대상 인권교육 천주교인권위, 총회 결의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천주교인권위)는 7.8일 제천 배론성지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4년 정기총회를 열고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조작간첩 진상규명 사업의 지속적인 전개 △96년 봄·가을 인권교육강좌 실시 △계소자 인권개선을 위한 기초사업 △후원회 조직 등을 결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효성여대 김중권 교수(정치학과)를 초청, 「평신도 운동과 5.18책임자 처벌」이란 주제의 강연도 들었다. 한편, 천주교인권위는 오는 24일 오후7시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조작간첩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를 갖는다.

## 박용길 장로 석방 요구 엠네스티, 긴급행동 돌입

「국제엠네스티」(엠네스티)는 6일, 심장질환을 앓는 박용길 장로를 무조건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행동에 돌입했다. 엠네스티는 "박장로가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며 구치소에서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엠네스티는 회원들에게 박장로의 무조건적인 석방과 즉각적인 치료를 보장할 것을 김대통령, 안우만 법무부 장관, 서

울 구치소장에게 항의할 것을 요청했다.

## 생존권 위협 단호대처 서철연, 창립기념대회

「서울지역지역철거민연합」(회장 가재웅, 서철연) 회원 1천3백명은 7일 서울 종로공원에서 창립 1주년 기념대회를 열고, 철거민의 생존권 위협에 단호히 대처할 것등을 결의했다. "김영삼 정권이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철거민의 정당한 투쟁을 집단이거주의로 매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5.6공 시절보다 더욱 잔악한 철거를 단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영구임대주택의 사수등을 결의하고, 명동성당까지 거리시위를 벌였다.

참석자 중 1백여명은 오후7시경 중앙경찰서를 항의 방문, 4일 번3동 지역에서 발생한 총기난사에 대한 경찰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서측과 9일 오후5시 서장과의 면담 약속하고 자진해산했다.

## 전철연, 5.18 투쟁 천명

「전국철거민연합」(의장 이태규)은 7일 5.18 불기소 처분에 대한 성명을 발표, 5.18 학살자 처벌 투쟁의 화원 상태 무조소에서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엠네스티는 회원들에게 박장로의 무조건적인 석방과 즉각적인 치료를 보장할 것을 김대통령, 안우만 법무부 장관, 서

## 주요 공판 안내

- 11일(수) 박창희, 국보법위반, 4시, 서울형사지법 21부, 311호
- 12일(목) 골티나프랭크(충무로폭행미군), 폭력법위반, 2시, 서울형사지법 7단독, 421호
- 13일(금) 장기수 손배소송, 10시, 서울민사지법 562호
- 13일(금) 최계천의 1명, 국보법위반, 4시, 서울형사지법 23부, 311호
- 13일(금) 안호상 외 1명, 남북교류협력법위반, 2시, 서울형사지법 10부, 318호
- 13일(금) 이부영, 국보법위반, 10시30분, 서울형사지법 3부, 319호